

부 담 금 평 가

2018. 12.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

<목 차>

제1부 서 론	1
제1장 부담금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장 부담금 평가제도의 운영현황	3
제3장 2018년도 부담금 평가의 기본방향	41
제2부 부담금평가 결과	45
제1장 존치평가 결과	45
제2장 개별항목별 평가결과	53
제3부 부담금별 평가 내용	64
제1장 기획재정부	64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64
2. 외환건전성 부담금	75
제2장 교육부	84
1. 학교용지부담금	84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100
2.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방송통신위원회 공동)	113
제4장 외교부	127
1. 국제교류기여금	127
2.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139
제5장 행정안전부	151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 분담금	151
제6장 농림축산식품부	162
1. 농지보전부담금	162

2.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FTA 특별법)	173
3. 양곡수입이익금(소비자 시판용 수입 미곡)	182
3-1.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191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부금	201
5. 대체초지조성비	210
6. 축산물수입이익금	218
7.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26
제7장 보건복지부	235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35
제8장 고용노동부	245
1.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 부담금	245
2. 장애인 고용부담금	258
제9장 중소벤처기업부	275
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275
제10장 산림청	289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289
2. 임산물수입이익금	298
제11장 원자력안전위원회	306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306
제1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319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319

제1부 서론

제1장 부담금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에 해당
 - 특정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점에서 일반 조세와 구분됨
 - 부담금은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의 징수목적 간의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

- 부담금의 부담주체인 국민과 기업의 일각에서는 부담금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해당 부처의 부담금 선호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부담금 수입의 대부분은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별도로 관리되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비해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운용에 있어 상대적으로 재량성이 높아 행정기관들이 부담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2017년 말 기준, 전체 부담금의 개수는 18개 부처의 89개이며, 부담금 징수실적은 총 20조 1,5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함
 - 2013년 96개, 2014년 95개, 2015년 94개, 2016년 90개, 2017년 89개로 부담금의 개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일부 부담금은 재정으로 편입되거나 과징금으로 전환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음
 - 2017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약 20.2조원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하였고, 2007년 14.4조원과 비교할 때 약 1.4배 증가, GDP 대비 1%를 상회하는 수준

- 지난 10년간의 국세 및 지방세수입 항목 증가추세와 비교해 볼 때 부담금 증가 추세는 빠르지 않은 편
 - 같은 기간 중앙정부예산 규모는 250조원 규모에서 400조원으로 약 1.6배 증가,

국세는 147.3조원에서 220조원으로 약 1.5배, 지방세 43조원에서 71조원으로 1.6배 증가

- 한편, 선진국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과 국가부채 수준임을 감안할 때 해외수입의 한 항목인 부담금의 규모 확대 속도를 비교적 낮게 유지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재정운용이 매우 견고함을 의미

□ 변화하는 재정수요와 규제수요를 반영하여 비효율적인 부담금 운용을 개선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의 구축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부담금 부과는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점, 과도한 규제에 의한 공익사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 존재
- 한편, 부담금은 경제·사회 및 환경 부담행위의 원인자와 수익자에게 지불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조세일반 정책이 하지 못하는 행위자의 교정과 행위책임성을 소명토록 하는 중요한 기능 수행
- 따라서 부담금 부과의 단점은 최소화하고 부과의 의의는 최대화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선안 마련 작업 필요

□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어온 각종 부담금의 무분별한 신·증설을 억제하고, 부과 및 징수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02년부터 「부담금 관리기본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주기적으로 부담금 평가를 실시함

제2장 부담금 평가제도의 운영현황

1. 부담금 평가의 법적근거

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주요내용

-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200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되어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담금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법 2조에서는 부담금의 정의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규정
 - 2010년 3월 개정을 통하여 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관리대상 부담금에서 제외
- 동법 3조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부담금을 별표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으로 한정하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부담금의 신설을 위해서는 소관개별 법률을 개정함과 아울러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인 동 기본법 별표의 개정을 병행케 함으로써 부담금의 신설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

1) 부담금 신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리고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그 타당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사를 의무화

□ 부담금의 신설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

1. 부담금을 신설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부담금 부과요건 등

□ 부담금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 부과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을 명시

-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3) 부담금 부과원칙

□ 부담금은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부과대상에 대하여 이중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은 금지

□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릴 의무

1. 부담금 납부의무자
2. 부담금 부과에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3. 부담금의 감면 요건 및 방법

4. 부담금의 용도
5. 제2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6.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7. 의견제출 기한
8.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

4) 부담금 관련 권리보장 및 구제절차 강화

- ☐ 기본법에서는 부담금의 부과, 감면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납부자의 권리보장을 강화
- ☐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해당 부담금 부과목적의 정책적 중요도, 납부의무 위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규정
 -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

5)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 제출

- ☐ 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 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부담금운용계획서를 받으면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
 -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있으며 그 규모가 연간 20조원을

- 상회하는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사후적인 결산보고서인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만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전적인 계획서의 제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담금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음
- 이에 정부가 다음 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부과의 적정수준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¹⁾

6) 부담금운용의 사후관리

-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러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기초로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의 국회 제출 시기는 2008년까지는 정기국회 개회일 전까지였으나 부담금에 대한 재정통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를 결산의 제출시기와 동일하게 매년 5월 31일로 개정
-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국회제출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상황을 파악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부의 재정운영 상황을 감시·통제하려는 취지

7) 부담금운용의 평가

-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 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 부담금운용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
- 평가 주기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매 3년마다 전체 부담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1) 부담금관리 기본법(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

- 졌는데 2003년, 2006년, 2009년 등 세 번의 전수 평가를 수행
- 2010년부터는 매년 약 1/3을 대상으로 순환 평가를 실시하도록 변경

나. 부담금 평가제도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8조 1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 부과실태, 사용내용의 건전성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규정
 -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의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않았거나 부담금 준치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
 - 위의 폐지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 받은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 그동안 여러 차례의 평가결과에 따라 존치실익이 미흡한 부담금의 폐지, 유사 부담금 통합, 부과요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고, 관련되는 제도개선이나 법령정비가 추진
- 부담금운용평가단의 구성과 운영
 - 부담금운용실태의 점검 및 평가를 하거나 부담금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평가단원의 자격
 - 재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및 조세·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 그 밖에 재정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최근 3개년 평가결과

가. 2015년도 부담금 평가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기획재정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부과 타당성 - 일정 수준의 기금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향후 수익률 제고 시 부담금 부과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 2002~2008년까지 적립된 기금 수입을 현재도 사용 중이며 2014년에는 출연실적이 없어 출연에 따른 사용실적은 없지만 2015년부터 기금에 다시 출연될 예정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타당성 - 향후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한 위기대응재원으로 활용되는 공익적 정책목적을 가지고 운용되고 있어 적절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타당성 -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주택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 -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하여 부담금은 존치되어야 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부담금 취지에 맞게 적정한 기준으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음 - 다만, 향후 부과 요율을 상향 조정할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 등 관련된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미래 창조 과학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비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 원자력은 국가의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술분야로, 원자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에 대한 공공지출은 정당성이 있음 - 발전용 원자로를 운용하는 발전사업자는 원자력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직접적 수요자이므로, 원자력분야 공공연구개발 재원을 발전용원자로운용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하는 본 부담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현행 부과요율인 1.2원/kWh는 1997년 정해진 뒤 오랜 기간 동안 변동이 없음 → 연구개발사업의 규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중장기적으로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부과 타당성 - 방송·통신 융합 경향과 해당 분야 기술발전 추이,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와 잠재력을 고려할 때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지원에 공공재원을 이용하는 것은 타당함 - 방송통신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기금화를 통해 방송통신분야의 진흥과 투자로 연결되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부과대상의 유형에 따라 산출식에 사용되는 산정기준이(방송광고 또는 방송서비스)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등으로 다양한데,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징수율이 필요에 따라 거의 매년 변경되어 미래부·방통위 고시를 통해 공표되어 왔는데, 중장기적으로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부과 타당성 - 공적 영역의 국제교류사업 재원은 일반조세에서 마련하고 민간영역의 국제교류사업은 일반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p>중장기적 방안 마련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발급자만 국제교류에 기여해야 하고 그 편익을 누리는 것은 아닌 측면도 검토가 요구됨
		<p>사용용도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사업은 다른 정부기관의 예산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다른 정부예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음
		<p>부과기준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p>부과 타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ODA재원을 보완하면서 개도국의 질병 퇴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적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한국의 상대적으로 적은 ODA규모를 보완하는 유용한 역할도 담당하고 있음
		<p>사용용도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부담금	<p>부과 타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 - 부담금 부과 합리적 관련성 및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의 검토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p><합리적 관련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함’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부과 대상의 합리적 관련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p><평등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대상, 부과 요율, 부담금 면제 및 감경제도 등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고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제도적 정비가 필요 - 특히 최근 5년간 부과 및 징수 실적이 매년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4년에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북도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므로 부담금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농림축산 식품부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자치단체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타당성 - 부과 목적이 농지면적 감소의 원인이 되는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농산물수입이익금	부과 타당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한-중, 한-베트남 FTA 타결 등으로 양허품목 증가에 따라 부담금 징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본 부담금의 징수 규모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음 부담금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양곡수입이익금 (두류)	부과 타당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양곡수입이익금 (쌀)	부과기준의 적절성 - 한-중, 한-베트남 FTA 타결 등으로 양허품목 증가에 따라 부담금 징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본 부담금의 징수 규모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음 부담금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부과 타당성 -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에 납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부과 타당성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인삼 또는 인삼을 포함한 특용작물은 대부분의 다른 농산물과 달리 차별적인 특성이 높기에 본 부담금이 인삼 (또는 특용작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추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 한-중, 한-베트남 FTA 타결 등으로 양허품목 증가에 따라 부담금 징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본 부담금의 징수 규모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음 부담금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체초지조성비	부과 타당성 - 초지면적 감소의 원인이 되는 초지전용에 대응하기 위해 초지의 안정적인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사용용도의 적절성 - 부담금이 납입되는 축산발전기금의 사용용도가 대체초지조성 이외의 축산발전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부담금 목적의 적합성이 미흡한 점이 발견됨 - 따라서, 본 부담금에 대한 사용용도 적합성을 대폭적으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축산물수입이익금	부과 타당성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고,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한-중, 한-베트남 FTA 타결 등으로 양허품목 증가에 따라 부담금 징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본 부담금의 징수 규모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음 부담금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농산물수익이익금	부과 타당성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납입하여 농어업의 경쟁력제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한-중, 한-베트남 FTA 타결 등으로 양허품목 증가에 따라 부담금 징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본 부담금의 징수 규모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음 부담금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 - 장기적으로는 담배생산자 및 판매자의 부담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 건강증진 사업의 전부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으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회계사업과 기금사업의 적절 분담구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담금 사용용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금 부과 규정은 10%로 국세기본법 상의 가산율이나 시장이자율이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채당금”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 목적이므로 부담금 부과가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 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부과 타당성이 있음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산림청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다만, 2014년 기금 지출내역에서 사업비 중 장애인고용장려금이 1,417억원으로 전체 사업비(2,085억원)의 약 70%로 그 비중이 매우 높아 향후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등의 사업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의 부과 목적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여 조림, 숲가꾸기 등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임산물수입이익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산지전용이 감소하다가 2014년에 15% 정도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추세가 향후 지속될 경우에는 산지전용 제한 필요성과 부담금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 산정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할 가능성은 있음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특회계로 납입하여 산림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한-베트남 FTA 타결 등으로 양허품목 증가에 따라 부담금 징수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향후 본 부담금의 징수 규모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다음 부담금 평가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중소기업청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	부과 타당성 - 특정 공익사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 부분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 원자력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원자력 안전규제를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원자력 안전규제로서 원자로 등 원자력관련시설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대한 심·검사에 드는 비용을 공공재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며,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가 부담금의 형태로 해당 공공재원 조성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 2014년까지의 실적만으로는 당 부담금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을지 의문시되나, 2015년 들어 최초로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변화가 시작된 것을 감안할 때 2015년 이후의 부담금 운영 실태를 보고 존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사용 실적이 없어 검토 해당 없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 부과 및 사용 실적이 없어 검토 해당 없음

나. 2016년도 부담금 평가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국토 교통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적 목적 위한 부담금으로 부담금 본연의 목적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 및 집행의 불균형으로 인한 과도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잉여금 발생원인과 사용용도의 합목적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녹색도시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15년 말까지 징수액 총 2조 1,704억 중 개발제한구역 보전을 위해 집행된 금액은 1조 5,390억원으로 무려 5,683억원의 잉여금 발생 • 최근 몇 년간 주민지원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토지매입비 비중은 감소. 사용의 적정성 파악을 위해 이러한 집행액 비중의 변화에 대한 원인 파악 필요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평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가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물 건축허가자에 대한 시설물별 부과율 기준은 완화된 반면, 지가차액 발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복구의무 면제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과율은 상향하고 있음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내역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의 공공성을 가짐
	개발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자에 부과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부담금으로 부과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발전 특별회계에 귀속되어 지역사회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활용, 지역발전에 기여함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료시점시가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아 관련 행정쟁송 및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종료시점 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지가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시스템 도입 필요, 지가 산정 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발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중 하나인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이후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도 행정소송 제기 없이 개발비용에 반영하여 환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원인자 부담 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용도에 맞게 지역현안사업에 사용되고 있음 - 시·도지사는 부담금에 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토록(법 제17조의 3)하고 있어 사용처가 사전 검증이 가능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 100% 또는 50% 면제하고 있으나 민간의 부담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검토가 필요함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수익자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부과목적이 공공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충당하는 것으로 다목적댐 하류에서 전력사업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므로 납부실적이 없어도 존치 필요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의 규정이 미비한데 장기적으로 배분규정은 필요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감면·면제 조항이 없으나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음
	원인자부담금 (도로법)	부과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도로공사비용에 사용됨
		부과기준의 적절성 • 부과기준은 적절하지만 무보험차량에 의한 징수실적 미흡에 대한 대책 필요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및 추가설치 비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사용용도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설치보조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 부담금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문제의 소지가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 보완필요 - 비용의 1/3로 부담률을 정한 것에 대한 근거 미흡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동 사업의 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담률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적도 없음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혼잡통행료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관련규정 없음
		부과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되어 주차계획, 교통정보센터, 교통단속, 도시교통 관리, 교통개선시설비, 교통방송 운영 등에 사용되고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적정 • 혼잡통행료 면제·감면 대상 차량 정비 필요 - '96년 혼잡통행료 도입 당시에는 징수와 면제차량 비율이 각각 68%, 32%였으나 현재는 징수 37%, 면제 63%임. 이러한 현황은 징수 대상인 승용차 통행이 감소하고 버스통행량이 증가한 영향에 기인하지만, 공무용·저공해·요일제 등 타 시책과 맞물려 도입된 면제·감면 차종의 경우에는 DB자료 갱신, 요일제 위반차량 조회 등을 통해 본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면제·감면 대상차종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과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타당 - 도시교통정비구역 내 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 실행의 재원으로 활용
		부과기준의 적절성 • 개선필요 - 유발계수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부과 목적인 교통유발 억제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유발계수의 적용을 도심과 부도심, 도시외곽 등 시설물의 입지에 따른 차등 적용 필요 - 교통유발계수의 분류가 도심, 부도심, 외곽지역등 으로 더욱 세분화 되고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에 의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음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적정
	시설부담금 (산업입지)	부과 타당성 • 타당 - 개발토지 수분양자에 부과하는 시설부담금은 분양가반영으로 인한 중복부담으로 폐지 - 준치시설물의 소유자는 의사에 관계없이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하므로 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산업단지 내 도로·공원·녹지 등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등 특정 공익사업에 사용
		부과기준의 적절성 • 부과요건은 타당 • 부담요율은 ‘(공공시설의설치비용)/(분양총면적)×소유부지면적’으로 정하고 있음 - 택지개발촉진법 상의 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도가중치×부담률(20%)×지역감면율(50%)’을 통해 산정되고 있어 본 부담금의 산정방식의 개정 검토 필요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적정
	과밀부담금	부과 타당성 • 현재까지는 타당 •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의 큰 틀 하에서 과밀부담금을 과밀억제권역인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감면대상의 지속적 확대 및 부과기준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 개선필요 - 도시개발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축진사업계정)에 사용되는 서울시 귀속분의 경우 사용 목적이 부담금 부과와 합목적성(특별한 공익성 및 밀접한 관련성 등)을 충족시키는지의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특히 재정비축진사업 보조 및 용자 지원과 재정비축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등은 서울시의 과밀 및 혼잡 억제라는 등 부담금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조세를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필요 • 기초공제면적의 적정화 필요 • 1994년 동법 시행 이후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은 여전히 22년 전과 동일하게 적용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타당성 제시 필요 - 1994년 수도권정비법 제정 이후 2009년 한차례 감면 대상 시설이 확대되었으나 감면대상 시설의 선정 이유 등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감면의 정당성이 모호한 상황 - 수도 및 공공기관 이전 등 지속적인 서울시 및 수도권의 상황변화를 고려할 때 새롭게 감면, 면제되어야 할 시설 여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 용도별 건축물의 감면 면적의 적정성 등을 수도권정비계획과 더불어 주기적으로(예: 5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시설부담금 (물류시설)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 - 유사부담금들의 경우 존치시설의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물류단지의 시설부담금의 경우 분양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분양자들의 경우 분양가를 납부하는 절차가 있는바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이를 분양가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용도도 타당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시행령 제34조 제5항 단서에 감면 및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 감면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타당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자동차사고피해 지원 사업 부담금	부과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부담금의 지원범위 및 대상에 관해서는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시행령 제35조의2)되어 있고, 부담금관리자는 납부 받은 부담금을 전액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다만, 부담금 부담자인 책임보험가입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 다만, 납부자의 범위가 광범하여 관련 공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 부담금의 수입이 납부자의 집단적 효용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해당 없음
	소음부담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부담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토나 감사절차를 통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통제절차를 구축함으로써 부담금 사용의 신뢰성과 부과에 당위성을 보다 제고할 필요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 개선필요 - 항공사로 하여금 저소음 항공기 도입·운영에 대한 금전적 인센티브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등급 구분을 새롭게 조정 필요 - 부과요율이 착륙료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착륙료의 산출단위는 최대이륙중량을 근거로 하여 공항의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동일할 기종이라도 공항별로 착륙료의 산출단가가 다르게 산출되어 동일한 소음이 발생하여도 소음부담금은 다르게 산출됨. 또한 동일한 소음이 발생하여도 국제선과 국내선과도 부담금의 차이가 발생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해당 없음
		부과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개선필요 - 일반회계로 귀속되는 30%의 사용용도를 파악할 수 없음 - 징수된 부담금이 부과목적인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및 이용, 보전 및 관리에 사용되기 어려운 상황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특이사항 없음
	재건축부담금	부과 타당성 • 조건부 존치 - 부과 타당성 미흡하나 현재 유보상태이므로 2017년 유보 종료 후 시장상황 고려, 폐지 검토 필요 - 양도소득세와 중복,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 사용용도 적합성 미흡
		사용용도의 적절성 • 미흡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분의 경우 사용 명세에 대한 상세 검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절성 • 미흡 - 시장상황에 따른 변동가능성이 큼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 적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수익자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정 • 징수된 부담금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배분 - 광역지자체에 배분한 예산이 광역지자체가 부담금이 징수된 기초지자체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아니라면 기초지자체에 100%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 징수율 저조 - 부과대상의 개선, 정액부담금(200㎡이하 건축행위에 대한 부담금) 도입 필요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필요 - 부담금과 기부채납 요구 관행이 중복될 수 있으며, 지방세와 중복 소지 존재
	시설부담금 (택지)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택지개발 시에 존치되는 시설물의 새롭게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무임승차(Free Riding)를 차단하고 공정하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존치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으로 되어 있어 타당하나, 징수와 사용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시설 설치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정기준의 개선 필요 - 부담금의 산정에 있어서 ‘수용’을 원하지 않는 토지(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현재 향유하는 공공시설 용량(수준)과 택지개발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의 용량의 차이의 경제적 가치를 도출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임 - 부담률 20%의 근거 또한 명확하지 않음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해양 수산부	수산물수입이익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수산물 수입이익금제도를 부담금제도를 통해 운영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그러나 부담금과 보다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 사용되어야 함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지 않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요율은 적정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없음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수산자원 조성사업으로부터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해당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부담금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필요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산자원조성금 징수실적과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공개가 필요 -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자원조성금 수입 등을 사용하여 수행하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추진체계 개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필요 - 수산업 환경변화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행위별 부과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할 필요 있음 -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면적당 단가의 정기적인 검토 및 조정이 필요 - 공유수면 준설, 골재 채취,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광물 채광 행위 등에 대해서는 건당 소정의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해당 금액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방제분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담금의 지출내역에 대해서 개별적인 검토나 감사절차를 통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통제절차를 구축함으로써 부담금 사용의 신뢰성과 부과의 당위성 제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항회수는 해양기름유출사고의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10회의 운항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여 입항하는 경우와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의 경우에 100% 감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의 비상용 기름이나 수리목적으로 입항하는 경우에 대하여 감면의 규정을 두고 있음 - 감면규정은 해양환경오염 억제라는 특별한 공적과제의 취지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감면규정은 부담금 기본원칙에 맞도록 개선 필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담금 재원이 부과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개연성 있으므로 수산발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한도는 2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부과금 산출방식에 지역별 해양생태환경의 차이와 개발행위별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를 반영하는 등 부과금 산출기준 개선 필요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해양심층수이용 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공익사업인 해양심층수 취수해역의 수질관리 및 산업육성 등에 필요한 재원을 해양심층수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므로 부담금으로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심층수부담금의 사업 목적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 등 해양심층수에 특정하여 사용되고 있지 않음 -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이 작더라도 부담금으로 부과하여 징수하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분명한 용도에 부담금 징수액을 사용해야 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이사항 없음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복원사업의 원인을 현저하게 제공한 행위를 대상으로 해당 원인에 특정한 공익사업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부담금 사업으로서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담금 재원이 부과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될 개연성 있으므로 수산발전기금 내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기준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부과금 산출방식은 폐기물 또는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부과계수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지역별 해양수산 환경의 차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지역별 해양수산 환경의 차이에 따라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이 상이할 수 있음 - 부과금 산출방식에 지역별 해양수산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유출사고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조항은 폐지 필요

부처	부담금명	의견 및 개선사항
	운항관리자비용 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은 특정 집단으로부터 재원이 조달될 수 있는 특수한 공적과제로서, 안전관리 등에 책임이 있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을 가함으로써 원인자부담원칙에도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교부금 지출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나 감사절차는 부담금에 대한 부과대상자들의 신뢰성 및 부담금의 당위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과요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전제되는 관리자의 적정 배치 등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지도, 감독 등 현장관리를 수행하고 있음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없음

다. 2017년도 부담금평가

부처	부담금명	평가의견
금융위원회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사용용도는 적절하나 여유자금 비중(60%)이 높으므로 신용보증사업의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사용용도는 적절하나 여유자금 비중(50%)이 높으므로 보증사업의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한국화재보험 협회출연금	부과의 타당성 -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출연금은 재해예방이라는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재정충당목적의 특별부담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 - 손해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출연금 납부 의무 조항을 폐지한다면 손해보험회사들의 출연금 납부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우려 되고, 그에 따른 화재 예방 활동 등 공익 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존치함 - 향후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화재보험 예방관련 공익사업의 효과성 확대 방안 등 출연금 외의 재정효율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권고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처	부담금명	평가의견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 부과기준이 '97년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으나 현재의 기준은 적정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특별기여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2027년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기금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주택담보 노후연금계정 출연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서민금융 진흥원 출연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2016년 최초 실행된 부담금으로서, 매년 발생하는 출연료의 규모와 총 한도, 약정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효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부처	부담금명	평가의견
중 소 기 업 벤 처 부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출국납부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재정충당 및 유도적 성격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절성 - 본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는 기금의 용자 또는 보조, 투자조합 출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 부담금의 운영원리에 부합한 지출과의 연계성 검토 등 제도개선방안 공론화 필요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 1997년 도입 시 1만원 수준이던 출국납부금이 현재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고 있는바 현재 부과수준인 1만원은 물가수준을 고려하면 도입 당시에 비해 약 40% 정도 실질 감소한 것임
	카지노사업자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카지노사업자 납부금의 부과근거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조 및 제2조이나 카지노사업 납부금의 사용용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못함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부담금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음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부담금의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최근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없음
		부과기준의 적정성 - 산정방식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 있음
	회원제 골프장 시설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성 부족 - 관행상 이어져온 부담금으로 판단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다만 용자지원 사업의 용자이용이 시장대출 금리 혹은 타 정책자금과 비교해보았을 때 너무 낮아(1.88%) 용자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됨
		부과기준의 적정성 - 입장료 가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현 기준은 지나치게 복잡하며 기본적 원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 - 본 부담금이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단계 5~10% 단일률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성 부족 - 부담금의 부담자가 특정 공익사업의 수익자 혹은 원인제공자라고 보기 어렵지만 현재에서 합헌 의견을 제시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영화관입장권 부가금으로 조성되는 영화발전기금은 연간 사용액 대비 연간 조성액이 과다하여 여유자금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하여 부담금 부과율을 인하함이 바람직함
	중독예방 치유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산업 통 상 자 원 부	전기사용자 일시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부담금 형태가 아닌 수수료 등의 형태로 기본공사비를 신청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도서·벽지와 같은 전기 미공급 지역의 신규 사용자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제공하는 것은 국가적인 의무로 볼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수요를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나머지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다만, 향후 중장기 개선과제로 전력요금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부담금을 통한 전력기반사업 전반의 재정적 책임의 연계성 등에 대한 연구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전기요금의 교차보조 문제, 누진제 영향 등의 문제점 발생 - 중장기적으로 전력요금 부과요금 개편시 부담률을 차등적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적 개편이 필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 부과금	부과의 타당성 - 우리나라 석유 수입판매업의 시장구조가 과점시장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판매자들이 시장으로부터 초과이윤을 얻고 있으며 석유에너지 사용이 기후 변화 등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석유 관련 공익사업을 위하여 부담하는 것은 타당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석유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부담금의 법적 사용용도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음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법적 사용용도는 전반적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관련 사업과 투자계정에 관련된 지출임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 부과기준이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음

	광해방지 의무자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영세광산업자의 경영난 등으로 광해방지사업 운영의 문제점이 있어 부담금 이외의 형태로 제도 전환 - 산림복구사업 부담금은 채무이행보증에 필요한 예치금의 형태이므로 관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현행 부담요율 하에서 대부분의 광해방지비용이 에너지 특별회계로 충당되고 있고 징수 절차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으므로 부담금 이외의 형태의 제도적인 전환이 필요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안전관리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 다변화되며 민간기업의 영리활동의 일환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을 부담금의 형태로 재정 당국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 - 요율인상 우려 등의 소비자 보호 목적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존치할 필요가 있음
		사용용도의 적절성 - 부담금 수입이 개별 사업자의 기업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되므로, 부담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려움
		부과기준의 적정성 - 물가변동 및 공사비 원가 변동을 감안하여 부담금 부과기준이 정례적으로 적절히 조정될 필요가 있음

	광물수입판매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성 부족 - 부담금 징수대상자가 부담금으로 추진해야 할 특정 공익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원인제공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용용도의 적절성 -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본 부담금으로 추진해야 할 특정 공익사업의 직접적인 수혜자이거나 원인제공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담금 사용용도의 타당성이 빈약함
		부과기준의 적정성 - 부과기준 미비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미래 사업비 산정시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반영 필요
환경 부	대기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산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17년 현재, 지나치게 복잡한 산식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적극적으로 반영 기대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환특회계내 수질개선관련 지출 포괄적 서술되어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원인자부담금 (수도법)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수질배출부과금 및 통합배출부과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현재 부과계수 개선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선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추후 이에 대한 점검 필요
	생태보전협력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환특회계에 귀속되어 적절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부과기준의 적정성 - 부과 목적을 개발 사업을 억제하고자 하는 유인수단으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면 현재 수준보다 부담금 효율 상향 및 상한액 폐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 있음
	폐기물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환특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됨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재활용부과금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환특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됨

		부과기준의 적절성 - 징수율이 현저하게 낮는데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상수원 수질의 개선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취지의 관점에서 사용용도 적절성 검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정성 -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사업에 지출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고 있어 개선이 필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환경오염 자체가 아닌 경유차 소유에 대해 부과,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이중부과, 점진적 부담금 수입 감소 등으로 부과 타당성 낮음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경유차에 대한 부과요율 중 차량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계수를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오염부담의 기여와 부담을 연계시키는 데에는 한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부과기준의 적정성 - 설치비용의 경우 수도권 50%, 접경지역 및 수도권 외 지역 70%의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됨

	물이용부담금 (금강수계)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상수원(수계) 수질의 개선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취지의 관점에서 사용용도 적절성 검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물이용부담금 (낙동강수계)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상수원(수계) 수질의 개선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취지의 관점에서 사용용도 적절성 검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물이용부담금 (영산강·섬진강 수계)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사용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상수원(수계) 수질의 개선과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재원 마련이라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취지의 관점에서 사용용도 적절성 검토 필요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재활용부과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과의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환특회계에 귀속 사용됨
		부과기준의 적정성 - 적정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되어 사용됨
		부과기준의 적정성 -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율(보수총액의 10만분의 4)을 하향 조정 가능
	회수부과금 (전기전자제품)	부과의 타당성 -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환특회계에 귀속되어 사용됨
		부과기준의 적정성 - 수거 방식 및 수거 지점 확대 등 상황변화에 맞춰 회수단위비용의 산정을 정기적으로 수정해나갈 필요 있음

제3장 2018년도 부담금 평가의 기본방향

1. 평가 추진체계

□ 2018년 부담금 평가 대상

- 매 3년마다 전체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2010년부터 전체 부담금의 1/3씩 매년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있음
 - 개별 부담금에 대한 평가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으로 유지
- 2018년에는 14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12개 부처의 23개 부담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 평가 내용

- 개별 부담금의 부과 타당성, 사용내용의 건전성, 부과기준 적절성 평가 외에도 전반적으로 평가대상 부담금 체계 합리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유사한 부담금 간 통합가능성 제시, 부담금으로 부적절한 경우 타 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검토, 부과요율 및 징수대상 조정 등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징수율이 낮은 부담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징수시스템 개선 등 징수율 제고방안 검토
- 부담금 감면·면제 조항의 적정성 검토
- 부과요건 등이 고시 등 하위법령에 지나친 포괄위임 여부
- 해외사례 및 외부 지적사항(국회, 감사원 등) 검토
- 과거 평가 이행사항 점검
- 부담금별 존치 필요성에 대해 평가

<표> 2018년 평가대상 부담금

☐ 12개 부처 총 23개 부담금

소관부처	부담금명
농림축산식품부 (7)	농지보전부담금, 농산물공매납입금, 양곡수입이익금(①콩, 메밀, 감자 등, ②시판용 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 대체초지조성비, 축산물수입이익금, 농산물수입이익금
기재부 (2)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외환건전성 부담금
과기정통부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방송발전기금부담금(방송통신위원회 공동)
외교부 (2)	국제교류기여금, 국제빈곤퇴치기여금
고용노동부 (2)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산림청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임산물수입이익금
교육부 (1)	학교용지부담금
행정안전부 (1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보건복지부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식품의약품안전처 (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사업비용부담금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비용부담금
중소벤처기업부 (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

2. 평가의 기본방향

- ☐ 본 평가에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을 토대로 부담금 운용의 실제 내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설정함

가. 평가 항목 및 주요 점검사항

- ☐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를 위해 부담금으로서 존치 필요성 여부, 부담금의 유무실화 여부, 일몰제(존속기한)도입 가능성 여부, 조세(과태료·사용료 등 포함)로의 전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
- ☐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를 위해 부담금간 또는 조세와 부과대상 및 부과목적 등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
- ☐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부과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해 사용용도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기금·특별회계로 귀속되어 부과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부담금이 납부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
- ☐ 부담금 과다징수 여부와 관련하여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었거나, 징수액 증가율이 높은 부담금의 부과요율 인하 타당성 및 부담금 요율수준을 관련되는 조세나 다른 부담금의 요율 등과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부담금 연체 시 적용되는 강제징수 절차 및 가산금 수준의 적정성 검토
- ☐ 부과요건 등의 법령화 여부 등과 관련하여,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 ☐ 감면제도, 환급제도, 납입고지 및 연장제도, 신고납입제도, 이의제기제도 등 납부의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나. 종합 평가 및 개선의견 제시

- ☐ (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부담금의 부과목적이 현재에도 유효하며, 중장기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충분한지 평가
-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유사성) 부담금의 부과목적이 다른 부담금과 중복되거나 유사한지 평가
-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일반적인 부담금 부과원칙에 맞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지 평가
- ☐ 항목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대상 부담금을 “존치” 혹은 “폐지” 등으로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제시

제2부 부담금평가 결과

제1장 존치평가 결과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기획재정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하여 타당성이 있음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안고 있는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국환 수급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적정수준의 외화차입 및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존치 필요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주택개발사업 시 원활한 학교설립을 위하여 존치 필요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비용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안전하고 안정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서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개발이 있어야 하고, 국가는 연구개발사업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단적 동질성이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분담금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은 1992년 국제교류기여금 도입당시보다 현 시점에 더욱 크고, 추가적인 세목 신설 및 과세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존치 필요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확보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여권 발급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음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으로서 글로벌 보건안보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점에서 부과목적이 유효함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퇴치사업을 조세가 아닌 별도의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폐지(또는 통합) - 일부 소수의 지자체에서만 부과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부과 및 징수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부담금으로서의 존치 실효성이 낮음 - 지자체별로 조례에서 상이한 부과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음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유사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 원칙에 부합함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농산물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수입물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또는 피해를 입은 농수산인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존치 필요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의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양곡수입이익금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부과·징수 실적 측면에서 부담금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존치 필요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의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 제도의 유지가 필요
	양곡수입이익금 (콩, 메밀 등)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부과·징수 실적 측면에서 부담금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존치 필요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의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본 제도의 유지가 필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부담금의 부과 혹은 징수 실적이 전혀 없어 부담금 목적이 달성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책적 필요성에 근거하여 징수제도를 부담금으로 유지할 타당성은 인정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의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대체초지조성비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초지 전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업자에게 우리나라 초지 면적 감소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축산물수입이익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WTO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발생하는 재원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농산물수익이익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접근물량을 통해 수입하는 농산물을 국내 판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경쟁입찰 과정에서 일정부분 흡수하고, 이를 기금에 납입시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국내가격 안정,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의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부담금 수입이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일반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부담금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정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본 부담금은 흡연 및 간접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관리사업 또는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만 사용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존치 필요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사업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존치 필요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중소벤처 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채무보증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이라는 특정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조세와 실질적으로 구별되어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있음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신용보증출연금과 지원목적이 유사하며, 납부의무자의 중복부담 그리고 지원대상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산림자원의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로 파괴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임산물수입이익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임산물수입권의 낙찰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납입하는 낙찰금액이며, 해당 부과금이 임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되므로 부과대상과 목적이 유효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의 비용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 심·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존치 필요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존치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구제 목적인 부담금의 규범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2015년도부터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그에 따른 피해구제 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지속적 존치가 필요함
		타 부담금과의 유사·중복성 - 해당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없음

제2장 개별항목별 평가결과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기획재정부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 연초생산안정화사업은 부담금의 사용용도로 적정하나, 세부사업 중 경작자단체 인건비지원은 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
		부과기준의 적절성 - 경작자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사업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부과가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사용처와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 2015년에 부과대상과 방식에 대한 개편 이후, 이전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함
교육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개발사업 지역에서 개발사업자는 수혜자이므로 자신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법령에 부합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 수 산정방법·시기 및 부담금 결정방식 등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정할 필요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 사업비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부담금의 설치목적에 부합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현행 방식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임 - '97년 이후, 부과기준이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부과요율 검토 필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방송통신위원회 공동)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수익자부담 원칙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담금 부과 목적에 타당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징수율이 필요에 따라 거의 매년 변경되어 과기정통부·방통위 고시를 통해 공표되어 왔는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징수율은 장기적인 변동효과를 반영하여 결정, 단기적인 변동효과는 매출액(또는 영업이익) 변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반영되도록 개선 필요
외교부	국제교류기여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중장기적으로 공적 영역의 국제교류사업의 재원을 조세에서 간접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다른 기관의 국제협력 및 문화교류 관련 사업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발급여권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징수하여 부과기준이 현재로서는 타당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부담금의 형태가 아닌 조세수입으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본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개별사업이 부담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부담금의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여유자금의 비중이 과다함 - 항공기 좌석등급별 차등부과 방안 검토 필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성 미흡 - 부담금의 수익자부담원칙에는 부합함 -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부과하고 있고 부과 및 징수실적이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어 부담금으로서 부과실효성이 낮음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지자체의 재산이나 시설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고 있고, 부과된 금액은 계량기 등 상수도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용용도는 적절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기준의 개선 필요 -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부과대상 및 요율을 정하고 있어 부과기준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음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농림축산 식품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부합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함으로 법정 사용용도가 적정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 농지보전부담금의 최근 3년간 징수실적금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농지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 등을 감안하면 기준은 적절함
	농산물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본 부담금은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실제 수행된 FTA 기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FTA에 의해 발생하는 농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거나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행해지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농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절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양곡수입이익금 (소비자 시판용 수입미곡)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본 부담금은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의 재원에 해당하여 사용용도가 적절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농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절함
	양곡수입이익금 (콩, 메밀 등)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본 부담금은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데, 양곡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에 명시된 법정 사용용도는 적절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농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낮은 관세율로 인해 인삼류 수입자가 이익을 보는 것에 반해 국내 농가들은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유통으로 손실을 보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입이익금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타당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법정 사용용도에 부합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어 부담금의 목적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대체초지조성비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수익자·원인자부담금의 성격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초지전용을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유도적 성격의 특별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담금의 재원이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업의 재원으로 투입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수입가격 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 산정 기준은 적절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축산물수입이익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본 부담금은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자금으로 조달 · 공급하기 위한 재원에 해당하므로 타당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농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절함
	농산물수익이익금	부과 타당성 - 타당 - 본 부담금은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 적절 - 실제 기금이 사용된 내용이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므로 사용 용도는 적정
		부과기준의 적절성 - 적절 -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농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절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흡연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될 경우 부담금 부과는 타당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담금 사용용도가 광범위하여 일부 용도의 경우 특정 공익사업에 대한 원인자 또는 수익자의 비용 부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부담금 수입은 금연사업비 규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이므로 국민 부담을 고려하여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 목적이므로 부담금 부과가 타당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관련 법률에서 정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행사 비용지원, 출연금,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지원 및 체불임금지급 관련 사업주 지원 등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사업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있음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p>사용용도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부담금 사용용도가 법정용도에 부합
		<p>부과기준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고 있어 부과기준이 적절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p>부과 타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의 채무보증이라는 특별한 공적과제를 위하여 부과되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출연금이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
		<p>사용용도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법상 사용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출연금 부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p>부과기준의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법령에 부담금 부과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출연요율이 달라진 환경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차등요율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
산림청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p>부과 타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골프장·공장·택지·주택 등 산림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로 파괴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산지개발로 파괴된 산림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명시된 임업진흥사업에 사용되어 사용용도는 적절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임산물수입이익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과 필요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임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이익의 침해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국내 임산업 종사자들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수출촉진사업에 전액 사용되어 사용용도는 적절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임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절함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 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타당함

부처	부담금명	타당성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전부 원자력기금으로 이전되어 법적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적정함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다만, 현재 부담금 산정기준은 매년 업무별 업무량과 기준단가를 고시를 통해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산정체계로 개선 필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부과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당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구제 목적인 부담금의 규범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2015년도부터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부과가 타당함
		사용용도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의약품 부작용에 기인한 사망, 장애 및 기타 증상·질환 진료에의 부담금 사용은 적정하며, 약사법령에 따른 피해구제 지급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음
		부과기준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 - 현재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의약품 부작용 건수를 고려할 때 대체로 적정함

제3부 부담금별 평가 내용

제1장 기획재정부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	----------------------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2001년 4월 7일 (2011년 7월 1일 시행)

2) 부과목적

- ☐ 영농기술 개발지원 등 국내 연초생산기반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내 담배 제조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임
- 부과 근거 법령은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임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국내 담배 제조업자로부터 출연을 받아 영농기술 개발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여 국내 연초생산기반의 안정화에 기여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3)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 - 『지방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로서,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담배제조업자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산정기준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담배 중 궤련 20개비당 5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장 반출 궤련(20개비 기준) × 5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가산금

- 해당사항 없음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부과 대상자가 금액을 산출하여 부담내역을 제출하고 납부하므로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이 없음
 - 부과 대상자가 금액을 산출하여 부담내역을 제출하고 납부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자의 권리구제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위반됨
 - 강제징수절차 및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과 및 징수실적

<연도별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92	348,240	292	348,240	-	-	100
2017주2」	36	16,232	36	16,232	-	-	100
2016	36	18,373	36	18,373	-	-	100
2015	33	13,635	33	13,635	-	-	100
2014	-	-	-	-	-	-	-
2013	-	-	-	-	-	-	-
2012	-	-	-	-	-	-	-
2011	-	-	-	-	-	-	-
2010	-	-	-	-	-	-	-
2009	-	-	-	-	-	-	-
2008	-	-	-	-	-	-	-
2007	30	49,580	30	49,580	-	-	100
2006	36	64,017	36	64,017	-	-	100
2005	36	57,510	36	57,510	-	-	100
2004	36	52,808	36	52,808	-	-	100
2003 이전	49	76,085	49	76,085	-	-	100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재)연초생산 안정화재단	16,232	332,008	
합 계	16,232	332,008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연초경작지 원 등의 사업	18,373	18,157	16,232	△2,141 (△11.7%)	국내 담배제조업자 반출실적 (수령기준) 감소 - 2016년 : 36.7억갑 - 2017년 : 32.5억갑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16,232	
기 타(연초생산안정화재단)	100	16,232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 부담금의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	담배사업법 제25조의3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재)연초생산안정화재단)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401.7	340.7	계	401.7	340.7
○전기이월금	68.8	32.0	○ 사 업		
			- 연초경작지원 등	171.8	184.4
○ 부담금 (제조업자출연금)	183.7	162.3	○ 재단관리비	14.2	11.1
○기 타			○ 기본재산편입	183.7	145.2
- 자산운용수입	143.7	142.1	○ 차기이월금	32.0	-
- 기타수입	5.5	4.3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연초경작지원출연금을 부과하여 연초생산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현행 방식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므로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부담금 사업 중 경작자단체 인건비 지원사업은 부담금 부과 본연의 취지인 특정 공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해당 없음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 없음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일부 사업은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으나, 경작자단체 인건비지원 사업은 부담금 사업목적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국내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는 궤련의 수량에 비례하여 납부한 연초 경작지원출연금으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을 설립하여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담금 사업임
 - 사업으로부터 현저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해 해당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품질향상 및 지력증진사업,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재해보상사업 등은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다만, 부담금 사업 중 경작자단체 인건비 지원 사업은 부담금 부과 본연의 취지인 특정 공익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연초생산안정화사업은 부담금의 사용용도로 적정하나, 세부사업 중 경작자단체 인건비지원은 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는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이고(담배사업법 제25조의3), 연초 경작자의 영농기술 개발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초생산안정화재단에 출연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에 사용됨(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연초경작지원출연금 수입 등을 재원으로 연초경작과 관련한 영농기술개발 지원, 입담배 품질향상을 위한 지력증진 지원, 연

초경작인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연초경작인단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연초생산안정화재단 정관 제4조 제1항)

- 연초생산안정화사업비의 약 1/3이 특정직능단체의 운영경비인 경작자단체 인건비로 집행되고 있음
 - 과거 1960년대에는 담배 전매제도가 시행중이었고 연초경작지도사를 통한 재배기술의 전파가 유용한 측면이 있어, 연초경작지도사 인건비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했음
 - 하지만 지난 50여년간 문해율 확대, 교육수준 상승, 교통 발달, 소득수준 향상,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 제반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고, 인쇄 및 미디어 매체를 이용한 재배기술의 교육 전파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의 실시 등으로 과거 1960년대 연초경작지도사가 담당해온 역할과 위상이 변화하고 있음
 - 하지만 2016년 사업계획에 따르면 경작자단체 인건비 지원은 110명에 대해 63억 2천2백만원이 지원되었고, 1인당 지원액은 5,747만원에 달함
 - 그동안 경작자단체 인건비 지원사업의 적절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없이 획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고, 엽연초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금액에 대한 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경작자단체 인건비지원 규모는 2010년 사업계획 기준 재배농가 100호당 2.4명, 1억 2,761만원, 재배면적 100ha당 2.4명 1억 2,791만원에서 2016년 사업계획 기준 재배농가 100호당 3.2명, 1억 8,319만원, 재배면적 100ha당 3.2명 1억 8,198만원으로 비효율적으로 증가하였음
 - 2017년도 연초생산안정화 사업실적기준 연초생산안정화사업비 184억원 중 34.6%인 63억 9천만원이 경작자단체 인건비로 지원되었고,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은 약 5,861만원이었음
 - 경작자단체 인건비 지원사업을 부담금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변화한 환경과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평가,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사업계획상 경작자단체 인건비 지원규모, 2010년 및 2016년>

연도	지원인원 (명)	지원액(백만원)	1인당 지원액 (만원)	재배농가 100호당		재배면적 100ha당	
				지원인원 (명)	지원액(만원)	지원인원 (명)	지원액(만원)
2010	156	8,200	5,256	2.4	1,2761	2.4	1,2791
2016	110	6,322	5,747	3.2	1,8319	3.2	1,8198

자료: 연초생산안정화재단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경작자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할 경우 현재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의 기금 운용수입만으로 연초생산안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2018년 기준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의 자산운용수입은 142.1억원이었고, 경작자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연초생산안정화사업비는 120.5억원이었음
 - 과거에도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의 자산운용수입만으로 사업 운용이 가능하여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았음
 - 부담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적절성 및 유효성에 대한 평가에 기반한 부담금 부과기준 및 부과액 규모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그동안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엽연초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배농가 100호당 지원인원은 33.3%, 재배농가 100호당 인건비 지원액은 43.6%, 재배면적 100ha당 지원인원은 33.3%, 재배면적 100ha당 인건비 지원액은 42.3% 증가하였으며, 2017년 사업실적 기준 지원인원 1인당 평균 인건비 지원액은 5,861만원에 달하였음
 - 경작자단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개선 및 보완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한다면 장기적으로 부담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조성된 자산의 운용수입만으로 연초생산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지방세법 제54조와 제63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거나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경우에 대한 감면 규정이 있으며, 이는 적정함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 현행 관련 법령에 권리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음
 - 부과 대상자가 금액을 산출하여 부담내역을 제출하고 납부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자의 권리구제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위반됨
 - 강제징수절차 및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2011년 (공포일(11/4/30), 시행일(11/8/1))

2) 부과목적

-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여건 상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과 환율급변동 등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외환건전성 확보장치를 상시·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비예금성외화부채를 안고 있는 금융회사 등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부과
-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 제11조의2~3, 제13조 등에서 부담금 부과 근거와 활용 범위를 규정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의 2, 제21조의 2~11, 제25조, 제 27조 등에서 납무의무자, 부과요율, 산정방법, 공제, 추가부과요율, 납부고지 및 기한, 분할납부, 가산금, 자료제출, 이의신청 등에 대해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의 2, 제2-23조의3에서 비예금성외화부채 범위를 규정

3) 부과요건

- 금융시장에서의 역할, 취급 외국환업무 및 외국통화 표시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을 부과대상으로 함
- 부과대상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정하고 있음

-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은 외국환평형기금에 귀속(법 제13조제1항)되나, 기존 기금재원과 구분되어 관리되도록 하고 있고, 적립된 부담금은 평상시에는 한국은행 등에 예치·운용되지만 위기 시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지원되는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은 외국환 거래 은행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부채의 가중평균 만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비예금성외화부채 등 잔액의 0.5% 이내에서 부과함
 - 부과대상 부채(잔존만기 1년 이하)에 부담률을 곱해 최종 부담금을 산정하는 바, 이때 부과요율은 0.1%을 기준으로 각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의 가중평균 만기에 따라 할인요율을 차감하는 방식을 취함
 - 이는 2015년 7월 부담금의 부과방식과 부과대상의 개편에 따른 것임
 - 기존의 계약만기 기준으로 차등요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잔존만기 1년 이하 외화부채에 단일요율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대상을 기존의 은행에서 은행 및 증권·보험·여전사로 확대 개편하였음
- 기획재정부장은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체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부담금의 3%를, 이후 매 1개월 초과시 마다 부담금의 1%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추가하되 가산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비은행금융기관 및 지방은행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인 경우 이들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등의 잔액에 대해서는 0.05%를 감면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 금융회사 등이 부담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
- 다만 부담금을 부과받은 금융회사 등이 해당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5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담금 금액 조정 시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함
- ☐ 부담금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 납부금액과 기한을 명시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은 외국환평형기금 결산내용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해야 함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420	842,414	420	842,414	-	-	100
2017	971)	85,317	97	85,317	-	-	100
2016	682)	115,284	68	115,284	-	-	100
2015	673)	179,350	67	179,350	-	-	100
2014	664)	161,988	66	161,988	-	-	100
2013	615)	200,665	61	200,665	-	-	100
2012	616)	99,810	61	99,810	-	-	100

- 주1)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16건 포함
 주2)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3건 포함
 주3)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9건 포함
 주4)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9건 포함
 주5)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3건 포함
 주6) 조정신청에 대한 부과 및 징수 6건 포함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한국은행	85,317	757,097	
합 계	85,317	757,097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15,284	145,169	85,317	△29,967 (△25.9%)	· 부담금제도의 개편('15.7월)으로 부담금 부과대상 부채(전체 → 잔존만기 1년 이하) 축소 - 제도개편 효과가 '16년 실적에는 절반('15.7~12월)만 영향을 줬으나 '17년 실적에는 전체('16.1~12월) 영향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85,317	
국 가	외국환평형기금	100	85,317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2항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외평기금에 적립되어 비상시 금융회사 등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용도로 사용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3항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외국환평형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1,258,807	975,416	합 계	1,258,807	975,416
○ 자체수입 (부담금)	14,274 (1,153)	13,394 (853)	○ 기금운영비	8	6
○ 정부내부수입	489,000	407,227	○ 정부내부지출	434,404	344,976
○ 차입금	-	11,656	○ 차입금이자상환	6,337	3,943
			○ 차입금원금상환	5,848	-
○ 여유자금회수	755,532	543,139	○ 여유자금운용	812,210	626,491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외환시장의 안정과 급격한 외환수요에 대한 위기대응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일정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안고 있는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외국환 수급조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적정수준의 외화차입 및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임
 - 본 부담금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전액 귀속하며, 그 예치·관리·사용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의 존치 타당성은 인정됨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해당 없음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 없음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비예금성외화부채(단기외화차입 등)가 과도한 금융기관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환차입이 과거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이었다는 지적에 의한 것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인정됨
- 부담금 부과대상을 비예금성외화부채를 안고 있는 은행권은 물론 기타 금융기관(증권·보험·여전)까지 확대(2015.7.1.)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비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경우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음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그 사용처와 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 사용의 적절성을 확보하고 있음
- 외환건전성부담금 및 가산금은 전액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으로 귀속하되 다른 재원과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고, 적립된 부담금은 평상시에는 한국은행에 예치·운용되고 위기 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외화 유동성 공급 용도로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2015년 7월 부과대상과 방식에 대한 개편 이후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만 단일요율(0.1%)로 부과하고 있으며, 이때 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동안의 월말잔액 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전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외화차입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각 금융기관의 비예금성외화부채의 가중평균만기에 따라 2년초과 3년이하의 경우 0.02%,

3년초과 4년이하의 경우 0.03%, 그리고 4년 초과인 경우 0.04%를 할인요율로 차감하고 있음

- 한편, 부과된 부담금의 체납에 대해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부담금의 3%를 가산금으로, 이후 매 1개월 초과시마다 부담금의 1%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으며(다만 증가산금의 경우 가산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체납분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절차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부담금의 감면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데, 비은행금융기관 및 지방은행 등의 부담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이들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 중 0.05%(1만분의 5)를 감면하고 있음(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 3)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부과, 관리, 사용은 물론 권리구제와 관련한 사항을 모두 법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은 외국환평형기금 결산내용에 포함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평가함
- 부담금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부담금 납부금액과 기한을 명시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하고,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함
- 다만 부담금을 부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이의가 있는 경우 납부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5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담금 금액 조정 시 차액을 다시 부과·징수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외환전전성부담금은 달러화 납부가 원칙이지만, 시중 외화유동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원화 납부도 허용함으로써 부담금 납부를 위한 달러화 수요증가를 방지하고 있으며, 부담금납부의무자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2장 교육부

1	학교용지부담금
---	---------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6년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정은 1995.12.29., 시행은 1996.1.29

2) 부과목적

☐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

부과목적	관련 법령
<p>○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재원마련</p> <p>-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의 재원마련</p>	<p>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제6조</p>

3) 부과요건

☐ 부과대상

○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 납부의무자

○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분양하는 자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100세대 이상 규모의 1. 주택건설사업 2. 대지조성사업	○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 ○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건축을 위한 토지를 분양하는 자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공동주택 : 공동주택 분양가격 ○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 택지 분양가격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0.8% ○ 단독주택 택지 분양가격의 1.4%	○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 주택 분양가격×1000분의 8 ○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 : 단독주택 택지 분양 가격×1000분의 1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제1항 및 제2항

□ 가산세

- 부담금의 100분의 3(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 제5조의3제2항)
 - 2017. 3. 21 개정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 :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의 요율 상한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부담금관리 기본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
 과요율도 100분의 3으로 인하

□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제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7)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8)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학교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9) 노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수요의 발생이 없는 용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0)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100%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제5항

□ 부담금의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1995.12.29 (법률)	학교용지부담금의 범위·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
1996.11.02 (시행령)	시행령은 시·도 조례로 위임(부담률 미정)
2000.01.28 (법률)	단독주택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2002.12.05 (법률)	단독주택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15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개발사업에 포함 (기존세대에 대하여 부담금 면제)

년 월 일	변 천 내 용
2005.03.24 (법률)	단독주택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7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4 부담금 납부의무자 변경 : 분양받는 자에서 개발사업자로 변경
2006.07.19 (법률)	단독주택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7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4 학교용지의 공급을 감정가격에서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공급하도록 변경
2009.05.28 (법률)	단독주택 : 단독주택지 분양가격의 1000분의 14 공동주택 :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제절차 및 환급절차

- 이의제기 절차·요건·방법·처리방법 등 :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예 : 지방세기본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고,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환급방법 및 절차 등 : 별도 규정 없음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86호, 2008. 3. 14., 제정; 시행 2008. 9. 15.)에 따라 환급했던 사례 있음 :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5. 3. 31.)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액을 환급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납부의무를 면제

□ 강제징수 절차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학교용지확보등에 관한특례법 제5조의3 제3항).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징수실적·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공개(부담금 운용보고서)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a)		징 수(b)		차 이(a-b)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금액 b/a)
합계	271,934	3,493,325	266,612	3,386,048	5,322	107,277	96.9
2017	4,615	335,761	3,966	339,481	649	△3,719	101.1
2016	9,421	432,981	9,423	433,100	△2	△118	100.0
2015	3,459	446,297	3,419	449,758	40	△3,461	100.8
2014	4,501	385,061	4,497	367,061	4	18,000	95.3
2013	3,838	252,001	4,328	247,131	△490	4,870	98.1
2012	5,054	259,258	4,569	255,511	485	3,747	98.6
2011	4,390	229,433	4,164	224,754	226	4,679	98.0
2010	3,311	221,941	3,031	216,327	280	5,614	97.5
2009이전	233,345	930,592	229,215	852,926	4,130	77,665	91.7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고
	2017년	2016년까지누계	
서울특별시	23,694	267,194	
부산광역시	31,203	254,595	
대구광역시	15,504	166,256	
인천광역시	25,150	196,030	
광주광역시	8,798	88,037	
대전광역시	4,506	89,014	
울산광역시	2,689	89,118	
세종특별자치시	14,216	106,088	
경기도	132,939	1,190,647	
강원도	21,683	48,719	
충청북도	5,109	36,050	
충청남도	7,057	66,989	
전라북도	4,375	62,474	
전라남도	2,970	54,596	
경상북도	14,452	72,584	
경상남도	23,055	244,309	
제주특별자치도	2,081	13,867	
합계	339,481	3,046,567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증감사유
		계획	실적(B)		
주택건설사업	433,100	424,005	339,481	△96,619 (△21.6)	강원, 충남, 경북,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주택 분양 저조 등으로 부담금 부과가 감소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339,48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4항, 제5항
광역시·자치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60.7%	206,103	
	일반회계	33.3%	112,887	
기초자치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5.4%	18,440	
	일반회계	0.6%	2,051	
기 타		-	-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회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4,331	3,395	합 계	5,255	1,845
○ 학교용지부담금	2,751	3,174	○ 학교용지매입	4,951	1,763
○ 일반회계전입금	1,580	221	○ 시군구교부금등	305	82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주택개발사업 시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하여 부담금 존치 필요
 - 전국적으로 각종 주택개발 사업들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어 이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 필요
 - 일부 지역의 경우 재원 부족으로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주택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하는 등 문제점 발생
 - 법개정을 통한 위헌 요소 제거 : 2015. 1. 20. 법률 제13006호에 의하여 2013. 7. 25., 2014. 4. 24.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조 제1항 개정
- 부담금 부과기준 등 개정 필요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 수 산정방법·시기 및 부담금 결정방식 등에 대해 법령으로 통일성 있는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권리구제절차(환급절차 포함)의 법률규정화 필요
 -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 차원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담금 사업의 타당성

- 부담금은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러한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 역시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한 자원 확보차원에서 해당 사업과 부담금이 연계된다고 할 수 있음
- 개발사업 지역에서 개발사업자는 수혜자이므로 자신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는 것은 타당함

□ 부담금 부담자의 타당성

- 부담금 부담자로서 개발사업자는 그 지역개발을 통해 배타적 이익을 실현하게 되며, 이러한 이익은 그 지역에서 의무교육 수요를 증대시켜 정부에 부담을 주게 되므로, 이익의 수혜자가 부담금 부담자가 되는 것은 타당
 - 2005.03.24. 법개정으로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분양 받는 자에서 개발업자로 변경됨
 - 위 법개정은 현재 2005. 3. 31. 2003헌가20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는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함.
- 현재 2008. 9. 25. 2007헌가1(합헌결정)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부담금 부담자가 되는 것이 합헌적임
 -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관한 헌법상 규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 보호자의 부담으로

부터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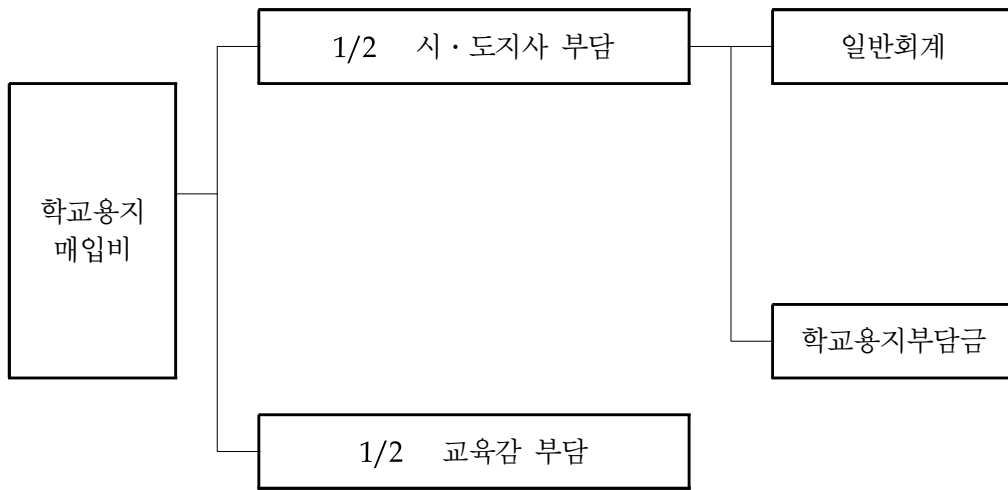
-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었다는 점에서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에 대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일정한 부담을 져야 할 책임도 가지고 있는바,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는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새로운 재원의 마련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공익과 개발사업자의 재산적 이익이라는 사익을 적절히 형량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아니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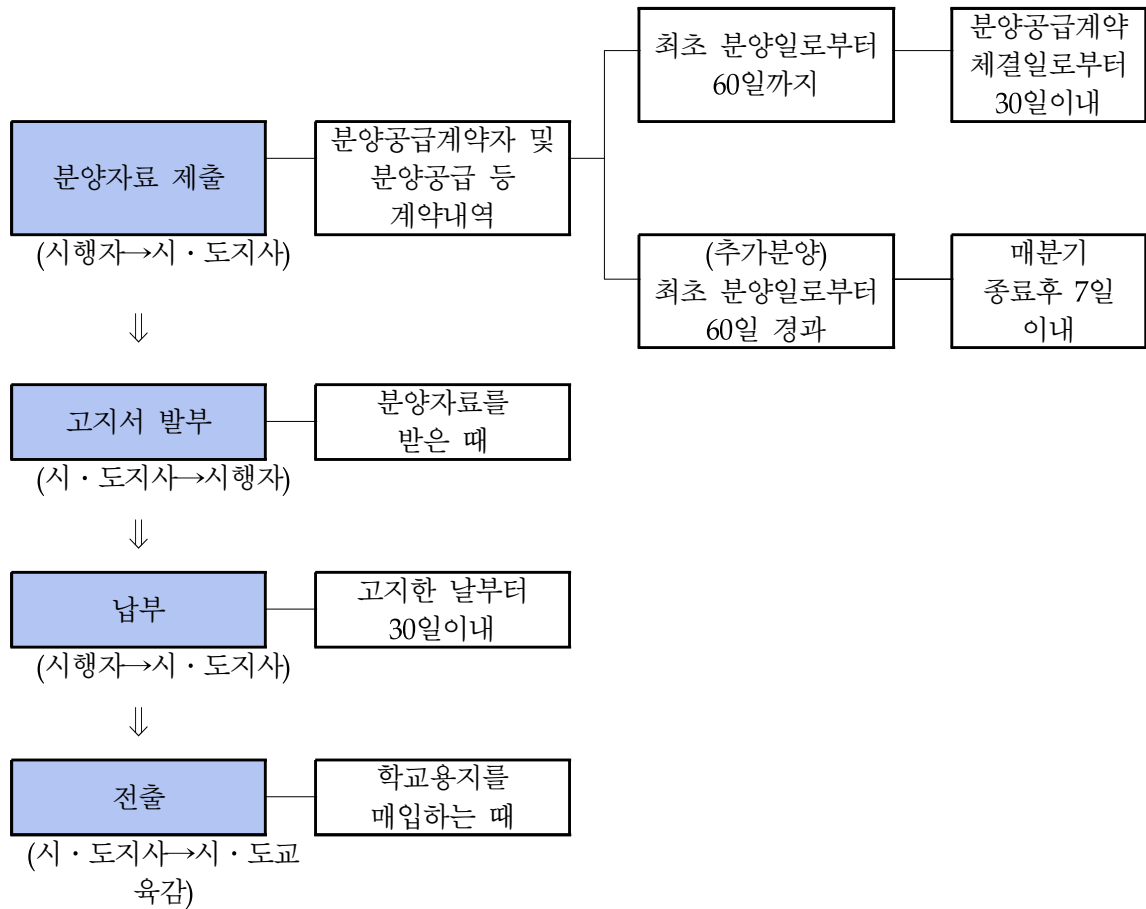
□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법령에 부합함

- 부담금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의 재원으로 사용됨
- 2017. 3.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 학교용지매입비의 회계별 분담을 종전 “일반회계 1/2, 교육비 특별회계 1/2”에서 “일반회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2, 교육비 특별회계 1/2”로 변경 :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시·도지사가 시·도교육청으로 전출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매입비의 누적 미전입률이 22.2%(1조 1,757억원) 등 문제 지적 반영

[표] 학교용지매입비 재원 구조



[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 절차(전출 포함)



- 다만 광역 및 기초 지자체 회계를 보면 2016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실적은 4,331억원인데 반해 학교용지매입은 4,951억원, 2017년의 경우 3,395억원인데 반해 학교용지매입은 1,763억원이어서 부담금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그 재원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는데 시차가 존재함을 볼 수 있음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과기준의 적절성

- 부과요율은 현재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부과기준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택지의 분양가격에 일정 요율(0.8%, 1.4%)을 적용하고 있음. 2009.05.28. 개정 시 종전보다 2배 인상한 바 있음
 - 2017. 3. 2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받지 못하는 상황 해소 예상 :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도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하나, 일반회계에 세입 처리하는 등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의무화 및 그에 따른 조문 정비(제4조제5항, 제5조의4 신설 및 제6조).
-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 수 산정방법·시기 및 부담금 결정방식 등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세 부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감사원 지적(2018.1.11. 감사원 지적사항)과 이에 대한 일부 보완조치 이루어짐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규정에 가구 수 산정방법과 산정 시점,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가구 수 산정방법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바람에 정비사업 시행자와의 소송 등 분쟁을 유발

- 해당 부처에서 2018.6.29. 도시 정비사업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가구 수 산정방법, 가구 수 기준 시기, 분양가격 산정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해석례」를 마련하여 부담금의 부과 징수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안내
- 가구 수 산정방법, 가구 수 기준 시기, 분양가격 산정 방법 등은 학교용지부담금 계산 시 주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법령에서 이를 명확하게 하는 것 고려

☐ 가산금 요율의 적정성

- 2017. 3. 21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개정시 가산금 요율이 5%에서 3%로 경감되어 적정성 확보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법률 규정화

- 부담금의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례 다수 있음
 - 현재 2014. 4. 24. 2013헌가28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

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헌법불합치결정)

- 헌재 2013. 7. 25. 2011헌가3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매도나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헌법불합치결정)
- 헌재 2010. 4. 29. 2008헌바70 :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조성·개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시·도에 공급하도록 하면서도, 이러한 학교용지를 시·도가 매입하는 시기와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합헌결정)
- 헌재 2008. 9. 25. 2007헌가1 : 수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를 부과대상으로 하는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고 2007. 12. 14. 법률 제86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 평등원칙 위배, 개발사업자의 재산권 침해 관련하여 합헌결정
- 헌재 2008. 9. 25. 2007헌가9 : 위 쟁점에 대해서는 합헌결정하였으나,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기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부담금의 필요적 면제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함(헌법불합치결정)
- 헌재 2005. 3. 31. 2003헌가20 :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 중 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
 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고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판단(위헌결정)

- 위헌 및 불합치결정에 대해 법개정을 통해 보완을 하였고 합헌결정은 현
 행 법률의 타당성을 더욱 공고히 함
 - 2015. 1. 20. 법률 제13006호에 의하여 2013. 7. 25., 2014. 4. 24. 헌법불합
 치 결정된 제5조제1항을 개정함

□ 권리구제절차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경우 이
 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와 제121
 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제118조(범칙사건의 관
 할 및 인계), 제121조(통고처분), 제122조(공소시효의 중단), 제123조(일사
 부재리), 제124조(고발의무),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제126조(무혐의
 통지 및 압수의 해제) 등은 범칙사건에 대한 것으로서 이의신청 준용하
 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역시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에 대해서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동법시행령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
 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
 한다.”고 해서 조례에 위임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권리구제절차는 이
 러한 조례 위임에 대한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
- 통일성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에서 권리구제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고려 필요
 - 통상은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것임

-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이러한 권리구제절차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 환급절차

- 환급절차에 대해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통상적인 법적 구제 절차에 따라 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의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에는 입법자는 위와 같은 면제요건의 후발적 발생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처분 상대방에게 부담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 면제의 신청을,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 환급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행스럽게도 입법자가 그러한 면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정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면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구할 법규상의 신청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면제 또는 환급의 신청을 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을 갖음(서울고법 2011. 5. 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 상고)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886호, 2008. 3. 14., 제정; 시행 2008. 9. 15.)의 경우처럼 환급신청 및 환급 등, 부담금환급가산금, 부담금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에 대해 법률상 규정하는 것 고려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종전의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2005. 3. 31.)을 함에 따른 입법적 조치로서 이 법률은 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가 마무리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 것(부칙 제2항)이나, 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은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리상의 신청권으로만 인정할 것이 아니라 법규상 신청권으로 그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부담금을 부담하는 자의 권리구제에 부합하다고 할 것임

제3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6년

2) 부과목적

- ☐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후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비용조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부처 장관 및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이 참여 하는 원자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해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원자력진흥법 제9조, 제12조)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소요비용은 정부의 출연금,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차입금,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잔액,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2항)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1항)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소요재원 확보 등을 위하여 원자력 기금을 설치하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부담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과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징수기관	한 국 연 구 재 단

3) 부과요건

□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원자력진흥법 제13조의 제1항에 제시되어 있음

- 원자력진흥법 제13조의 제1항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 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보면 “② 제1항에 따라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해당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되는 전전년도 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매 분기별 전력량을 기재한 자료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⑤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부담금을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연구개발계정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

< 부담금의 부과대상 >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전년도 전력량	○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 -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1항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과요율은 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2항,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제시되어 있음

- 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2항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고,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담금의 납부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원자력발전량	1.2원/kWh	○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 년도 전력량(kWh)×1.2원	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2항 원자력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진흥법 제14조에 제시되어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함
-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함
-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

< 가산금 등 >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국세징수법 제21조
증가산금	○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 -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함 - 체납된 국세의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적용하지 않음	국세징수법 제21조
연체료	-	-
강제징수절차	○ 국세체납처분에 따라 징수	원자력진흥법 제1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0조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사항 없음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사항 없음

☐ 강제징수 절차

○ 원자력진흥법 제14조, 국세징수법 제24조, 제30조에 의거하여 징수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82	3,282,491	82	3,282,491	-	-	100
2017	4	196,014	4	196,014	-	-	100
2016	4	196,014	4	196,014	-	-	100
2015	4	187,687	4	187,687	-	-	100
2014	4	166,541	4	166,541	-	-	100
2013	4	176,579	4	176,579	-	-	100
2012	4	184,912	4	184,912	-	-	100
2011	4	176,969	4	176,969	-	-	100
2010	4	177,325	4	177,325	-	-	100
2009	4	181,149	4	181,149	-	-	100
2008	4	171,532	4	171,532	-	-	100
2007	4	178,499	4	178,499	-	-	100
2006	4	174,728	4	174,728	-	-	100
2005	4	155,476	4	155,476	-	-	100
2004	4	155,567	4	155,567	-	-	100
2003 이전	26	803,499	26	803,499	-	-	100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6,014	3,086,477	
합계	196,014	3,086,477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196,014	213,265	196,014	-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원자력진흥법 제19조 각호의 사업에 사용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 원자력 관련 인력양성사업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원자력진흥법 제19조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0	196,014	
국가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100.0	196,014	원자력진흥법 제17조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1,977	2,081	계	1977	2,081
○ 부담금 수입	1,960	1,960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875	1,821
○ 기 타	17	121			
- 이자수입	2	2	○ 기 타	102	260
- 기타경상이전수입	14	17	- 차년도 이월금	102	260
- 전년도 이월금	0.7	102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국가의 에너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원자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가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안전하고 안정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서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많은 연구개발이 있어야 하고, 국가는 연구개발사업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연구개발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징수된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은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100% 배분되어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로 활용되고 있는바 목적, 부과대상, 용도 등의 일치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현행 부과요율인 1.2원/kWh는 1997년 6월부터 지금까지 고정되어 있으나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낮아져 발전량이 감소되고, 이는 원자력기금의 감소로 연계되어 현재의 수준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는바 부과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담금사업의 타당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의해 수립된 부문별 시행계획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는바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여야 함
- 특히, 안전하고 안정적인 원자력 이용을 위해서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있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원자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 또는 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나 예산으로 지원할 경우 타 분야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이는 원자력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원자력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부담금부담자의 타당성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은 발전용 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전년도 전력량에 부과함
-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임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에게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전년도 전력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의 부과원칙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부담금의 목적과 용도, 부담금의 부담자, 부과기준 등이 부담금의 부과기준과 일치하고 있는바 조세보다는 현재와 같이 부담금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부담금은 원자력진흥법 제19조에 의거할 때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기자재 및 장비 지원사업, 원자력 관련 인력 양성사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바 용도가 명확하고 부담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용부담금은 100%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이전되어 앞에서 살펴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바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됨
 - 2017년 징수된 196,014백만원은 모두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으로 이전되었음
 -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부담금수입, 기타 경상이전수입, 여유자금회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 기타 차년도 이월금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으며 대다수가 원자력연구개발사업비임
 - 원자력기금(원자력연구개발계정)의 지출용도를 고려할 때 부담금 사용용도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절성
 -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전년도 전력량을 기준으로 부과함
 - 부담금의 산출식을 보면 원자로를 운전하여 생산한 전전년도 전력량

(kWh)×1.2원으로 부과하고 있음

-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원자료를 운전하여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방식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부담금 부과요율의 적절성

- 부담금 부과요율의 적절성은 1.2원/kWh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 부과요율은 총리실 주재의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금요율에 대한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현행 부과요율인 1.2원/kWh는 1997년 6월부터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는바 조정을 고려하여야 함
 - 원자력발전량이 증가하였을 때는 부과요율이 고정되어 있어도 징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자력에 대한 수용성이 감소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야 함
 - 부과요율은 고정되고 원자력발전량이 증가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이 감소되고 이는 기금의 감소로 연계되어 기금고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바 연구개발사업을 현재의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부과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법률규정화여부

- 원자력진흥법,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서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원자력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부과징수의 근거와 대상자, 산정기준,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에서는 납부고지서발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법률-시행령-고시·훈령으로 연계되어 있는 법령체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법률체계 >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원자력진흥법 제13조 제1항,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원자력연구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전년도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2. 시행령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제14조 원자력진흥법시행령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전년도전력량에 킬로와트시간당 1.2원을 곱한 금액으로 함 ○ 장관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분기마다 전전년도 해당분기에 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납부금액·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여야 함
3. 시행규칙	해당사항 없음	※ 원자력법 시행규칙 폐지(2011.11.15)
4. 고시·훈령	원자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수입징수관이 영 제15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납부의무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함 ○ 기금수입담당임원은 통보를 받는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함

□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공표일은 2010년 3월 22일, 시행일은 2011년 1월 1일

2) 부과목적

- ☐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제4항

3) 부과요건

- ☐ 다음에 해당되는 방송사업자에게 매출액 및 영업이익에 근거하여 부과함(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2항, 제25조제3항, 제25조제4항)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업자의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로 부과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로 부과됨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로 부과됨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과요율 : 분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율 >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매출액	1.5%	전년도 방송서비스매출액 × 징수율 ※ 다만, 1개의 종합유선방송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방송서비스매출액이 200억원 미만의 경우 구간별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제2017-11호)
○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서비스 매출액	1.5%	전년도 방송서비스매출액 × 징수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제2017-11호)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의 방송서비스매출액	1.5%	전년도 방송서비스매출액 × 징수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제2017-11호)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결산상 영업이익	TV : 13%, 데이터 : 10%	전년도 방송사업 관련 결산상 영업이익 × 징수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과기정통부 고시 제2조(제2017-11호)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KBS/EBS : 2.87%/1.54%, MBC, SBS : 4.3%, 지역방송 : 0.65%~2.3%, 라디오 : 0.15%~2.3%, 지상파DMB : 0.15%~0.3%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 × 징수율 ※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에 대한 감경 규정에 따라 사업자별 차등 적용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방통위 고시 제5조제1항 (제2017-10호)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	1.0%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방통위 고시 제5조제2항 (제2017-10호)

□ 가산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함(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권리구제 절차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담금 부과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강제징수 절차 및 납부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제7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사업자에게 송부(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음(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4항)

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 연도별 분담금의 징수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증 감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1,019	1,241,082	1,019	1,241,082	-	-	100
2017	148	181,757	148	181,757	-	-	100
2016	152	172,682	152	172,682	-	-	100
2015	141	187,448	141	187,448	-	-	100
2014	142	152,637	142	152,637	-	-	100
2013	146	187,043	146	187,043	-	-	100
2012	146	176,365	146	176,365	-	-	100
2011	144	183,150	144	183,150	-	-	100

< 징수기관별 분담금의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과기정통부	127,846	474,357	‘13년부터 누계
방통위	53,911	584,969	
합 계	181,757	1,059,326	

< 2017년도 분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172,682	203,353	181,757	9,075 5.3%	○ 징수율 및 매출액 변경에 따른 전체 분담금 증가(91억)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8,607	48,731	32,208	△6,399 △16.6%	○ 징수율 변경(평균징수율 1.48%→ 1.49%) 및 방송서비스매출액 감소(△898억)에 따른 분담금 감소(△64억)
위성방송사업 자	7,310	7,790	8,484	1,174 16.1%	○ 징수율 변경(징수율 1.33%→ 1.5%) 및 방송서비스매출액 증가(160억)에 따른 분담금 증가(12억)
홈쇼핑방송채 널사용사업자	46,804	71,096	55,147	8,343 17.8%	○ 결산영업이익 증가 (642억) x 징수율(13%) = 83억 증가
인터넷멀티미 디어방송제공 사업자	16,884	7,049	32,007	15,123 89.6%	○ 징수율 변경(징수율 1.0%→ 1.5%) 및 방송서비스매출액 증가(4,981억)에 따른 분담금 증가(151억)
지상파방송사 업자	62,019	67,566	51,892	△10,127 △16.3%	○ 방송광고매출액 감소(2,878억)에 따른 분담금 감소(△101억)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764	1,121	1,415	651 85.2%	○ 징수율 변경(징수율 0.5%→ 1.0%) 및 방송광고매출액 증가(5억)에 따른 분담금 증가(6.5억)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294	-	604	310 105.4%	○ 징수율 변경(징수율 0.5%→ 1.0%) 및 방송광고매출액 증가(38억)에 따른 분담금 증가(3억)

□ 분담금의 귀속주체

- 분담금은 전액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관리됨(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 분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합 계		100	181,757
국가	방송통신발전기금	100	181,757

□ 분담금의 사용명세

- 본 분담금은 전액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배분되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 열거된 세부사업에 사용될 것을 규정함

< 분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된다. 1.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방송통신 관련 표준의 개발, 제정 및 보급 사업 3. 방송통신 관련 인력 양성 사업 4.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5. 공익·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통신 지원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6.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7.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및 미디어 교육 지원 8.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9.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10.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11. 방송통신 관련 국제 교류·협력 및 남북 교류·협력 지원 12. 해외 한국어 방송 지원 13. 「전파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14. 「전파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반환하는 주파수할당 대가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 16. 그 밖에 방송통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용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 분담금의 귀속재원별 운영현황: 방송통신발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11,469	9,507	계	11,469	9,507
○ 방송사분담금	1,727	1,818	○ 사 업		
○ 주파수할당대가	5,850	3,649	- 콘텐츠방송 산업육성	1,716	1,400
○ 정부내부수입	1,412	1,018	- 정보통신방송 국제협력	118	131
○ 기타수입	357	285	- 디지털방송 전환기반구축	20	18
○ 재산수입	100	43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	714	843
○ 융자원금 회수	280	166	-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	15	16
○ 여유자금 회수	1,743	2,528	- 정보통신방송 연구지원	3,414	3,174
			- 행복한 방송통신환경조성	1,682	1,760
			- 공정하고 안전한 방송통신환경조성	38	88
			- 정보통신방송 산업진흥	187	132
			○ 기금관리비	37	37
			○ 기 타		
			- 정부내부지출	1,000	1,000
			- 여유자금운용	2,528	908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본 부담금은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려는 것으로 특정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구별되어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있음. 또한 별도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부담금의 목적달성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음
-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본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여전히 존재함
- 본 부담금은 부담금 징수목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함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해당 사항 없음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일반적인 부담금 부과원칙에 부합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 본 부담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등의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을 가짐
 - 본 부담금은 국가의 일반적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하려는 것으로 특정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구별되어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있음
 - 납부의무자는 특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 그리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 ☐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함
-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에 기반한 공적 책임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장기적으로 존재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본 부담금은 전액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배분되어 사용용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의 진흥을 위해 열거된 세부사업에 사용될 것을 명확히 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이 2017년도에 집행한 사업비 7,562억 원 중 본 부담금을 통해 조달된 재원은 1,818억원으로 24.0%(1,818억원/7,562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2016년 21.9%(1,727억원/7,904억원)에 비해 2.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기금사업의 주요재원으로서 본 부담금의 중요도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본 부담금과 기금사업의 연계성이 강화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용도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6호 ‘그 밖에 방송통신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같이 기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 부담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이 부담금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부담금 부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확보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일부를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하여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기금의 여유자금의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영체제와 기금운용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정보통신방송 연구지원, 콘텐츠방송 산업육성, 행복한 방송통신환경조성 등 9개의 프로그램을 수행하였으며 부담금 부과목적에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본 부담금 부과대상은 특정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어 부담금 부과대상과 부담금 사용목적의 연관성이 높으며 부과범위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음
- 부담금의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
 - 지상파 방송사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2017년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변화를 반영하여 일부사업자의 최종 징수율을 2017년에 조정함
 -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징수율을 나누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종편·보도 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년도 대비 총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되었으나 자본결손이 여전하고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이 감소추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징수율 조정을 반영한 결과, 2017년 최종징수율을 0.5%에서 1.0%로 상향조정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경쟁중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상황,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간 부담금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2017년에 징수율을 조정함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매출액 감소 등 시장상황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었던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균징수율 1.73%(3단계 초과누진제 적용)에서 2017년 1.5%(단일징수율)로 완화함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의 매출액이 급성장하고 있고 영업적자도 대폭 줄어들고 있는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징수율을 1.0%에서 2017년 1.5%로 상향조정
 - 위성방송사업자는 성장 정체 국면이나 일정주순의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동일시장 내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감안하여 징수율 1.33%에서

2017년 1.5%로 상향조정

- 방송사업자의 최종부담금액은 징수율과 매출액(또는 영업이익)의 곱으로 결정되는 구조로, 단기적인 요소에 의해 매출액 변동이 징수율에 영향을 미칠 경우 방송사업자 부담금은 징수율 조정에 따른 효과와 매출액 변동에 따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수율 결정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인 방송운영의 공공성,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해당 사업자의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중에서 매출액(또는 영업이익) 변동을 통해 그 효과가 흡수될 수 있는 요소들(단기적 요소)은 징수율 변경 결정시 배제해야 함
 - 징수율이 필요에 따라 거의 매년 변경되어 고시를 통해 공표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납입 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결국 징수율은 장기적인 변동효과를 반영하여 결정하고, 단기적인 변동효과는 매출액(또는 영업이익) 변동을 통해 자동적으로 반영하게 함으로써 그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징수율이 필요에 따라 거의 매년 변경되어 과기정통부·방통위 고시를 통해 공표되어 왔는데, 중장기적으로 일관성과 연속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으며(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5항),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른 면제·경감사유는 다음과 같음
 - 지상파방송사업자나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채널사업자 중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이 50억원 이하인 사업자로서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는 해당연도의 분담금 면제

-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 총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해당연도의 분담금 면제
- 전년도 재무상태표상의 결손금이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 총액 미만인 사업자는 해당 연도의 분담금을 결손금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비율만큼 경감

- ☐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감면 · 면제는 방송산업의 육성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적정성이 인정됨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 본 분담금 부과요건과 관련된 법률이 적절히 규정화되어 있음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에 본 분담금 부과에 근거조항을 두고 있으며,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고시에 의거하고 있음

< 분담금 관련 법률 규정화 >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	분담금납부대상자와 징수기준, 최대징수율, 면제·경감 및 징수율 차등책정 등을 규정
2.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분담금의 징수율 결정시 고려사항(방송운용의 공공성, 방송시장 경쟁상황, 수익규모 및 재정상태 등)과 분담금의 면제·경감 및 가산금 등을 규정
3. 고시·훈령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과기정통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사항(방통위)	방송사업자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부과기준, 징수율, 산정기준, 납부기한, 납부절차 등을 고시

□ 본 분담금 관련 납입의무자의 권리구제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고 납부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에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제7항에 분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는 강제징수 절차가 명시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분담금 납부방법을 규정함

제4장 외교부

1	국제교류기여금
---	---------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2년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정 및 시행은 1991.12.14.), 동법시행령(제정 및 시행은 1991.12.31.)에 부과 근거를 둠
-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 및 징수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12.30. 국제 교류사업 증진을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로 설립
- 국제교류기여금은 1992년부터 모금 시작

2) 부과목적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의 조성

부 과 목 적	관련 법령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인 국제교류기여금의 조성 - 同재단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사업을 전담(專擔) 수행토록 설치된 기관으로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 지한인맥의 구축·관리, 외국과의 우호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함.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3) 부과요건

☐ 부과대상 및 납부의무자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발급	○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 -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 부과대상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5조(별표) ○ 납부의무자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율(%)	산출식	관련법령
(모금의 대상) 1.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유효기간 10년 : 18세 이상인 자 나. 유효기간 5년 : 18세 이상인 자 및 8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2. 단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3.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자	(모 금 액)		○ 산정기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제5조 ○ 부담액: 한국국제교류재단법시행령 제5조
	국 내	국 외	
	15,000원 12,000원 5,000원 2,000원	미화 15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5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2불에 해당하는 금액	

☐ 가산금 등 : 해당사항 없음

☐ 부담금의 감면 : 해당사항 없음

☐ 부담금의 변천 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2002.03.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과 기간연장에 한하여 모금하도록 모금 대상이 축소됨. - 기간연장 신청을 제외한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신청, 여권에 관련된 전신수수료 납부, 영사관련 문서확인 신청 등에 대해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하지 않도록 함. 			
200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법시행령 개정으로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이 세분화되고 여권발급 수수료가 조정됨에 따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제교류기여금 모금액 기준도 일부 조정함. - 여권의 유효기간에 따라 10년은 15,000원 유지, 5년은 12,000원으로 축소 -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시 면제 - 재외공관의 모금액에 대한 환율 적용 현실화 (미화 1불당 800원 → 1,000원) 			
구 분	당 초 (1991.12.31)	1차 개정 (2002. 3. 2)	2차 개정 (2004.12.31)	비 고
1.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일반여권				
(1) 복수여권	15,000원 / \$20	15,000원 / \$20	15,000원/\$15(10년) 12,000원/\$12(5년)	°10년: 만18세이상 °5년: 만8세~18세미만
-거주여권	7,500원 / \$10	7,500원 / \$10	(일반여권에 포함)	
(2) 단수여권	5,000원 / \$7	5,000원 / \$7	5,000원 / \$5	
나. 여행증명서	2,000원 / \$3	2,000원 / \$3	2,000원 / \$2	
2. 여권의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자 (유효기간연장 포함)	1,500원 / \$2	1,500원 / \$2 (기간연장만 해당)	면 제	
3.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자	600원 / \$1	면 제	-	
4. 여권에 관련된 전신수수료를 납부하는 자	2,000원 / \$3 (회신용:4,000원/\$6)	면 제	-	
5.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	600원/\$1	면 제	-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제절차에 대한 규정 없음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등에 대한 규정 없음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 없음

☐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음

☐ 강제징수절차에 대한 규정 없음

☐ 징수실적 · 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공개(기금결산보고서의 국회심의 의결, 홈페이지(www.kf.or.kr)에 공개)

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71,102,802	860,130	71,102,802	860,130			100%
2017	4,566,176	64,883	4,566,176	64,883			100%
2016	3,637,571	51,661	3,637,571	51,661			100%
2015	3,399,917	47,761	3,399,927	47,761			100%
2014	2,702,270	37,636	2,702,270	37,636			100%
2013	2,786,670	38,134	2,786,670	38,134			100%
2012	2,810,857	38,901	2,810,857	38,901			100%
2011	2,758,679	38,029	2,758,679	38,029			100%
2010	3,286,242	45,150	3,286,242	45,150			100%
2009	2,641,251	36,746	2,641,251	36,746			100%
2008	2,783,207	36,629	2,783,207	36,629			100%
2007	3,587,172	44,972	3,587,172	44,972			100%
2006	3,423,075	43,160	3,423,075	43,160			100%
2005	3,546,650	37,205	3,546,650	37,205			100%
2004	3,244,942	33,888	3,244,942	33,888			100%
2003이전	25,928,123	265,375	25,928,123	265,375			100%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서울특별시	13,807	301,351	
부산광역시	4,490	58,139	
대구광역시	3,206	33,754	
인천광역시	3,489	32,543	
광주광역시	1,827	18,349	
대전광역시	1,929	20,190	
울산광역시	1,523	13,506	
경 기 도	15,452	109,949	
강 원 도	1,730	16,578	
충청북도	1,804	16,320	
충청남도	2,391	21,059	
경상북도	2,965	24,848	
경상남도	3,860	35,863	
전라북도	1,987	20,657	
전라남도	1,810	17,502	
제 주 도	795	7,550	
세 종 시	305	540	
*지자체소계	49,563	447,347	
*재외공관	1,513	46,549	
합 계	64,883	795,247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51,661	55,000	64,883	13,222 (25.6%)	2015년 이후는 10년 만기 여권의 재발급 시기 도래로 인해 2016년도에 이어 2017년에도 재발급 건수가 증가. 이에 따른 기여금모금 실적이 전년대비 25.6% 증가.

○ 징수율 제고 노력

- 납부하지 않으면 여권 등 발급이 되지 않는 기여금의 특성상 징수율이 100%임
- 이에 따라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향후 제도개선 계획 등 특별한 사항이 없음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국가	국제교류기금	100	64,88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

□ 부담금의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 1항 및 제16조 1항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국제교류기금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1,109	1,323	계	1,109	1,323
○법정부담금	517	649	○경상사업비	370	401
○민간출연금	25	32	-글로벌 한국학진흥	119	118
○기타재산수입	8	109	-국제협력네트워킹	125	136
○기타잡수입	4	4	-문화교류 및 미디어	102	106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47	423	-지정기부금운영	24	35
○기금예탁원금회수	300	100	-공공기관지방이전	-	6
○기금예탁이자수입	8	6	○기금운영비	111	119
			○국제교류정보화	9	11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300	100
			○여유자금운용	319	692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은 1992년 국제교류기여금 도입당시보다 현 시점에 더욱 크고, 추가적인 세목 신설 및 과세대상 확대 등을 통해 이러한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처럼 여권(여행증명서 포함) 발급자에게 부담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제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내 기금 설치를 하고 그 기금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제교류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종전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맡은 국제교류사업에 대해 민간의 참여를 넓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확보 수단을 다양화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여권 발급자에 대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임
 - 이는 부담금 부담자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을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국제교류기여금의 부과 목적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글로벌 시대의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담금의 부과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일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로 추진되는 사업을 확대하여 부담금의 증액 없이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 모색 고려
- 중장기적으로 공적 영역의 국제교류사업 재원을 조세에서 간접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고려 가능 :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만이 국제교류에 따른 편익을 얻는다고 볼 근거가 약하다는 점과 국제교류에 대한 기여는 여권을 필요로 하는 일부 국민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금 부담자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부담금이 아닌 조세로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공공외교의 특성상 외국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한 거부감, 중립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일반회계보다 기금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기금의 재원 마련은 부담금의 원칙에 입각해서 볼 때 부담금 아닌 조세를 통하는 것 고려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을 설치하고 동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
- 현재 국제교류기금은 글로벌 한국학진흥, 국제협력네트워킹, 문화교류 및 미디어, 지정기부금운영 등과 같이 고유의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음. 다만, 국제협력네트워킹, 문화교류 및 미디어는 그 사업의 특성상 다른 정부기관의 국제협력 및 문화교류 관련 예산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다른 정부예산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차별화된 사업을 명확하게 할 필요 있음. 특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상 국제문화교류와 중복 또는

유사성을 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KF는 공공외교법 상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인적교류(네트워킹)와 문화교류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공공외교를 수행, 외교채널을 통한 문화행사, 공공외교아카데미 및 국민참여 공공외교사업 신설 등을 통해 타 기관과 차별화 및 중복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음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 국제교류기여금은 발급여권의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징수하여 부과기준이 현재로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 다만 명문의 직접적인 감면 및 면제조항은 없지만 2002.03.02. 기간연장 신청을 제외한 여권기재사항 변경 신청, 여권에 관련된 사실증명 신청, 여권에 관련된 전신수수료 납부, 영사관련 문서확인 신청 등에 대해서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하지 않도록 한 바 있고, 2004.12.31.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 시 국제교류기여금을 면제한 바 있음. 부담금 부과대상 단계에서 간접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음. 이러한 종전 면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 부담금의 부과근거

법령명	내 용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기여금 부과·징수근거 및 징수대상자(제16조제1항) 기여금 한도액(제16조제2항)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기여금 모금대상 및 모금액(제5조제1항) 기여금 모금 및 적립상황 통보(제5조제2항)

- 부담금의 직접적인 부과근거를 「한국국제교류재단법」으로 볼 수 있고 모금 대상 및 모금액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법령상 근거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여권의 종류, 유효기간의 장단, 발급신청자의 나이, 국내외의 여부 등에 따라 모금액이 다르므로 이러한 주요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 검토가 필요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음

- 현재 국제교류기여금은 사실상 여권발급수수료 일부로서 해당 절차 및 규정은 외교부 여권발급수수료 업무지침과 동일하게 처리하고는 있으나, 국제교류기여금은 그 자체로서 관련 규정을 갖고 있어야 하는 부담금의 일종이라 할 것임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개별규정이 없다면 부담금에 대한 통상의 행정불복절차인 감사원심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것으로 보임
- 강제징수절차 및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발급신청시 부담금 납부를 해야 발급이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100%이라는 점에서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이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을 수는 있음
- 그러나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해당 부담금의 근거법률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법,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부담금에 대한 해당 법률에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가 따로 되어 있지 않다면 부담금에 대한 공통적인 권리구제절차를 명시하는 방법 등을 생각할 수 있음.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직접 규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규정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권리구제절차(이의신청 절차 등)의 규정방식(안) :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000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000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강제징수절차의 규정방식(안) : “000은 부담금 또는 제0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4항의 예 참조)
 - 환급방법 및 절차의 규정방식(안) : “000은 이의신청 결과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공포일(2016년 12월 30일), 시행일(2017년 1월 1일)

2) 부과목적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 지원

부과목적	관련법령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조성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1조

3) 부과요건

☐ 부과 요건 및 대상

부과요건 및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법령
○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내외국인 공통) ○ 승무원, 환승객, 영유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과요율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법령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항공권 1매	정액부담	1매당 1천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 제1항

☐ 가산세

- 해당사항 없음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여부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가능 (동법 제5조 제2항)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외교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동법 제5조 제3항)
- 2017년 환급액: 해당사항 없음

☐ 징수실적 · 사용내역의 공개

- 공개 여부 : 여(○), 부()
 - (국회보고) 국가재정법(제73조)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외교부 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
 - (홈페이지) KOICA 홈페이지(www.koica.go.kr)에 징수 및 집행실적 공개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전고지의무 준수 여부

○ 고지 내용 : 상시

○ 고지방법 및 고지시기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다른 출국납부금과 함께 항공권 영수증 내 taxes로 고지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2에 따른 부담금 존속기한 설정 여부

○ 설정 여부 : 여(), 부(○)

○ 근거 법령 및 규정내용

☐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국내출발 국제선 탑승객 항공권 구매 시	
납부기한	해당사항 없음	
납부기한 연장	해당사항 없음	
분할납부	해당사항 없음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과·징수 실적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증감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31,995,500	231,995	228,489,688	228,490	-3,505,812	6,812	99%
2017	35,275,785	35,276	36,749,306	36,749	1,473,521	△1,474	104%
2016	33,264,583	33,265	30,810,586	30,811	-2,453,997	2,454	93%
2015	27,408,142	27,408	27,066,009	27,066	-342,133	342	99%
2014	25,087,223	25,087	24,736,767	24,737	-350,456	350	99%
2013	21,982,345	21,982	21,862,156	21,862	-120,189	120	99%
2012	20,548,094	20,548	20,416,226	20,416	-131,868	132	99%
2011	18,447,425	18,447	18,312,850	18,313	-134,575	134	99%
2010	17,416,931	17,417	17,264,647	17,265	-152,284	152	99%
2009	14,205,993	14,206	13,977,819	13,978	-228,174	228	98%
2008	15,002,234	15,002	15,182,029	15,182	179,795	△180	101%
2007	3,356,745	3,357	2,111,293	2,111	-1,245,452	1,246	63%

주1」2016년 11~12월분 부담금 납부기한은 2017.1월로, 2017년 기금화에 따른 2017년도 기금 결산 결과, 동 2016년 11~12월분 실적은 2017.1월 실적으로 계상되어 2016년 부담금 운용보고서 상 출국 납부금 당초 징수실적(33,266백만원)을 30,811백만원으로 조정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한국공항공사	7,762	43,767	
인천공항공사	28,985	147,959	
외교부	2	15	
합 계	36,749	191,741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국제질병퇴치기금	30,811*	32,750	36,749	5,938 (19.3)	출국자 수 증가에 따른 납부금 증가

* 2016.11월분 부담금 납부기한은 2017.1.2., 2016.12월분 부담금 납부기한은 2017.1.31.으로, 동 2016년 실적을 2017.1월 실적으로 계상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국가	국제질병퇴치기금	100	36,749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

□ 부담금의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 지원 2.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지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4조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국제질병퇴치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817.1	927.7	계	817.1	927.7
○법정부담금	308.1	367.5	○경상사업비	361.6	344.5
○여유자금운용회수	495.7	549	○기금운영비	15.5	16.3
○기타경상이전수입	7.3	11.2	○여유자금운용	440	566.9
○기타(잡수익)	6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으로서 글로벌 보건안보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부담금의 사용용도 및 세부사업의 내용들이 부담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함
-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퇴치사업을 조세가 아닌 별도의 부담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하지는 않음
 - 모든 국제항공이용자가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대상의 적절성이 취약

☐ 부담금 부과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부담금의 징수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사업에 사용되고 있지 못한 여유자금의 비중이 과다
- 항공권 좌석등급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 징수를 통해 부담률의 역진성 우려
-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국납부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이 국제항공이용자에게 중복 부과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담금으로서 부과 타당성 여부

-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여 글로벌 보건안보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중견 공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이러한 목적의 사업을 조세가 아닌 별도의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약함. 본 부담금의 납부 의무자 전체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 및 퇴치를 위하여 조세 외에 특별한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은 미약
- 부담금보다 조세수입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본 부담금을 재원으로 수행되는 개별사업이 부담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됨

- 본 부담금의 재원은 2017년 기준,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5,127백만원),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사업(15,219백만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사업(14,098백만원)에 사용됨(2018년 국제질병퇴치기금 존치보고서 기준)
- 해당 세부사업들의 내역은 본 부담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 부과대상의 적절성 평가

- 국내 공항을 통해 국제여행을 하는 모든 항공이용자가 개발도상국의 질병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사용목적의 연관성이 약함

□ 부담금 부과요율의 적절성 평가

-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천원으로 일괄부과
- 부담금 부과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2017년 기준 징수실적은 약 370억원(36,749백만원)임
 - 2009년 이후 2017년까지 부담금의 징수액은 매년 증가
 - 여유자금 비중 과다. 2017년의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여유자금운용을 위한 지출(566.9백만원)이 경상사업비를 위한 지출(344.5백만원, 2017년)을 상회
- 공항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공항이용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사용되는 출국납부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을 중복 부담
- 현재 항공기 좌석 등급과 무관하게 국제선 항공권 1매당 1천원을 일괄 부과하고 있어서 부담금 부담의 역진성이 우려됨
 - 부담금의 부담정도를 가중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항공기 좌석 등급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 지불하는 방안 검토 필요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부담금의 감면 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감면·면제 조항이 적정함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사람 2. 2세 미만인 어린이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사람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7. 국내 공항 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보세구역 (保税區域)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하게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라. 관광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8. 국제선 항공기를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100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조 1항 (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과 유사한 목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은 없음

-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의 부과대상(국내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에 유사한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 존재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에게 1만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사용. 따라서 국제선 이용자는 두 가지 종류의 출국납부금을 중복 부담
 - 현재 항공권 영수증에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출국납부금,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징수되고 있음
 - 하지만 출국납부금과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세금이 아님.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세금과 구별하여 부담금으로 명기 필요
 - 현재 항공권 영수증에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만 적혀 있지만 오해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으로 정정 필요. 공항이용자가 두 가지 종류의 출국납부금을 부담하고 있음을 투명하게 공개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부담금 부과요건의 법률 규정화 여부

구분	근거 법령	관련법령
법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 1천원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을 부과 징수
시행령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제2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대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질병퇴치기금 출국납부금 부과 제외 대상/기금의 운용관리/민간전문가/출국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대행

☐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는지의 여부

○ 이의신청 등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관련 법령에 명기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에 따라 출국납부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 신청 가능(동법 제5조 제2항)
- 외교부장관은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동법 제5조 제3항)

제5장 행정안전부

1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수익자 부담금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88년

2) 부과목적

- ☐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이익의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 지방자치법 제138조, 제139조, 제140조 1항

3) 부과요건

-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
- ☐ 부과대상, 부과요율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특·광역시 조례, 시·군 조례에 근거하여 정함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부담률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가산금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부담금의 감면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제절차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자치단체 조례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자지방자치법 제140조 및 자치단체 조례

- 2017년 환급액 : 91건 / 205백만원

- 2014년 환급액: 119건 / 96백만원

☐ 강제징수

- 지방자치법 제139조 ②항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징수실적 및 사용내역의 공개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함

○ 공개방법: 지방의회에 결산서 제출,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 등

☐ 최근 5년간 연도별 부과 및 징수 실적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증 감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A-B)	(B/A)
합계	1,644,622	1,576,336	1,643,665	1,574,854	957	1,482	99.9
2017	10,344	20,605	10,344	20,605	0	0	100.0
2016	9,942	15,827	9,942	15,827	0	0	100.0
2015	8,729	15,553	8,729	15,553	0	0	100.0
2014	6,620	14,872	6,620	14,872	0	0	100.0
2013	12,920	31,873	12,920	31,873	0	0	100.0
2012	24,861	32,734	24,848	32,726	13	8	99.9
2011	48,018	47,017	48,018	47,017	0	0	100.0
2010	50,284	65,236	50,284	65,236	0	0	100.0
2009	61,669	53,781	61,669	53,781	0	0	100.0
2008이전	1,411,235	1,278,838	1,410,291	1,277,364	944	1,474	99.9

□ 징수기관별 징수 실적

(단위: 백만원)

지자체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 까지 누계	
서울	0	270,772	
부산	0	117,680	
대구	0	65,931	
인천	19,432	259,662	
광주	0	54,355	
대전	0	95,130	
울산	0	56,437	
경기	1,106	247,513	
강원	0	32,628	
충북	0	17,904	
충남	0	50,517	
전북	0	18,531	
전남	0	42,425	
경북	67	92,082	
경남	0	123,704	
제주	0	8,978	
합계	20,605	1,554,249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백만원)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증감사유
		계획	실적(B)		
상수도사업	15,827	15,744	20,605	4,778 (30.2%)	○ 청라 및 송도국제도시의 급수공사 신청 증가 등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0	20,605	
광역자치단체	상수도특별회계	94%	19,432	자치단체 조례
기초자치단체	상수도특별회계	6%	1,173	

□ 부담금의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용용도	관련 법령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에 사용	자치단체의 조례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148	194	합 계	148	194
○시설분담금	148	194	○계량기 등 상수도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148	194

<용인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207.58	543.67	합 계	175	243
○시설부담금	8.58	9.67	○수도사업	154	237
○원인자부담금	65	107	○기 타	21	6
○타회계건설보조금	104	138			
○기 타	30	289			

<군포시 수도사업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0.21	0.26	합 계	0.21	0.26
○시설분담금	0.21	0.26	○시설비및부대비	0.21	0.26

<하남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218.24	664	합 계	174.71	663
○시설분담금	1.35	1.13	○수익적 지출	78.25	103
○기 타	216.89	662.87	○자본적 지출	96.46	560

< 문경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158.61	156.67	합 계	133.3	138
○ 시설분담금	0.61	0.67	○ 상수도 급수사업	41.5	66
○ 일반회계 전입금	45	50	○ 일반관리비	31.8	32
○ 기 타	112.7	106	○ 기 타	61	40

2. 종합 평가결과

□ 폐지(또는 통합)

- 본 부담금의 경우,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폐지하여 유사 부담금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등과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부과금액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상수도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이 반영된 부담금으로서의 논리성은 인정됨
- 그러나 본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와 일관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부담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사회적 유인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정의 공익사업과의 연계성 보다는 특별회계로의 편입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있어 존치 타당성이 떨어짐
 - 특정한 공익목적의 달성이라고 하는 부담금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해서는 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이 매우 작아,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의 운용이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거나, 부담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부과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부과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의 일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지자체의 재산이나 시설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담금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부과의 논리성은 있으나 부담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음
- 특정한 공익목적의 달성이라고 하는 부담금의 기본적인 성격과 관련해서는, 현재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곳에서만 급수설비에 대한 부과·징수 실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도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즉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의 운용이 일관되게 시행되지 않거나,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본 부담금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동일한 부과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부과요건을 규정함에 따라 부담금 부과의 일관성 원칙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본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 부과의 일관성이 담보되고 있지 않고, 부담금의 부과·징수 실적이 감소하고 있어 부담금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아 실질적인 사회적 유인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특정의 공익사업과의 연계성 보다는 특별회계로의 편입에 더 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폐지하여 유사 부담금과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 지자체의 재산이나 시설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부과하고 있고, 부과된 금액은 계량기 등 상수도 관련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부과대상 및 요율이 정해지고 있고 자치단체별로 상한선을 두고 있으므로 부과요율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자치단체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는 필요함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유사 부담금과의 통합운영 검토
 -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분담금 대상 사업과 실제 징수 대상 사업은 대부분 급수설비 공사 등이 주가 되고 있으므로, 이는 유사 부담금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등과 부담금 성격이 유사하여 통합운영 할 필요가 있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수도법)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 산업시설 설치 포함)에게 그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함(수도법 제71조제1항제2항,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6항, ○○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하수도법)

-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함
-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당해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음(하수도법 제32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

바. 법률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지방자치법」 및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법령명	내 용
법률	분담금 부과·징수 근거(제139조제1항) 분담금징수절차(제140조제2항) 분담금 이의신청 및 소송(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명	내 용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 공사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각 구분 산정한다.
김포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 (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장치와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 규정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생략)

□ 분담금의 면제 및 감경제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설비 또는 임시용 급수설비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급수설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14조 제4항)
- 공설공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용인시 수도급수조례 제15조 제3항)

□ 분담금 환급제도

-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과 지출액의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분담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8조)

□ 분담금 분할납부제도

- 군수가 인정하는 영세민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규정(청양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1조제1항)

제6장 농림축산식품부

1	농지보전부담금
---	---------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81년

2) 부과목적

- ☐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농지법 제38조 제1항)
 - 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2조)

3) 부과요건

- ☐ 농지를 전용하려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농지법 제38조 제1항)
 - 제34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농지보전부담금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 가의 30% (상한금액 : 5만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상한금액 : 5만원/㎡)	· 농지법 제38조 ·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53조제1항, 제2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7조의2

□ 가산금 등

- 가산금 : 농지법 제38조 제9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법 제38조제8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
- 증가산금 : 농지법 제38조 제10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증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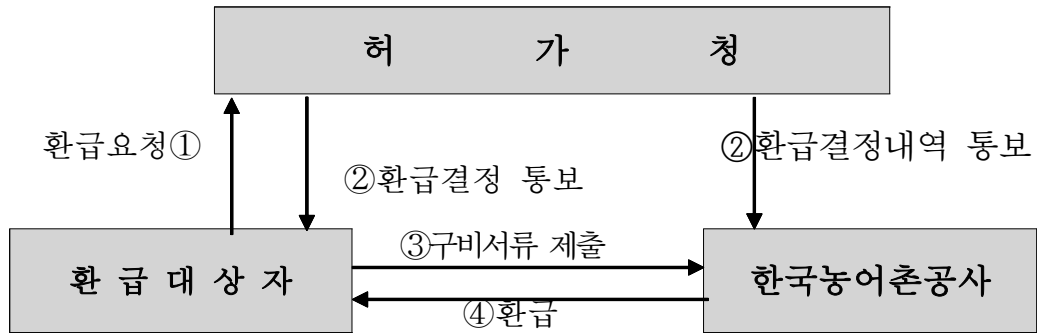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음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과 관련하여 농지법에 별도 규정 없어 '12년도 이의제기와 관련한 법령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법제처로부터 행정절차법으로 갈음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받아 미제정된 상태임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위반문제가 생길 수 있음

○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환급관련 근거 : 농지법 제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 환급사유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농지법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 환급방법 및 절차

< 환급절차도 >



- 관할청은 납입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함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관할청에서 교부)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강제징수 절차에 관한 적절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 강제징수 관련근거: 농지법 제38조 제11항
 -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과금의 부과·징수실적

< 연도별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증감(A-B)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합계	1,015,300	18,874,957	914,885	16,628,567	100,415	2,246,390	88%
2017	81,071	1,387,020	63,675	1,203,310	17,396	183,710	87%
2016	72,852	1,438,567	60,788	1,260,884	12,064	177,683	88%
2015	63,015	943,780	52,417	1,100,019	10,598	△156,239	117%
2014	53,217	1,230,046	42,499	985,282	10,718	244,764	80%
2013	46,257	822,012	37,282	935,840	8,975	△113,828	114%
2012	45,116	1,130,128	37,670	894,000	7,446	236,128	79%
2011	41,066	1,210,057	35,085	948,496	5,981	261,561	78%
2010	36,089	1,061,764	35,679	1,042,288	410	19,476	98%
2009	33,839	965,116	31,070	823,235	2,769	141,881	85%
2008	33,071	1,582,621	31,299	1,610,331	1,772	△27,710	102%
2007	31,281	1,151,683	30,346	1,004,295	935	147,388	87%
2006	31,750	610,200	31,178	540,670	572	69,530	89%
2005년 이전	446,676	5,341,963	425,897	4,279,917	20,779	1,062,046	80%

□ 부담금의 법정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제18조에 따른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2. 제19조에 따른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장려금의 지급 3. 제22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가 시행·알선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합병 및 집단환지사업의 청산금 융자 및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제2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5. 제24조의2에 따른 농지의 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6. 제24조의3에 따른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7. 제24조의5에 따른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8.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의 보조·융자 및 투자 9. 농지조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투자 10.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1.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융자 및 투자 12.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13.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제1항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농지관리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25,724	33,495	합 계	25,724	33,495
○ 자체수입	15,296	14,438	○ 사업비	8,176	9,543
- 농지보전부담금	10,565	9,716	- 농지규모화	1,508	1,266
- 융자금회수	3,420	3,589	-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	2,584	2,838
- 조성토지매각대	508	315	- 농지매입비축	1,486	1,800
- 토지임대료 등	120	75	- 농지연금	522	673
- 이자수입	683	743	- 농지조성사업	1,906	2,893
○ 정부내부수입	6,508	5,885	- 해외농업개발사업	149	53
- 정부출연금	-	-	- 농지종합정보화	21	20
- 예탁이자수입	508	385	○ 기금운영비	761	686
- 공자기금예탁금회수	6,000	5,500	○ 정부내부지출	3,616	7,000
○ 여유자금회수	3,920	13,172	- 농특회계전출금	-	4,000
			- 공자기금예탁금	3,616	3,000
			○ 여유자금운용	13,171	16,266

* '17년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액 : 12,033억원

** '17년 기금납입액(징수액+가산금-수수료-환급액) = 9,716억원(12,033+31-1,086-1,262)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원칙 등에 해당되어 부담금 부과의 타당성이 인정됨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충당되며,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 부담금 사용용도가 적정함
- 최근 3년간 농지보전부과금의 징수실적금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농지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수준을 감안할 때, 본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부과요율(개별 공시지가의 30%) 또는 상한금액(m^2 당 5만원) 기준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농지면적 감소의 원인이 되는 농지전용에 대해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또한 본 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을 준수하여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농지전용을 신중히 하도록 유도하는 유도적 성격의 특별부담금에 부합됨으로서 부과목적이 타당함

☐ 부과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에 부과 대상자의 동질성이 인정됨. 또한, 본 부담금은 농지관리기금에 납입되어 관련 사업에 사용되기에 물적 관련성 및 집단적 이용의 원칙에도 부합됨

☐ 기타 기준에 대한 타당성

- 농지보전부담금은 그동안 꾸준한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어 부담금의 존치를 부정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또한, 일몰제(존속기한 등) 도입 여부, 과징금·사용료·수수료 등으로의 전환 필요성과도 관련이 없음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 농지보전부담금은 영농규모의 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효율적 관리, 해외농업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농지관리기금의 주요 재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4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 사용용도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적절성

- 농지보전부담금의 최근 3년간 징수실적금액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농지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 현황 등을 감안하면, 본 부담금의 부과율(개별 공시지가의 30%) 또는 상한금액(m^2 당 5만원) 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015년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본 부담금의 부과율을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의 부담금 산정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가산금 등에 대한 적절성

-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된 가산금 및 증가산금의 기준(농지법 제38조제9항, 제10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세부 감면 대상과 감면비율을 검토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농지보전부담금과 유사한 부담금으로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등이 있으나, 부담금의 부과목적 및 대상자, 사용용도 등이 상이하여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이 낮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법률 규정화 여부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 근거, 부과 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부담률, 가산금, 부담금 감면, 법정 사용용도 등을 관련 법률(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함

☐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본 부담금의 환급방법 및 절차와 강제징수 절차 등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적절함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2004년

2) 부과목적

□ 농산물의 국제 거래가격이 대부분 국산 농산물의 판매가격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무역자유화가 포함된 자유무역협정(FTA)을 2004년 4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2006년 3월), EFTA(2006년 9월), 아세안(2007년 6월), 인도(2010년 1월), EU(2011년 7월), 페루(2011년 8월), 미국(2012년 3월), 터키(2013년 5월), 호주(2014년 12월), 캐나다(2015년 1월), 중국(2015년 12월), 뉴질랜드(2015년 12월), 베트남(2015년 12월), 콜롬비아(2016년 7월)와의 FTA를 발효시켜 관세특혜를 받는 농산물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FTA는 WTO 협정에서 규정한 최혜국대우(MFN)원칙의 예외를 인정받는 협정국간의 특혜무역협정으로(GATT 제24조), 본질적으로 WTO 협정으로 합의한 무역자유화에 더하여 무역을 더욱 자유화하는 의미를 가짐

□ 1995년 발효한 WTO 협정에 의해 농산물 시장이 개방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로써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어느 정도 수입억제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FTA에 의해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수입자는 국내외 가격차이 상당의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됨

○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농어업법'이라 함) 제22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FTA에 따라 관

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FTA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수된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FTA기금에 납입하여 동 기금으로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임

3) 부과요건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FTA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음.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FTA체결에 따라 양허된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을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물량 - 대상품목 : 유장, 오렌지, 분유, 연유, 버터, 천연꿀, 참깨 등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FTA농어업법 제22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 부담률 :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 입찰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농축산물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공매입찰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건별로 최고가 공매입찰 방식으로 결정	○ 공매납입금 = 관세율차해당액 × 환율 × 납입비율(%) * 관세율차해당액 = 수입단가 × TRQ 물량 × 관세율차(%) 또는 (한·중 FTA = 국내외 가격차액 × TRQ × 납입비율(%) * 국내외 가격차액 = (수입가격 × 환율) - 국내도매가격	FTA농어업법 제22조

- ☐ 가산세 또는 가산금 : 해당사항 없음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부당 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및 환급

○ 해당사항 없음

☐ 만일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는 국세채납처분의 예를 따라 조치하도록 하였으므로(FTA농어업법 제22조 제3항), 이 경우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

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 부담금의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은 FTA 발효가 늘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연도별로는 증감률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 전반적으로 협정국의 농산물 경쟁력이 강한 한-EU FTA가 2011년 발효되고, 한-미 FTA도 2012년에 발효되면서 이후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5년 말 한-중 FTA와 한-뉴질랜드 FTA가 발효되면서 부담금의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은 더욱 크게 증가함. 그러나 징수금액의 절대액은 큰 편이 아니어서 부담금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 못함
-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실적은 다음과 같음. 부과금액의 징수율은 100%임
- 부담금의 징수기관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며, 징수금액은 FTA 농어업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FTA기금에 납입됨

(단위: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B/A)
합계	3,546	171,019	3,546	171,019	100
2017	1,092	68,660	1,092	68,660	100
2016	874	69,817	874	69,817	100
2015	383	9,475	383	9,475	100
2014	356	11,739	356	11,739	100
2013	425	8,759	425	8,759	100
2012	162	2,044	162	2,044	100
2011	94	356	94	356	100
2010	74	68	74	68	100
2009	46	32	46	32	100
2008	22	22	22	22	100
2007	10	1	10	1	100
2006	-	-	-	-	100
2005	5	32	5	32	100
2004	3	14	3	14	100

□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FTA 기금)을 설치함(FTA농어업법 제13조). 즉, FTA 기금의 법정 용도는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에 있음

○ 부담금이 귀속된 FTA기금의 2016년과 2017년의 재원별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과수 및 원예경쟁력 제고사업과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2016년의 경우 직접피해지원에도 상당 비중의 기금이 사용되었음. 그 외 농식품 모태펀드, 종자경쟁력 제고, 축산업경쟁력 제고 등의 사업에 기금이 사용됨

○ FTA 기금의 세부사용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7,031	5,620	합 계	7,031	5,620
○ 정부출연금	3,430	1,950	○ 직접피해지원	2,413	77
○ 자체수입	2,815	3,124	○ 농식품모태펀드	300	200
- 부담금	698	687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40	55
위약금	5	2	○ 과수 및 원예 경쟁력제고	2,028	1,858
- 기타경상이전수입	379	447	○ 종자경쟁력제고	94	93
- 융자원금회수	1,634	1,885	○ 축산업경쟁력 제고	200	200
- 융자이자회수	82	89	○ 축사시설현대화	1,375	1,547
- 예치금이자	17	14	○ 기금운영비	36	39
○ 전년여유자금이월	786	546	○ 여유자금예치	545	1,551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도 농산물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면서 WTO 협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수입제한 농산물을 관세화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상당치로써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함. 국내외 가격차이 상당을 관세로 부과함에 따라 농산물 시장은 어느 정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됨
 -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교역확대를 목표로 한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여 시장개방을 더욱 확대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는 가속화되는 국면으로 진입함
- 특히 FTA에서는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을 유예하되 일정 물량을 정해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관세할당물량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 관세할당물량 해당분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농축산물의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크게 낮기 때문에 수입자는 일반적인 수입자와는 달리 특별한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됨
 - 이와 같은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에서 수입자 선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수입권공매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별로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수입권을 부여하고 있음. 이때 공매납입금 중 일부가 FTA 농어업법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으로써 FTA 기금에 납입됨
 - * 부담금 납부절차 : 수입권공매입찰 → 낙찰 → 계약(수입이행보증금납부) → 물량수입(통관전) → 추천서발급요청(공매납입금입금) → 추천서 발급
- 따라서,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FTA에 의해 관세할당물량을 통해 수입하는 농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을 경쟁입찰 과정에서 일정부분 흡수하고, 이를 FTA기금에 납입시켜 농수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피해를 입은 농수산인의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협정 및 국내법령의 규정에 부합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는 타당함

- WTO 협정 및 FTA와 국내법에서는 FTA에 의해 관세할당물량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더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부과되는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국산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할당된 물량에 대해 낮은 양허관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특혜성 이익의 일부를 흡수하는 성격을 갖는 것이며, 이를 기금으로 수입물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또는 피해를 입은 농수산인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이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됨
-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수입권을 낙찰 받은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차별없이 적용되는 조세나 특정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사용료나 수수료의 성격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세나 과태료·과징금 또는 사용료나 수수료로의 전환은 불가능함
- FTA 농어업법령상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 부과요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게 부과되고 있고,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므로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징수된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의 부담금 사용 용도는 적정함
 - 농산물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이 납입되는 FTA 기금은 FTA 농어업법 제15조에서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FTA 농어업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 FTA 농어업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 FTA 농어업법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 FTA 농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 FTA 농어업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 FTA 농어업법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FTA 농어업법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지출
 - FTA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그 밖에 FTA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실제 수행된 FTA 기금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FTA에 의해 발생하는 농수산업의 피해를 줄이거나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행해지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사용 용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본 부담금은 경쟁 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농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요율은 적정함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현행 관련 법령에 권리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음

- 부과 대상자가 금액을 산출하여 부담내역을 제출하고 납부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자의 권리구제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위반됨
- 강제징수절차 및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2005년

2) 부과목적

- ☐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In-quota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 중 소비자에게 시판되는 미곡(“쌀”)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에서 부과·징수한 수입이익금을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에 납입하고, 기금 사업 운영을 통해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양곡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3) 부과요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서 정하는 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 납부의무자는 소비자 시판용 미곡을 수입하는 자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산정기준과 부담률(부과징수액)	산출식	관련 법령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해당없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4

☐ 가산금

○ 해당사항 없음

5) 구체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부당 징수에 대한 구체절차 및 환급

○ 해당사항 없음

☐ 강제징수절차

○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3항)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	(b/a)
합계	5	179,957		179,957			100.0
2017	-	-	-	-	-	-	-
2016	-	-	-	-	-	-	--
2015	1	52,008	-	52,008	-	-	100.0
2014	1	62,326	-	62,326	-	-	100.0
2013	-	-	-	-	-	-	-
2012	-	-	-	-	-	-	-
2011	-	-	-	-	-	-	-
2010	-	-	-	-	-	-	-
2009	-	-	-	-	-	-	-
2008	1	34,628		34,628		-	100.0
2007	1	21,509		21,509		-	100.0
2006	1	9,486		9,486		-	100.0
2005	-	-	-	-	-	-	-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징수된 부과금은 전액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기금에 배분되며, '17년과 '16년의 경우 징수금액이 없어 배분내역은 없음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3. 현지확인조사, 토양성분검사 또는 농약잔류검사에 필요한 경비 4.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2조

□ 부담금 귀속 재원의 사용명세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의 사용명세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7,939	14,989	합 계	7,939	14,989
○부담금	-	-	○사업비	7,262	14,898
○이자수입	10	9	○기금운영비	76	79
○기타수입	10	12	○정부내부지출	-	-
○정부내부수입	6,178	13,738	○차입금원금상환	-	-
○차입금	-	654	○차입금이자상환	-	9
○여유자금회수	1,741	576	○여유자금운용	601	3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양곡수입이익금(쌀)의 부과 목적은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에 납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부담금의 부과 관련성은 인정됨
- 그러나 부담금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징수의 규모가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특정한 공익목적의 달성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만큼의 부과·징수 실적이 있어야 함
- 양곡수익이익금(소비자 시판용 수입 미곡)의 경우 2005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13년동안 일회성으로 총 5건의 경우가 발생하였고, 총 징수규모도 쌀직불금의 지급규모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과거 3년간의 쌀직불금 지급 규모는 '15년 7,262억원, '16년 1조4,898억원, '17년 5,393억원), 부과·징수 실적 측면에서 부담금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 다만 본 부담금은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로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 양곡수입이익금(소비자 시판용 미곡)의 부과 목적은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농업소득보전 직불기금에 납입하여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유지를 목적으로 함
- 본 부담금은 낮은 관세율로 인해 농산물 수입자가 이익을 보는 것에 반해 국내 농업인은 그들로 인해 발생된 값싼 수입농산물의 유통으로 상대적 손실을 보게 되는 원인관계에 착안하여, 수입이익금을 대상으로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부과금액을 국내 농업인에 환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 부과 목적의 이론적 타당성은 있음
- 그러나 부담금이 특정한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한 재정의 확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담금 징수의 규모가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만큼의 부과·징수 실적이 있어야 함
- 본 부담금의 경우 2005년도에 도입된 이래로 13년동안 일회성으로 총 5건의 경우가 발생하였고, 총 징수규모도 쌀직불금의 지급규모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과거 3년간의 쌀직불금 지급규모는 '15년 7,262억원, '16년 1조4,898억원, '17년 5,393억원), 부과·징수 실적 측면에서 부담금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할 것임
- 그리고, 본 부담금을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로 판단됨

□ 부과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은 낮은 관세율로 실질적인 이익이 귀속되는 농산물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기타 기준에 대한 타당성

- 양곡수입이익금은 1993년 UR 농업협상 결과 각국이 자국의 농업 보호 등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이익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양곡수입이익금(쌀)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 · 공급하기 위한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데, 양곡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에 명시된 법정 사용 용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적절성

- 양곡수입이익금(소비자 시판용 수입 미곡)은 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됨. 그리고 산정되는 부담금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결정됨
-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고 사업자가 수입차익금의 범위 이내에서 실비를 공제한 금액 또는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정함

□ 가산금 등에 대한 적절성

- 해당 사항 없음. 다만,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3항)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상호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을 가진 부담금으로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수입이익금(두류 등),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농산물수입이익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 ☐ 검토 결과, 양곡수익이익금(두류 등),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부과목적 및 대상자, 부담금의 사용용도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법률 규정화 여부

- 양곡수입이익금(소비자 시판용 수입 미곡)의 부과 근거, 부과 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부담률, 법정 사용용도 등을 관련 법률(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양곡수입이익금(소비자 시판용 수입 미곡)의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에서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부담금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강제징수절차

-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3항)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5년

2) 부과목적

- ☐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In-quota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 중 두류 등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한 수입이익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양곡관리법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3) 부과요건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3에서 정하는 콩, 메밀 등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 납부의무자는 대두, 팥, 녹두, 땅콩, 메밀, 감자 등을 수입하는 자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산정기준과 부담률(부과징수액)	산출식	관련 법령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	없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2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4

☐ 가산금

○ 해당사항 없음

5) 구체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부당 징수에 대한 구체절차 및 환급

○ 해당사항 없음

☐ 강제징수절차

○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3항)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 및 징수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672	162,692	672	162,692	-	-	100
2017	108	26,065	108	26,065	-	-	100
2016	94	19,689	94	19,689	-	-	100
2015	80	14,200	80	14,200	-	-	100
2014	90	16,799	90	16,799	-	-	100
2013	50	11,320	50	11,320	-	-	100
2012	45	17,792	45	17,792	-	-	100
2011	14	15,389	14	15,389	-	-	100
2010	29	20,530	29	20,530	-	-	100
2009	18	12,360	18	12,360	-	-	100
2008 이전	144	8,548	144	8,548	-	-	100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라 '17년에 징수된 부과금 26,065백만원은 전액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배분되었음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p><기금의 용자 또는 대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 촉진·거래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기금의 지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제2항</p>

□ 부담금 귀속 재원의 사용명세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용명세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24,697	23,113	합 계	24,697	23,113
○ 자체수입	21,245	18,102	○ 사업비	19,386	19,587
- 부담금	618	494	- 경상지출	8,644	8,315
- 농산물판매	6,556	6,373	- 융자지출	10,415	11,053
- 융자원금회수	11,431	9,271	- 자본지출	327	219
- 이자수입	155	92	○ 기금운영비	482	494
- 기타수입	2,485	1,872	○ 정부내부지출	-	-
○ 정부내부수입	826	-	- 공자기금예탁	-	-
- 예탁금이자수입	826	-	○ 여유자금운용	4,829	3,032
○ 여유자금회수	2,626	5,011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등)은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In-quota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함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본 부담금은 부담금 고유의 목적보다는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로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의 부과 목적은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In-quota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하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본 부담금의 경우에는 특정한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한 재정의 확충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부과·징수 실적이 없고, 또한 수입규모가 국내 농업산업의 실적 및 해외 무역에서의 국가간 논리에 영향을 받음에 따라 그 부과·징수액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17년도까지 조성된 총 3.9조원 중 95%를 자체 운용수익금을 통하여 조성하고 있음
-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로 판단됨

☐ 부과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은 낮은 관세율로 이익을 보는 농산물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부과 대상자의 타당성은 인정됨

☐ 기타 기준에 대한 타당성

- 양곡수입이익금은 1993년 UR 농업협상 결과 각국이 자국의 농업 보호 등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이익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자국의 농업 보호라는 정책적인 타당성이 인정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등)은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에 해당하는데, 양곡관리법 제13조, 제13조의2에 명시된 법정 사용용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적절성
 -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은 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됨. 그리고 산정되는 부담금은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양곡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해당 양곡의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그 밖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나 양곡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하기로 한 금액으로 결정됨
 - 부담금은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농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절함
- 가산금 등에 대한 적절성
 - 해당 사항 없음. 다만,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3항)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상호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을 가진 부담금으로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수입이익금(소비자 시판용 수입 미곡),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 농산물수입이익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선정하여 검토하였음
- ☐ 검토 결과, 양곡수익이익금(소비자 시판용 수입 미곡), 농산물가격안정기금납부금,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이 부과 목적 및 대상자, 부담금의 사용용도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것으로 파악됨
-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 법률 규정화 여부
 -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의 부과 근거, 부과 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부담률, 법정 사용용도 등을 관련 법률(양곡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양곡수입이익금(콩, 메밀 등 등)의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에서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부담금과 관련된 해당 법령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강제징수절차

- 수입이익금을 낼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양곡관리법 제13조의 2, 3항)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5년

2) 부과목적

- ☐ WTO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함. (인삼산업법 제20조 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제55조)

3) 부과요건

- ☐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물량에 부과함.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인삼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물량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적용됨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수입차익금의 범위 (국내가격-수입가격) 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 입찰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없음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 가산금, 부담금의 감면 등

- 해당사항 없음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및 환급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부
- 사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일정물량을 저율(양허)관세로 도입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사전 납부하면 정부는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추전서 발급)를 부여하고 있음.
 - 관련근거: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8호)

☐ 강제징수 절차

- 해당사항 없음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2009년 3건 4억 6백만 원, 2010년 2건 8천 1백만 원의 부과 및 징수 이후 2017년까지 부담금의 부과 혹은 징수 실적이 없음

(단위 : 건, 백만 원, %)

	부 과		징 수		증 감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51	2,517	51	2,517	-	-	100
2017	-	-	-	-	-	-	-
2016	-	-	-	-	-	-	-
2015	-	-	-	-	-	-	-
2014	-	-	-	-	-	-	-
2013	-	-	-	-	-	-	-
2012	-	-	-	-	-	-	-
2011	-	-	-	-	-	-	-
2010	2	81	2	81	-	-	100
2009	3	406	3	406	-	-	100
2008 이전	46	2,030	46	2,030	-	-	100

□ 부담금의 사용용도

○ 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용자 또는 대출, 지출의 용도로 사용됨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p><용자 또는 대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2. 농산물의 수출촉진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4.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 대금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5.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지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2.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3.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p>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p>

□ 부담금 귀속 재원의 사용명세

- 부담금 귀속 재원인 농산물가경안정기금의 2016년과 2017년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24,697억 원과 23,113억 원임

(단위 : 억 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24,697	23,113	계	24,697	23,113
○ 자체수입	21,245	18,102	○ 사업비	19,386	19,587
- 부담금	618	494	- 경상지출	8,644	8,315
- 농산물판매	6,556	6,373	- 융자지출	10,415	11,053
- 융자원금회수	11,431	9,271	- 자본지출	327	219
- 이자수입	155	92	○ 기금운영비	482	494
- 기타수입	2,485	1,872			
○ 정부내부수입	826	-	○ 정부내부지출	-	-
- 예탁금이자수입	826	-	- 공자기금예탁	-	-
○ 여유자금회수	2,626	5,011	○ 여유자금운용	4,829	3,032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본 부담금은 WTO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발생하는 재원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 등에 근거한 타당성이 인정됨
- 본 부담금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어 부담금 목적 달성을 위한 부과 징수 실적이 충분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1995년 WTO 출범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하여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로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인삼류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차익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 발생한 재원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본 부담금의 경우 저율관세를 적용받아 인삼류를 수입하는 사업자가 관세 차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기에 수입권을 낙찰 받은 사업자에게 수입차익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본 부담금은 낮은 관세율로 인해 인삼류 수입자가 이익을 보는 것에 반해 국내 농가들은 값싼 수입농산물의 국내 시장유통으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입이익금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부과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은 낮은 관세율로 이익을 보는 인삼류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에 부과 대상자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본 부담금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으로 투입되어 관련 사업에 사용되기에 물적 관련성 등의 원칙에도 부합됨

□ 기타 기준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은 1993년 UR 농업협상 결과(각국이 자국의 농업 보호 등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이익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합의)에 따르고 있기에 타당성을 가짐. 또한, 일몰제(존속기한 등) 도입 여부, 과징금 · 사용료 · 수수료 등으로의 전환 필요성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 본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제2항에 명시된 법정 사용용도와 부합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은 인삼류를 포함한 농산물 전체에 대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삼류에 대한 사업도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적절성
 - 본 부담금은 입찰에서 실제 낙찰을 받아 혜택을 받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되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됨. 그리고 납부하는 수입차익금의 부담률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고 사업자가 수입차익금의 범위(국내가격 수입가격)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기에 부담금 산정 기준도 적절함
 - 다만, 2011년 이후 최근까지 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어 부담금의 목적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가산금 등에 대한 적절성

- 해당 사항 없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해당 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법률 규정화 여부

-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부담률, 법정 사용용도 등을 관련 법령(인삼산업법 제20조 제3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5조, 제57조 제1항과 제2항), 시행규칙(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등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본 부담금의 가산금, 부담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본 부담금이 사업자가 인삼류를 저율(양허)관세로 도입할 때 부담금을 자발적으로 사전 납부하여 정부로부터 저율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성격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의 마련 여부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음.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강제징수절차 및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5	대체초지조성비
---	---------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1년

2) 부과목적

☐ 초지의 안정적인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킴. (초지법 제23조 제6항)

3) 부과요건

☐ 초지를 전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함. (초지법 제23조 제6항)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초지 전용	초지를 전용하는 자	초지법 제23조 제6항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적용됨.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초지전용 면적	1만㎡당 납입 기준액(매년 농식품부 고시)	납입기준액=(초지조성단가+3년간초지관리비) × 전용면적	초지법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7항

□ 가산금, 부담금의 감면 등

- 부담금 납부 대상자가 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한이후부터 납입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 징수함.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없음	-
증가산금	없음	-
연체료(지체금)	납입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초지법시행규칙 제15조의5

- 부담금의 감면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50에서 전액을 감면함.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시설 목적에 전용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 용지로 전용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용지로 전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	100분의 50~전액면제	초지법 제23조 6항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및 환급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여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오 납입한 금액이 있는 때,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는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함.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6) 대체초지조성비납입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는 때에 기금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함.

○ 2017년 환급액 : (건수) 6건 (금액) 23,351천원

□ 강제징수 절차

- 부담금 납입 대상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전용허가의 취소 등을 처분함.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 4)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연도별로 지속적인 부담금의 부과 혹은 징수 실적이 있음

(단위 : 건, 백만 원, %)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1,958	38,084	1,914	34,553	44	3,531	90.7
2017	27	974	27	950	0	24	97.5
2016	68	468	70	△106	△2	574	△22.6
2015	64	236	65	222	△1	14	94.1
2014	52	175	52	178	0	△3	101.7
2013	65	1,211	64	1,204	1	7	99.4
2012	76	1,657	73	1,634	3	23	98.6
2011	72	742	70	678	2	64	91.4
2010	82	804	80	931	2	△127	115.8
2009	105	3,355	96	2,891	9	464	86.2
2008	101	1,246	107	1,319	△6	△73	105.9
2007	70	2,000	70	2,284	△0	△284	114.2
2006	114	4,394	110	3,152	4	1,242	71.7
2005	80	3,090	78	3,044	2	46	98.5
2004	142	886	131	781	11	105	88.1
2003 이전	840	16,846	821	15,391	19	1,455	91.4

주) 부과일과 납입기일 간 차이 및 환급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

□ 부담금의 사용용도

○ 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축산법 제47조 제1항

□ 부담금 귀속 재원의 사용명세

○ 부담금 귀속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의 2016년과 2017년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13,642억 원과 10,842억 원임

(단위 : 억 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13,642	10,842	계	13,642	10,842
○부담금	15	37	○ 사 업 비	10,076	9,817
- 축산물수입이익금	16	27	- 축산물수급관리	1,093	1,286
- 대체조지조성비	△1	10	- 축산기술보급	547	510
○정부내부수입	1,400	0	- 축산업경쟁력제고	5,465	5,203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400	0	- 친환경축산지원	2,096	1,890
○기타	12,227	10,805	- 축산물위생안전성	507	508
- 마사회납입금	1,691	1,596	- 가축방역	368	420
- 기금운용수익금	1,044	829	○ 기금관리비	32	33
- 회수자금	7,988	5,975	- 기금관리비	14	14
- 전년이월액 등	1,504	2,405	- 사업운영비	18	19
			○ 기 타	3,534	992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본 부담금은 초지의 안정적인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데, 초지 전용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는 사업자에게 우리나라 초지 면적 감소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부담금의 부과율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의 부담률과 산출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은 발견되지 않음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우리나라 초지면적의 감소를 야기하는 초지전용에 대응하고 초지의 안정적인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또한 본 부담금은 수익자/원인자부담금의 성격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초지전용을 성급하게 하지 않도록 하는 유도적 성격의 특별 부담금의 성격에 부합됨으로서 부과목적이 타당함

☐ 부과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은 초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부과 대상자의 동질성이 인정되고, 부담금이 축산발전기금에 납입되어 관련 사업에 사용되기에 물적 관련성 및 집단적 이용의 원칙에도 부합됨

☐ 기타 기준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은 현재까지 지속적인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어 부담금의 존치를 부정할 수 없음. 또한, 일몰제(존속기한 등) 도입 여부, 과징금 · 사용료 · 수수료 등으로의 전환 필요성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투입되는 본 부담금의 재원이 축산발전기금 사업 중 초지 조성 및 초지의 산출물로 생산되는 조사료 공급 확대 등과 관련되는 사업(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적절성

- 본 부담금의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징수실적금액을 보면 최소 2억 원에서 최대 44억 원으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발견되는데, 이는 초지 전용의 수요를 야기하는 관광산업, 건설업 등의 경기 변화에 따른 것임. 따라서 본 부담금의 징수실적의 변동은 외부시장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부담금 산정 기준의 조정이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이상의 상황을 감안한 결과, 본 부담금의 부과율 산출식(납입기준액 = (초지 조성단가 + 3년간 초지관리비) × 전용면적) 기준은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 과거 부담금운용평가단이 본 부담금의 부과율을 일단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하였는데, 현 상황에서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가산금 등에 대한 적절성

- 가산금과 증가산금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평가가 불가함.
- 연체료의 경우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5항에 따라 납입기간이 지난날로부터 납입고지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강제징수철자는 초지법시행령 제16조의 4항에 의거하여 전용허가의 취소 등이 규정되어 있는 데 적절함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본 부담금의 감면 조항은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한 전용, 2)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용·공공용시설 목적에 전용, 3) 농업·축산업·임업 및 수산업 용지로 전용,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용지로 전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으로 규정되는데, 세부 감면 대상과 감면비율을 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상호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을 가진 부담금을 대상으로 부과 목적 및 대상자, 부담금 사용용도 등에 대한 통합 운영 필요성 또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본 부담금의 통합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법률 규정화 여부

-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부담률, 법정 사용용도, 가산금, 부담금 감면 등을 관련 법령(초지법 제2조제5호 및 제23조 제6·7항,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 2·4,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82호) 등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본 부담금의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내용을 검토한 결과 대체적으로 적절함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78년

2) 부과목적

☐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의 재원을 조성함. (축산법 제43조)

3) 부과요건

☐ 양허관세율로 수입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함. (축산법 제45조)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축산물 수입	양허관세율로 수입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	축산법 제45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은 관련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적용됨.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1. 수입권공매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공매시 납입키로 표시한 금액(원/kg)	축산법 제45조
2. 외화획득용	수입금액(CIF+관세) × 2%	수입금액(CIF+관세) × 2% × 환율	농식품부 고시 제2015-25호

☐ 가산금, 부담금의 감면 등

- 가산금(연체료) 및 증가산금, 부담금의 감면 등에 관한 내용은 없음.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부당징수에 대한 구제절차 및 환급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여
- 납입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함.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은 해당 사항 없음.

☐ 강제징수 절차

- 부담금 납입 대상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축산법 제45조제3항)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연도별로 지속적인 부담금의 부과 혹은 징수 실적이 있음.

(단위 : 건, 백만 원, %)

	부 과		징 수		증 감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7,251	2,556,318	7,242	2,556,298	9	20	100.0
2017	52	2,745	52	2,745	-	-	100.0
2016	46	1,630	46	1,630	-	-	100.0
2015	50	2,466	43	2,450	7	16	99.4
2014	61	2,362	61	2,362	-	-	100.0
2013	71	1,446	71	1,446	-	-	100.0
2012	80	1,951	80	1,951	-	-	100.0
2011	90	2,071	88	2,067	2	4	99.8
2010	62	2,427	62	2,427	-	-	100.0
2009	64	1,441	64	1,441	-	-	100.0
2008	55	1,357	55	1,357	-	-	100.0
2007	64	1,047	64	1,047	-	-	100.0
2006	102	1,799	102	1,799	-	-	100.0
2005	66	1,032	66	1,032	-	-	100.0
2004	73	2,143	73	2,143	-	-	100.0
2003 이전	6,315	2,530,401	6,315	2,530,401	-	-	100.0

주) 부과일과 납입기일 간 차이 및 환급으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 발생

☐ 부담금의 사용용도

○ 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됨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 3.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 개선 3의2. 「낙농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낙농진흥계획의 추진 4.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5. 가축 위생 및 방역 6.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비 및 경비의 지원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자조금에 관한 지원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축산법 제47조 제1항

□ 부담금 귀속 재원의 사용명세

- 부담금 귀속 재원인 축산발전기금의 2016년과 2017년 수입 및 지출액은 각각 13,642억 원과 10,842억 원임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13,642	10,842	계	13,642	10,842
○ 부담금	15	37	○ 사 업 비	10,076	9,817
- 축산물수입이익금	16	27	- 축산물수급관리	1,093	1,286
- 대체초지조성비	△1	10	- 축산기술보급	547	510
			- 축산업경쟁력제고	5,465	5,203
○ 정부내부수입	1,400	0	- 친환경축산지원	2,096	1,890
-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400	0	- 축산물위생안전성	507	508
			- 가축방역	368	420
○ 기타	12,227	10,805	○ 기금관리비	32	33
- 마사회납입금	1,691	1,596	- 기금관리비	14	14
- 기금운용수익금	1,044	829	- 사업운영비	18	19
- 회수자금	7,988	5,975			
- 전년이월액 등	1,504	2,405	○ 기 타	3,534	992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본 부담금은 WTO상의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추천을 받아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 중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을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이익금을 부과 및 징수하고, 발생하는 재원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 등에 근거한 타당성이 인정됨
-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현재까지 부담금이 귀속되는 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지만, 부담금 고유의 목적보다는 WTO협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매개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양허관세로 인하여 영향 받는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존치되어야 하는 제도로 판단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과 목적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의 부과 목적은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축산물 중 농식품부령이 정하는 품목의 수입차익금을 부과 및 징수하여 발생한 재원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본 부담금의 경우 저율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하는 사업자가 관세 차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기에 수입권을 낙찰 받은 사업자에게 수입차익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됨
- 또한 본 부담금은 낮은 관세율로 인해 축산물 수입자가 이익을 보는 것에 반해 국내 축산 농가들은 값싼 수입 축산물의 국내 시장유통으로 손실을 보게 되므로,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수입이익금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부과 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은 낮은 관세율로 이익을 보는 축산물 수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에 부과 대상자의 동질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본 부담금이 축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투입되어 관련 사업에 사용되기에 물적 관련성 등의 원칙에도 부합됨

☐ 기타 기준에 대한 타당성

- 본 부담금은 1993년 UR 농업협상 결과(각국이 자국의 농업 보호 등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이익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합의)에 따르고 있기에 타당성을 가짐. 또한, 그동안 꾸준한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있어 부담금의 존치를 부정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일몰제(존속기한 등) 도입 여부, 과징금 · 사용료 · 수수료 등으로의 전환

필요성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 본 부담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축산발전기금의 자금으로 조달·공급하기 위한 재원에 해당하는데, 축산법 제43조에 명시된 법정 사용용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 부담금 산정 기준에 대한 적절성
 - 본 부담금은 입찰에서 실제 낙찰을 받아 혜택을 받는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되어 수익자/원인자 부담원칙에 해당됨. 그리고 납부하는 수입차익금의 부담률은 사업자가 수입차익금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고 있기에 부담금 산정 기준도 적절함
- ☐ 가산금 등에 대한 적절성
 - 해당 사항 없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해당 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상호 유사성이 있을 가능성을 가진 부담금을 대상으로 부과 목적 및 대상자, 부담금 사용용도 등에 대한 통합 운영 필요성 또는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본 부담금의 통합운영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법률 규정화 여부

- 본 부담금의 부과근거, 부과목적,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부담률, 법정 사용용도 등을 관련 법령(축산법 제43·45·47·48조, 농식품부 고시 제2015-25호) 등에서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본 부담금의 가산금, 부담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법률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본 부담금이 사업자가 축산물을 저울(양허)관세로 도입할 때 부담금을 자발적으로 사전 납부하여 정부로부터 저울관세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성격을 가진 것을 감안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의 마련 여부

- 권리구제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없음.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이 없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권리구제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서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5년

2) 부과목적

- ☐ 농산물의 생산비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많으므로 다수 농산물의 국제 거래가격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매가격보다 크게 낮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면서 대신 국내외가격 차이 상당을 관세로 부과하기로 국제사회와 합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개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합의함.
- 이러한 의무적 수입물량을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는 바, 시장접근물량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당연히 낮은 관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하더라도 동종 물품의 수입농산물 가격과 국내판매가격 간 가격차이가 존재하므로 큰 폭의 특별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시장접근물량을 수입하는 자에게 낮은 관세율에 의한 관세 외에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써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기금사업 운영을 통해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도모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3)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하기 위해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 받은 물량 - 대상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	수입권을 낙찰 받은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률 :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 입찰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수입차익금의 범위(국내가격-수입가격)이내에서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	수입권을 부여받은 자가 경쟁 입찰시 납입의사를 표시한 금액	없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가산세 또는 가산금 : 해당사항 없음.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WTO 협정에 따른 시장접근물량에 대해 사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일정물량을 낮은 세율(양허)관세로 도입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면 정부는 낮은 세율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는 권리(추천서 발급)를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 징수로 인하여 부담금 의무자가 이에 불복할 개연성이 사실상 없으므로 권리구제절차의 별도 마련은 필요하지 않음

☐ 한편,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 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는 국세채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하였으므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부담금을 선납부한 후 수입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담금을 미납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음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1995년부터 부과 징수되기 시작한 부담금의 부과건수와 징수금액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일관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는 아니하나 전반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임. 부과금을 선납부한 후에 해당 농산물의 수입이 가능한 구조이므로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율은 100%임.

(단위: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B/A)
합계	2,112	1,103,170	2,112	1,103,170	100
2017	83	23,335	83	23,335	100
2016	150	42,144	150	42,144	100
2015	225	94,200	225	94,200	100
2014	124	28,350	124	28,350	100
2013	205	48,083	205	48,083	100
2012	83	70,219	83	70,219	100
2011	169	60,927	169	60,927	100
2010	118	82,331	118	82,331	100
2009	74	63,135	74	63,135	100
2008 이전	881	590,446	881	590,446	100

- 부담금의 징수기관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며, 징수금액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농산물안정기금에 납입됨

□ 농산물수입이익금이 귀속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재원별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24,697	23,113	계	24,697	23,113
○ 자체수입	21,245	18,102	○ 사업비	19,386	19,587
- 부담금	618	494	- 경상지출	8,644	8,315
- 농산물판매	6,556	6,373	- 용자지출	10,415	11,053
- 융자금회수	11,431	9,271	- 자본지출	327	219
- 이자수입	155	92	○ 기금운영비	482	494
- 기타수입	2,485	1,872	○ 정부내부지출	-	-
○ 정부내부수입	826	-	- 공자기금예탁	-	-
- 예탁금이자수입	826	-	○ 여유자금운용	4,829	3,032
○ 여유자금회수	2,626	5,011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1947년 이후 1994년까지 지속된 GATT 체제에서 농산물의 교역에 대한 국제간 협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협상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협상이 이루어짐. 그 결과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도 농산물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됨. 농산물에 대한 시장접근 방식은 원칙적으로 관세화에 의한 시장개방 방식임
 - WTO 농업협정에 따르면 수입제한 농산물을 관세화 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이를 관세상당치(Tariff Equivalent, TE)로써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고 아울러 이 관세상당치를 매년 감축하도록 규정함. 한편, 관세화방식으로 시장이 개방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물량(MMA 또는 CMA)²⁾을 협상당시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시장접근물량”이 설정됨
-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농산물(고추, 마늘, 양파, 생강, 참깨, 참기름, 오렌지, 감귤류)을 시장접근물량으로 수입하는 경우 낮은 관세율에 의한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수입자의 선정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수입권공매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공매제에서 일정한 부담금(Mark-Up : 국산가격과 수입산 가격 차이)을 정부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통해 낙찰자(수입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저율관세로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 부담금 납부절차 : 수입권공매입찰 → 낙찰 → 계약(수입이행보증금납부) → 물량수입(통관전) → 추천서발급요청(공매납입금입금) → 추천서 발급
- 살펴보면,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접근물량을 통해 수입하는 농산물을 국내 판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이익을 경쟁입찰 과정에서 일정부분 흡수하고, 이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2) MMA(Minimum Market Access ; 최소시장접근)은 기준연도(1986~1988)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인 농산물로, 최종 이행년도까지 점진적으로 그 수입물량을 확대해야 하는 것을 말하며, CMA(Current Market Access ; 현행시장접근)은 기준연도의 수입량이 국내소비량의 3% 이상되는 농산물로 최종 이행년도까지 그 수입폭을 확대할 의무가 없는 것을 말함.

납입시켜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국내가격 안정, 그리고 유통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협정(농업협정 부속서 2) 및 국내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농산물수입이익금의 부과는 타당함

- 국내외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큰 농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국내 농산물시장은 큰 위협을 받게 되고, 농업 기반자체가 와해될 수 있음. 시장이 개방된 농산물에 대해 국내외 가격 차이 상당을 관세로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은 내외가격차이 상당의 특별한 이익을 보장받는 것과 동일한 것임
- 시장접근물량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농산물수입이익금은 국산 농산물의 판매가격과 낮은 양허관세율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수입가격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로, 이것은 사실상 관세상당치(TE)로 부과되는 관세율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낮은 관세율에 의한 관세차액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농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농산물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임
- 그러나 수입이익금은 수입권을 낙찰 받은 특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조세나 특정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과는 성격이 달라 조세나 과태료·과징금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사용료나 수수료의 성격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세나 과태료·과징금 또는 사용료나 수수료로의 전환은 불가능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규정된 농산물수입이익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설치목적·부과요건·산정기준·산정방법·부과요율 등 부과요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게 부과되고 있고, 이중 부과되는 것도 아니므로 농산물수입이익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징수된 농산물수입이익금의 사용 용도는 적정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규정된 농산물수입이익금이 납입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용 용도는 용자 또는 대출과 지출로 구분되며, 용자 또는 대출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한 것임
 - 농산물의 가격조절과 생산·출하의 장려 또는 조절
 - 농산물의 수출촉진
 -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 도매시장, 공판장, 민영도매시장 및 경매식 집하장의 출하촉진·거래대금 정산·운영 및 시설설치
 -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가격안정 및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한편, 가격안정기금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위해 지출됨
 - 「농수산물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 기금이 관리하는 유통시설의 설치·취득 및 운영
 -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과 종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따라 실제 기금이 사용된 내용을 보면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농산물수입이익금의 사용 용도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 부담금은 경쟁입찰에 참여한 전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닌 낙찰 받은 특정 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고, 납부하는 수입이익금의 부담률은 법정화 되어있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지 않고 수입권을 부여받은 사업자가 입찰시 수입농산물 판매에서 발생 가능한 이익을 고려하여 납입의 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한 금액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부과기준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됨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장기적으로 부과목적, 부과방식 등이 유사한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다른 부담금과 통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 현행 관련 법령에 권리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환급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음
 - 부과 대상자가 금액을 산출하여 부담내역을 제출하고 납부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자의 권리구제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위반됨
 - 강제징수절차 및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서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제7장 보건복지부

1	국민건강증진부담금
---	-----------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5년 1월 5일 (1995년 9월 1일 시행)

2) 부과목적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담배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임

○ 부과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2임

부과목적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제1항

3) 부과요건

부과요건	납부의무자	관련법령
담배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담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권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담배, 머금은 담배)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산정기준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의 수량	1. 쥘련: 20개비당 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밀리리터당 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쥘련형: 20개비당 750원 2) 기타 유형: 1그램당 73원 3. 파이프담배: 1그램당 30.2원 4. 엽쥘련(葉卷煙): 1그램당 85.8원 5. 각련(刻煙): 1그램당 30.2원 6. 씹는 담배: 1그램당 34.4원 7.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1.4원 8. 물담배: 1그램당 1050.1원 9. 머금은 담배: 1그램당 534.5원	1. 쥘련: (20개비)×841원 2. 전자담배 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1ml)×525원 나.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1) 쥘련형: (20개비)×750원 2) 기타 유형: (1g)×73원 3. 파이프담배: (1g)×30.2원 4. 엽쥘련: (1g)×85.8원 5. 각련: (1g)×30.2원 6. 씹는 담배: (1g)×34.4원 7. 냄새맡는담배: (1g)×21.4원 8. 물담배: (1g)×1050.1원 9. 머금은담배: (1g)×534.5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2017.4월부터 연초고형물 반출신고(1그램당 73원)
 2017.12.30.부터 반출신고(쥘련형(20개비당 750원), 기타유형(1그램당 73원))

□ 가산금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 납부고지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5항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국세징수법 제21조
강제징수절차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제6항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제절차

-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환급 신청서, 지방세 환급내역,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한 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대한 납부 확인증 및 기타 증빙자료를 공문과 함께 보건복지부로 발송하면 검토 후 부담금 환급
- 국민건강증진법 23조 1항 및 지방세법 63조1항 2호
- 2017년 환급액 11건 234백만원

☐ 강제절차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
- 국민건강증진법 23조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연도별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968	26,198,670	2,905	25,945,924	63	252,746	99.0
2017	215	3,051,223	214	2,969,000	1	82,223	97.3
2016	312	3,131,866	308	2,962,996	4	168,870	94.6
2015	379	2,475,705	373	2,475,686	6	19	100.0
2014	269	1,628,366	268	1,628,351	1	15	100.0
2013	185	1,533,334	184	1,533,321	1	13	100.0
2012	180	1,549,668	178	1,549,665	2	3	100.0
2011 이전	1,428	12,828,508	1,380	12,826,905	48	1,603	100.0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징수기관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보건복지부	2,969,000	22,976,922	
합 계	2,969,000	22,976,922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2,962,996	3,067,127	2,969,000	6,004	담배 반출량 감소(3,724 →3,478백만갑*)하였으나, '16년 11월 반출분 일부가 '17년에 징수되어 증가 * 전년 12월~해당연도 11월 반출량 기준(해당월 반출량이 익월에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납부됨)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2,969,000	
국 가	국민건강증진기금	100	2,969,000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 부담금의 사용명세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10.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11. 그 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국민건강증진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34,248	36,867	계	34,248	36,867
○ 자체수입	30,237	30,195	○ 사 업 비	31,374	34,740
- 부담금 수입	29,630	29,690	- 장애인재활지원	47	36
- 기타재산수입	48	44	- 노인의료보장	158	2,183
- 기타경상이전수입	559	461	- 저출산대응및인구정책지원	578	702
- 기타(가산금 등)	0.4	0.5	- 취약계층의료비지원	395	327
○ 타계정전입금	400	371	- 공공보건의료확충	629	587
○ 기금예수금	740	4,200	- 보건산업육성	2,159	2,033
○ 여유자금회수	2,871	2,101	- 한의학연구및정책개발	132	163
			- 국민건강생활실천	2,747	2,801
			- 암및원폭한센인지원	516	830
			- 정신질환관리	463	524
			- 질병관리본부지원	4,431	5,322
			- 건강보험제도 운영	18,914	19,011
			- 질병관리본부시험연구인력지원	175	192
			-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	30	29
			○ 기금운영비	0.7	0.8
			○ 정부내부지출	773	772
			○ 여유자금운용	2,101	1,355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부담금 수입이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그러나 담배 판매에 대해 부과한 부담금 수입으로 일반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현행 방식은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관리사업을 제외하면 원인자 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
- 일반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부담금으로 수행하기 위한 특정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담배의 제조·수입·유통·소비에 부과되는 본 부담금은 흡연 및 간접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관리사업 또는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만 사용할 필요가 있음
- 흡연은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간접흡연자의 건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는 간접흡연과 관련된 사업이 부담금의 사용용도로 명기되지 않았고 실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 사용용도에 간접흡연자의 건강관리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명기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 · 유사성

- 해당 없음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해당 없음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담금 수입이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으나, 일반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 부담금으로서는 타당성이 부족함
 -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담배에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징수금액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 귀속되어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에 사용됨
 - 흡연과 관련된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해당 원인에 특정한 공익사업의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므로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있음
 - 하지만 일반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적인 국민건강관리사업의 수혜자가 담배의 제조, 수입, 판매, 소비와 관련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담금 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부담금 사용용도가 광범위하여 일부 용도의 경우 특정 공익사업에 대한 원인자 또는 수익자의 비용 부담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의 국민건강관리사업 이외의 건강생활 지원사업, 보건교육 및 자료개발, 보건통계 작성보급과 보건의료 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사업,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치료 사업, 국민영양관리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사업 등은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담배 제조·수입·판매·소비자가 직접적인 원인자 또는 배타적인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담금 사용용도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 부담금이 귀속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현재 기금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사용되고 있고,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으로의 사

업 이관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사용이 부담금으로서의 원인자 부담원칙 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이루어짐을 보여줌

-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간접흡연자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은 관련 법령에 부담금의 사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고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현행 부담금 수입은 금연사업비 규모에 비해 비교적 큰 규모이므로 국민부담을 고려하여 부과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은 적정함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가 면제 되는 것 ○ 지방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 	100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 지방세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경우

1. 수출(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를 포함한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한 판매
 - 가. 주한외국군의 군인
 - 나.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3. 보세구역에서의 판매
4.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6. 시험분석 또는 연구용

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담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담배용도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②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
 - ③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시 수입되어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
- * 지방세법 제63조에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현행 관련 법령에 권리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음

- 부과 대상자가 금액을 산출하여 부담내역을 제출하고 납부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자의 권리구제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위반됨
- 강제징수절차 및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제8장 고용노동부

1	임금채권보장기금사업주 부담금
---	-----------------

1. 부담금 개요

1) 설치연도 : 1998년 2월 20일(1998년 7월 1일 시행)

2)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법령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채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기업도산에 따른 임금채권의 확보를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거 전체 사업주의 부담으로 해결하기 위함)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1항

3) 부과요건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은 제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등은 제외)	○ 부과대상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 보험료징수법 제31조 ○ 납부의무자 -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0.6/1,000 ※ 2/1,000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	보수총액× 부담금비율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제2항·제3항

□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가입자가 확정부담금의 신고기한 내 미신고하거나 신고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의 사실조사에 따라 추가 징수할 확정부담금의 10/100을 징수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증가산금	-	-
연체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1,000을 징수,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0/1,000을 추가 징수(90/1,000 한도)	보험료징수법 제25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강제징수절차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와 채납처분 절차 준용	아래 참고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제절차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심판법 제27조)
-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송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

정에 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반환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주 계좌로 입금 조치(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보험료징수법 제2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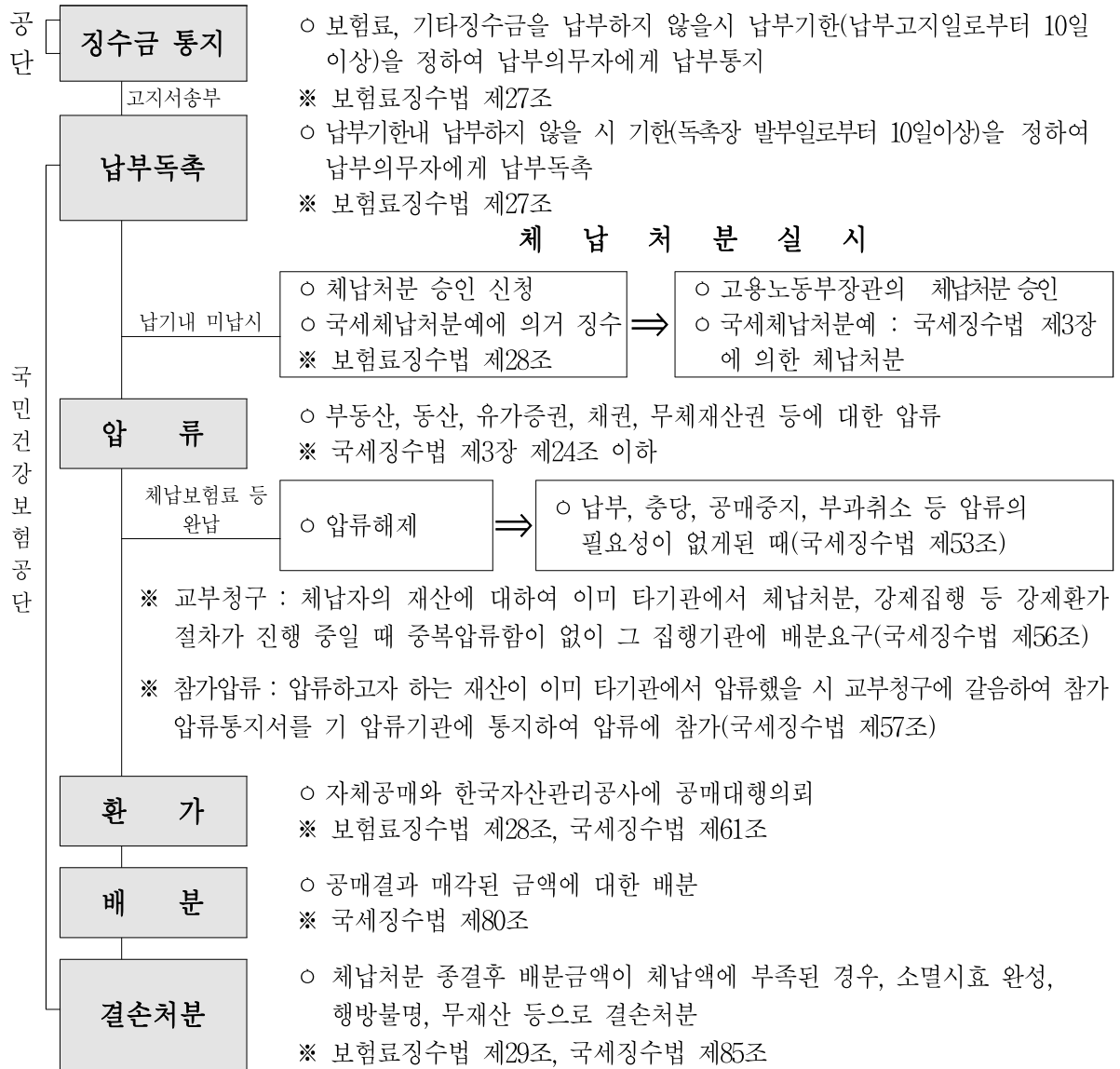
○ 2017년 환급액 : 129,234건, 8,495백만원

□ 부담금 부과시기,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여부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부과시기	부과고지사업장: 매월 자진신고사업장: 개산확정보험료신고기한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납부기한	부과고지사업장: 매월 10일, 자진신고사업장: 개산확정보험료 납부기한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납부기한 연장	천재지변 등 법령에 규정된 사유	보험료징수법 제39조
분할납부	개산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연 4기)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3항

□ 강제징수 절차: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준용

< 참고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와 체납처분 절차 >



□ 부담금의 감면

감면사유(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①「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③「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④「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최대 50%)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 고용노동부고시제 2013-67호

□ 부담금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8. 7. 1	○ 2/1000
○ 1999. 1. 1	○ 0.3/1000
○ 2000. 1. 1	○ 0.9/1000
○ 2001. 1. 1	○ 0.5/1000
○ 2002. 1. 1	○ 0.5/1000
○ 2003. 1. 1	○ 0.3/1000
○ 2004. 1. 1	○ 0.3/1000
○ 2005. 1. 1	○ 0.4/1000
○ 2006. 1. 1	○ 0.4/1000
○ 2007. 1. 1	○ 0.4/1000
○ 2008. 1. 1	○ 0.4/1000
○ 2009. 1. 1	○ 0.4/1000
○ 2010. 1. 1	○ 0.8/1000
○ 2011. 1. 1	○ 0.8/1000
○ 2012. 1. 1	○ 0.8/1000
○ 2013. 1. 1	○ 0.8/1000
○ 2014. 1. 1	○ 0.8/1000
○ 2015. 1. 1	○ 0.8/1000
○ 2016. 1. 1	○ 0.6/1000
○ 2017. 1. 1	○ 0.6/1000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과 및 징수실적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증 감 ¹⁾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합계	26,604,272	3,460,364	20,950,138	3,078,804	5,654,134	381,560	89.0
2017	2,387,579	348,629	1,946,891	301,805	440,688	46,824	86.6
2016	2,324,683	348,154	1,885,609	301,331	439,074	46,823	86.6
2015	2,195,035	413,766	1,815,305	361,008	379,730	52,758	87.2
2014	2,026,076	393,315	1,643,961	343,501	382,115	49,814	87.3
2013	1,876,573	367,034	1,545,198	322,732	331,375	44,302	87.9
2012	2,108,628	330,375	1,538,637	296,783	569,991	33,592	89.8
2011	2,036,103	279,282	1,761,092	248,700	275,011	30,582	89.0
2010	1,473,915	216,807	1,206,418	208,736	267,497	8,071	96.3
2009	1,419,766	116,962	1,148,841	110,999	270,925	5,963	94.9
2008	1,393,041	113,461	1,083,107	106,370	309,934	7,091	93.8
2007	1,346,915	105,659	1,020,556	97,934	326,359	7,725	92.7
2006	1,279,051	99,788	942,304	90,985	336,747	8,803	91.2
2005	1,223,209	92,108	859,617	82,409	363,592	9,699	89.5
2004	1,283,019	70,985	895,600	60,845	387,419	10,140	85.7
2003 이전	2,230,679	164,039	1,657,002	144,666	573,677	19,373	88.2

주1: 사업주의 부담금 미납으로 인해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 건수는 부과 사업장수

※ '14년이후 부과징수금액은 사업주 부담금, 가산금, 연체금의 합계.(14년이전은 순수부담금)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계	301,805	2,776,999	
근로복지공단	37,363	1,142,697	
국민건강보험공단	264,442	1,634,302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임금채권보 장기금	301,331	308,717	301,805	474	전년 대비 부과대상 사업장 62,896개소 증가에 따른 부담금 징수실적 소폭 상승

※ 2016년 실적= 기재출한 2016년도부담금운용보고서상 숫자와 일치, 2017년 계획= 기재출한 2017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상 숫자와 일치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국가	임금채권보장기금	100.0	301,805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 제18조제1항제2호

□ 부담금의 사용명세

○ 법정 사용용도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 임금채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용지원 3.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금 4.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지원 5.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체불임금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 지원 6.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7.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9조

○ 사용명세 : 임금채권보장기금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5,839	8,961	합 계	5,839	8,961
○ 부담금	2,999	3,006	○ 사업비	4,004	4,067
○ 정부내부수입	44	2,669	- 채당금지급	3,687	3,724
○ 기 타	2,796	3,286	- 무료법률구조지원	242	257
- 가산금	1	1	- 채당금조력지원	2	2
- 기타경상이전수입	1,143	1,062	- 채불청산지원사업	73	84
- 기타이자수입및재	200	141	주 용자		
산수입			○ 사업운영비	118	117
- 여유자금회수	1,437	2,055	○ 기 타	1,717	4,777
- 용자원금회수	15	27	- 공자기금예탁	1,000	2,000
			- 여유자금운용	717	2,777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은 최근의 경기 하락, 산업구조 개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존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상습적 임금체납 등의 불성실 기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방지대책 마련과 부담금 납부실적이 평균 수준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17년 기준 여유자금운용액(공자기금예탁 포함)은 4,777억원으로, 2016년의 체당금 지급액이 3,687억원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과다한 측면도 있음.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과 근로자 실직 시 생계보호대책 미흡으로 인해 부담금 요율인하 가능성은 낮으나 최저임금액 인상 등 사업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행 부과율(0.6/1,000)이 적정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의해 전년도 체당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5년간(2013~2017년) 부담금 징수실적은 86.6~89.0%로 대체로 양호하나 본 부담금 부과목적이 퇴직 근로자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임을 고려할 때 원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향후 징수실적 향상 노력이 필요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 목적이므로 부담금 부과 타당함
 - 기업도산에 따른 임금채권의 확보를 사회보험의 원리에 의거 전체 사업주의 부담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부담금 필요
- 최근 5년간(2013~2017년) 부담금 징수실적(부과대비)은 86.6~89.0%로 대체로 양호하나 본 부담금 부과목적이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임을 고려할 때 원래의 목적달성을 위해 향후 징수실적 향상 노력이 필요함
 - 상습적 임금체납 등의 불성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구체적 방안과 부담금 납부실적이 평균 수준보다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징수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구성되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체당금 지급, 임금채권행사 비용지원, 출연금,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지원 및 체불임금지급 관련 사업주 지원 등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음
- 부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의 법정 사용용도는 관련 법률에서 다음의 7가지로 규정하고 있음(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9조)
 -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임금채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하여 임금채권을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용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근로복지공단)에의 출연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조력 비용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에 따른 채불임금 등 지급을 위한 사업주 용자 지원
-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운용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2017년 기준 여유자금운용액(공자기금예탁 포함)은 4,777억원으로, 2016년의 해당금 지급액이 3,687억원임을 고려하면 다소 여유가 있음
 - 최근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과 근로자 실직 시 생계보호대책 미흡으로 인해 부담금 효율인하 가능성은 낮으나 최저임금액 인상 등 사업체 경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현행 부과율(0.6/1,000)이 적정함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의해 전년도 해당금의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부담금 비율은 0.8/1000(2010~2015년)이었으나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는 0.6/1000로 인하된 효율 적용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2017년 기준 감면율(%)은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 설정 등으로 지급 보장되는 비율(최대 50%)”로서 적정함

- ☐ 부담금 감면사유는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임
-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현행 부담금(임금채권보장기금)과 중복되는 부담금은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 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

법령명	내 용
법률	부담금 부과·징수근거 및 징수대상(제9조제1항) 부담금 금액산정기준(제9조제2항, 제3항) 부담금 경감(제10조) 부담금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제26조)
시행령	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절차(제12조) 부담금비율 고시(제13조) 부담금경감대상 사업주 기준, 경감절차(제14조, 제15조) 부담금 경감기준 고시(제16조)
시행규칙	부담금 경감 신청 및 통지(제9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3항에 따른 체당금(일반체당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0호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 개정·고시 (시행일자: 2017.7.1)

□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4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심판법 제27조)
- 근로복지공단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송달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의하여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 부담금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반환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주 계좌로 입금 조치(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보험료징수법 제23조)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0년 1월 13일(1991년 1월 1일 시행)

2) 부과목적

- ☐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증진을 도모함

< 부과목적 >

부과목적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미고용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는데 사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제33조, 제68조

3) 부과요건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함
- 단, 동법 제33조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 의무고용률의 경우 2018년 현재 국가·지자체(공무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3.2%, 민간사업주와 국가 및 지자체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9%임

〈 부과요건 〉

부과요건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공무원 아닌 근로자를 고용한 국가 및 지자체 포함) 및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월평균 상시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을 기준으로 적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제28조의 2, 제33조, 제79조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산정기준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의무고용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	<p style="text-align: center;">○ 1인당 장애인고용부담금(부담기초액)812천원(2017년), 단, 2018년은 945천원임.</p> <p>-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1인당 부담금(부담기초액) 860.7천원, 단, 2018 년은 1,001.7 천원임.</p> <p>-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1인당 부담금(부담기초액) 974.4천원, 단, 2018 년은 1,134천원임.</p> <p>-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1인당 부담금(부담기초액) 1,136.8천원. 단, 2018년은 1,323천원임.</p> <p>-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1인당 부담금(부담기초액)은 1,352천원. 단, 2018년은 1,573.8천원임.</p>	<p style="text-align: center;">의무고용 미달장애인수 ×부담기초 액 ×개월수</p>	<p style="text-align: center;">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33조</p>

□ 가산금 등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가산금은 부담금의 100분의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연체금	연체금은 체납금의 1,000분의 12(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 연체금 추가 징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강제징수절차	제37조 적용,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가산금은 국세의 가산세와 성격이 같으며 납기 도과 시 부과되는 연체금이 국세의 가산금과 유사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제절차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행정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행정절차법」 제25조)
- 행정청(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반환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주 예금계좌에 입금조치(「국고금 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2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동 시행령 37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 징수 절차 등

징수절차 및 사후관리	관련법령
○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5항
○ 사업주가 정한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담금을 징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6항
○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의 금액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과 다르거나 거짓된 신고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7항

□ 부담금 감면

감면사유 (또는 감면대상)	감면율(%)	관련법령
○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고용부담금 감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고용 직업재활시설 등의 총 매출액 대비 고용의무사업주의 도급 등에 의한 도급액의 비율에 해당연도 부담기초액과 최저임금이상 장애인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 - 고용의무 사업주에 대한 부담금 감면은 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 총액의 100분의 60, 도급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부담금 변천현황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1.1.1.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민간부문 장애인미고용시 부담금 부과(부담기초액 120천원)
○ 1992.1.1.	○ 부담기초액 130천원
○ 1993.1.1.	○ 부담기초액 138천원
○ 1994.1.1.	○ 부담기초액 149천원
○ 1995.1.1.	○ 부담기초액 159천원
○ 1995.8.4.	○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시 부담금 감면제도 도입
○ 1996.1.1.	○ 부담기초액 173천원
○ 1997.1.1.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1998.1.1.	○ 부담기초액 190천원
○ 1999.1.1.	○ 부담기초액 202천원
○ 2000.1.1.	○ 부담기초액 207천원
	○ 부담기초액 216천원
○ 2000.7.1.	- 고용률 1%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53천원
○ 2001.1.1.	○ 연계고용대상시설에 표준사업장 추가
	○ 부담기초액 273천원
○ 2002.1.1.	- 고용률 1%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316천원
○ 2003.1.1.	○ 부담기초액 392천원
○ 2004.1.1.	○ 부담기초액 437천원
○ 2004.1.29.	○ 부담기초액 482천원
○ 2005.1.1.	○ 연계고용대상시설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추가
	○ 부담기초액 500천원
	- 고용률 1%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50천원 가산
○ 2006.1.1.	- 중증장애인 고용시 1인당 부담기초액 250천원 감액
	○ 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300인 이상 → 200인 이상)
○ 2007.1.1.	- 업종별제외율 폐지에 따른 부담금부과 특례적용
○ 2009.1.1.	○ 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200인 이상 → 100인 이상)
	○ 부담기초액 510천원
	- 고용률 1%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55천원 가산
○ 2010.1.1.	- 중증장애인 고용시 1인당 부담기초액 255천원 감액
	○ 부담기초액 530천원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65천원 가산
	○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
	-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일 경우 2배수 인정하되, 월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배수 인정)
	- 중증장애인 감면제도는 폐지
	○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조정
	- 민간사업주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공무원 아닌 사람) * 2.3%('10년~'11년), 2.5%('12년~'13년), 2.7%('14년 이후)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 3%(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민간과 동일) * '12년까지 의무고용률 3%와 2.3%(2.5%) 차액의 1/2 감면
○ 2011.1.1.	○ 연계고용감면 상한금액 설정
	- 연계고용감면금액을 의무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총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면

년 월 일	변 천 내 용
○ 2011.7.1.	다만, 2010년 100분의 100, 2011년 100분의 75, 2012년 100분의 50로 순차적으로 적용 ○ 200인이상~300인미만 사업주의 부과특례 감면 종료 ○ 부담기초액 560천원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80천원 가산 ○ 100인이상~200인미만 사업주의 부과특례 감면 종료 ○ 미고용시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 조정(2011년 903천원)
○ 2012.1.1.	- 장애인을 상시 1명 이상 고용하지 아니한 달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 다만, 상시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시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2013.1.1.	○ 부담기초액 590천원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295천원 가산
○ 2014.1.1.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95만 7천원 (공공기관 및 상시 200인 이상 고용사업주) ○ 의무고용률 2.3%→2.5% 상향 - 민간 및 국가·지자체(공무원 아닌 근로자), 기타공공기
○ 2015.1.1.	관 ○ 부담기초액 626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56.5천원 가산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313천원 가산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1,015,740원
○ 2016.1.1.	○ 부담기초액 670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67.5천원 가산 - 고용률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335천원 가산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1,088,890원
○ 2017.1.1.	○ 부담기초액 710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781천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852천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923천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1,166,220원 ○ 부담기초액 757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832.7천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908.4천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984.1천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1,260,270원 ○ 부담기초액 812천원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860.7천원

년 월 일	변 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974.4천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136.8천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1,352,230원 ○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수정신고 제도의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한 고용부담금이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2월말 까지 오류사항을 스스로 정정할 기회를 부여하고, 수정신고기한 내 오류를 정정한 경우 가산금을 100분의 50으로 감면 - 2017년6월28일 시행 ○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시 카드수납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의 납부편의를 증진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담금의 체납을 최소화하고자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다양화 함 - 2017년6월28일 시행 ○ 부담기초액 945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률 1/2이상 3/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001.7천원 - 고용률 1/4이상 1/2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134천원 - 고용률 1/4미만인 경우 부담기초액 1,323천원 - 장애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달 부담기초액: 1,573,770원 - 2018년1월1일 시행 ○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 한도를 부담금 납부 총액의 50%에서 60%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8월9일 고시 개정, 2018년도 부담금 발생분부터 적용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 부과·징수실적

i)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증감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88,587	4,330,229	83,924	4,195,179	4,663	135,050	96.9
2017	8,439	470,032	7,996	453,236	443	16,796	96.4
2016	8,283	449,178	7,877	434,718	406	14,460	96.8
2015	8,247	428,433	7,945	418,087	302	10,346	97.6
2014	7,662	351,962	7,373	341,958	289	10,004	97.2
2013	7,678	326,515	7,403	318,777	275	7,738	97.6
2012	7,331	250,506	7,034	243,466	297	7,040	97.2
2011	6,778	219,130	6,512	214,384	266	4,746	97.8
2010	6,119	149,947	5,880	146,086	239	3,861	97.4
2009	6,372	151,771	5,890	144,860	482	6,911	95.4
2008	6,123	151,240	5,644	143,249	479	7,991	94.7
2007	3,319	156,716	3,034	151,269	285	5,447	96.5
2006	2,364	139,912	2,180	136,298	184	3,614	97.4
2005	2,321	129,140	2,146	125,910	175	3,230	97.5
2004	2,311	121,873	2,142	118,669	169	3,204	97.4
2003 이전	5,240	833,874	4,868	804,212	372	29,662	96.4

주1」: 미수납 및 불납결손한 사유로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ii)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백만원)

징수기관	징수실적		비 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서 울	127,752	973,581	
서울남부	137,627	1,068,936	
부 산	12,535	83,645	
대 구	9,744	87,031	
인 천	10,675	66,270	
광 주	5,483	48,933	
대 전	11,732	96,409	
울 산	6,902	37,085	
경 기	73,581	471,517	
경기북부	4,436	24,410	
강 원	4,738	24,602	
충 북	7,524	44,487	
충 남	9,145	28,062	
전 북	3,636	23,869	
전 남	4,565	11,523	
경 북	8,772	31,510	
경 남	11,496	70,387	
제 주	2,894	9,843	
고용노동부*		539,845	'00년 이전 징수액 누계
합 계	453,236	3,741,945	

iii - i)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 (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장애인 고용 부담금	434,718	415,404	453,236	18,518 (4.0%)	의무고용률상향('16년 2.7% → '17년 2.9%) 및 부담기초액 증가('16년 757천원 → '17년 812천원)

iv)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453,236	
국가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100	453,236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69조

☐ 부담금의 사용명세

i)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2.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사업주 지원 3. 직업지도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한 경비의 용자·지원 4.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비·훈련수당 5.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6.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

ii) 부담금 귀속 자원별 운영현황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7,483	8,339	합 계	7,483	8,339
○ 자체수입	4,544	4,737	○ 사업비	2,269	2,563
- 부담금	4,347	4,532	- 장애인고용장려금	1,582	1,641
- 가산금	7	8	- 출연사업비 등	687	922
- 연체금	5	4	○ 기금운영비	529	530
- 융자금회수	7	1	- 사업운영비	524	523
- 기금운용수입	86	122	- 기금관리비 등	5	7
- 기타수입	92	70	○ 정부내부지출	0.3	500
○ 정부내부수입	250	7	- 복권기금반환금	0.3	0.2
- 일반회계전입금	250	-	- 공자기금예탁금	0	500
- 예탁이자수입	0	7			
○ 여유자금운용회수	2,689	3,595	○ 여유자금운용	4,685	4,746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부담금 부과 타당성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하거나 이를 지키기 어려운 사업주가 정부에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으로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사업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있음
- 헌법재판소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부담금에 대해 합헌 판결을 한 바가 있고(헌재 2012. 3. 29. 2010헌바432), 최근 8년간(2010~2017년) 부담금 징수실적도 96% 이상으로 매우 양호함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보합 또는 인상하는 요인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구 증가, 장애범주 확대, 장애의 중증화 및 고령화,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부담금액 인하는 불가함. 이와함께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미고용기업간의 형평성 그리고 장애인고용 이행효과를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함

-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정부정책에 순응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우수한 장애인을 우선함. 따라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체 기금지출 사업비 중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이나 직업영역확대 관련부문에 보다 집중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2017-2018년)이기 때문에 인구비율 5%에는 아직 미달됨. 따라서 과거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 적합직종개발, 기업맞춤형 장애인력개발, 장애인력 고급화 방안 등의 정책과 프로그램 조사연구·개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하거나 이를 지키기 어려운 사업주가 정부에 내야 하는 고용 부담금으로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여 장애인고용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간에 장애인고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사업간 형평성 있게 조정하고 장애인고용의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있음
 -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데 사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조, 제33조, 제68조).
 -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방법의 적절성도 인정된다” 고 판단(헌재 2012. 3. 29. 2010헌바432).
- ☐ 최근 8년간(2010~2017년) 부담금 징수실적도 96% 이상으로 매우 양호
- ☐ 조세로의 전환 가능성이 없다고 사료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 부담금 사용용도가 법정용도에 부합함
-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사용용도는 관련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용자·지원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용자·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용자·지원
-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용자·지원
-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용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용자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 부담금 집행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법률에서 정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고 있음

○ 다만, 2018년 기금 지출내역에서 사업비 중 장애인고용장려금이 1,64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2,563억원)의 약 64%로 그 비중이 매우 높고, 최저임금 인상,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13~’17년 동안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연평균 9.2%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연평균 6.8% 증가에 그쳐 향후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지원인, 지원고용 등의 사업비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양호함

- 제3항에서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장애인고용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함.
- 부담기초액 관련 장애인고용 비용은 ①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②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③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2항, 제3항).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특히 중증) 장애인고용 어려움을 덜어주고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100인 미만 사업장의 부담금 납부의무 예외도 사업장 규모의 상대적 영세성을 감안하여 평가할 때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라 하더라도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유사한 부담금이나 조세는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고시에서 상세히 규정

법령명	내 용
법률	부담금 부과·징수근거 및 징수대상(제33조제1항) 부담금 금액산정기준, 기초액(제33조제2항, 제3항) 부담금 감면(제33조제4항) 부담금신고납부 및 직권조사(제33조제5항, 제6항) 부담금 허위신고시 추징 및 환급(제33조제7항) 부담금 분할납부(제33조제8항) 부담금 과오납금 충당 및 환급(제34조)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제35조) 부담금 독촉 및 채납처분(제37조) 부담금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제40조, 제41조) 부담금 결산처분(제42조)
시행령	부담금의 납부절차(제36조) 부담금 환급통지절차, 분할납부절차, 과오납금 충당과 환급절차, 연체금 징수절차(제36조부터 제40조) 가산금 및 연체금징수 예외(제41조)
시행규칙	부담금의 신고·납부서식(제15조) 부담금의 환급 통지서, 분할납부신청서(제16조 및 제17조) 과오납금 충당신청서(제18조) 부담금의 징수 및 추가징수의 통지서, 독촉장(제19조, 제20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65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 권리구제절차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처분에 오기, 오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

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행정절차법」 제25조)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과오납한 부담금이 있을 경우 사업주에게 반환내역을 통보하고 사업주 예금계좌에 입금조치(「국고금 관리법」 제15조, 제16조, 제2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동 시행령 37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 연장 가능(「행정심판법」 제45조)

제9장 중소벤처기업부

1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공표일은 2006년 3월 3일, 시행일은 2006년 7월 1일

2) 부과목적

□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출금의 일정비율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토록 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제7조제3항

3) 부과요건

□ 다음에 해당되는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출연기준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부담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3항, 제2조의 4)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위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금융회사등은 제1금융회사(이하 은행등)와 서민금융회사(이하 농업협동조합등)로 구분됨
- 농업협동조합등은 해당 농업협동조합등이 소속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를 거쳐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은 다음과 같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 출연요율 >

구분	산정기준	출연요율(%)	산출식
은행등	매월말 출연기준대출금 월중평균잔액	$0.2/1,000 \pm 0.004$ (차등요율)	출연기준대출금 월중 평균잔액 × 출연요율 × 일수 / 365
농업협동 조합등	매월말 출연기준대출금 월중평균잔액	농협 : $0.37/1,000$ 수협 : $0.54/1,000$ 저축은행 : $0.4/1,000$ 새마을금고 : $0.82/1,000$ 신협 : $0.71/1,000$ 산림조합 : $0.77/1,000$	출연기준대출금 월중 평균잔액 × 출연요율 × 일수 / 365

☐ 가산금 등 : 해당사항 없음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권리구제 절차 : 본 출연금을 부과 받은 자가 부과된 출연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가 법령이나 내규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징수 절차

- 금융기관등은 출연하는 매월분의 출연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중앙회에 납

부하며, 납부할 때에는 출연금계산서, 월중 평균잔액을 증명하는 서류, 대출금명세서,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제출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제2항과 제3항)

- 금융회사등은 재단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출연 대상금액, 수납시기 및 사후 정산방법 등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융회사등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납부할 출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제4항)
-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부터 10년 이내로 하며,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제5항 및 제6항)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출연금 부과 및 징수실적

< 연도별 출연금의 징수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증감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5,694	1,704,533	5,694	1,704,533	-	-	100
2017	497	130,740	497	130,740	-	-	100
2016	510	200,036	510	200,036	-	-	100
2015	552	242,277	552	242,277	-	-	100
2014	551	222,505	551	222,505	-	-	100
2013	530	204,802	530	204,802	-	-	100
2012	618	200,746	618	200,746	-	-	100
2011	543	200,126	543	200,126	-	-	100
2010 이전	1,893	303,301	1,893	303,301	-	-	100

< 징수기관별 출연금의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0,740	1,573,793
합 계	1,704,533	

< 2017년도 출연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계	200,036	130,740	130,740	△69,296 (△34.6%)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금융기관등 출연금	200,036	130,740	130,740	△69,296 (△34.6%)	햇살론 출연금 납부 종료에 따라 실제 출연금 감소

□ 출연금의 귀속주체

- 은행등과 농업협동조합등이 납부한 출연금의 배분기준은 중소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4)
- 은행등이 납부한 출연금이 재단과 중앙회에 배분되는 기준은 정부가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 등을 고려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4제1항)
 - 은행등 출연금은 재단과 중앙회간 60대 40의 비율로 배분(중소기업청 고시)
- 농업협동조합등이 납부한 출연금이 재단과 중앙회에 배분되는 기준은 정부가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의 규모, 농업협동조합등을 채권자로 하는 재단 및 중앙회의 신용보증규모, 재단이 농업협동조합등에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중앙회가 재단에 지급한 보전금의 규모를 고려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4제2항)
 - 농업협동조합등 출연금은 사업자 보증재원의 30%, 근로자 보증재원으로 70%를 배분하고, 이중 사업자 보증재원은 재단 20%, 중앙회 80%로 재배분(중소기업청 고시)

< 분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30,740	
은행등 출연	① 지역신용보증재단	60	52,483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9호 제1호
	② 신용보증재단중앙회	40	31,302	
	소계 1		83,785	
농업협동 조합등 출연	① 사업자보증	30	14,086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9호 제2호
	- 지역신용보증재단 (원보증)	20	2,817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80	11,269	
	② 근로자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70	32,869	
	소계 2		46,955	
기 타			-	

□ 출연금의 법적사용용도

- 본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의 재원으로 조성됨(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제1항 및 제35조의6제1항)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됨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중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됨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③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2. 대외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회수 업무 5.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6. 재단에 대한 재보증에 관한 사항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8.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9.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 행사 등의 업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제3항

□ 출연금의 사용명세

< 지역신용보증재단(16개)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7,755	6,904	합 계	7,755	6,904
○ 출연금	2,790	2,324	○ 대위변제	3,212	3,571
- 정부	20	-	○ 재보증료	823	776
- 지자체	1,268	790	○ 관리업무비	1,428	1,525
- 금융기관	1,498	1,470	○ 기타	882	212
- 기타	4	64	○ 기본재산	1,410	820
○ 보전금	1,734	1,777			
○ 보증료	1,862	1,819			
○ 운용수익	639	630			
○ 기 타	730	354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3,645	2,541	합 계	3,645	2,541
○ 정부출연금	600	535	○ 손실보전금 등	3,524	1,967
○ 금융기관출연금 등	1,458	827	○ 관리업무비	113	110
○ 재보증료 등	893	871	○ 기타	8	11
○ 기타(운용수익 등)	270	308	○ 기본재산(운용)		453
○ 기본재산(조달)	424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부담금 부과목적의 유효성

-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고,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으로 채무보증을 위한 재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금융기관이라는 특정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구별되어 부담금 부과 타당성이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효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함

○ 타 부담금과의 중복성·유사성

- 신용보증출연금과 지원목적이 유사하며, 납부의무자의 중복부담 그리고 지원대상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용보증출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담보력이 취약한 대상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신용보증출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보증기금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 동일하여 중복부담의 문제가 있음
- 신용보증기금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채무보증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가 중복되어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

- 일반적인 부담금 부과원칙에 부합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 본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함
- ☐ 본 출연금은 담보력이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의 채무보증이라는 특별한 공적과제를 위하여 부과되며,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출연금이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효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함
- ☐ 규모가 영세하고 담보능력마저 취약한 금융소외계층의 채무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공적 책임은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본 출연금의 부과목적은 장기적으로 존재함
- ☐ 일몰제 관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제5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이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는 기간은 출연 시작일로부터 10년 이내로 한다’와 제5조의3제6항의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 종료일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되, 출연 종료일 3개월 전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등에 통보한다’의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금에 대해 일몰제가 적용됨
 - 정부정책에 따라 2010년 7월부터 5년간 일몰제를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농업협동조합등의 출연금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전되어 본 재단과 중앙회의 수입재원으로 활용되지 않음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본 출연금은 16개의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배분되어 재단과 중앙회의 기본재산을 구성하며, 재단과 중앙회의 업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및 제35조제3항)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경영지도, 구상권의 행사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과 같이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출연금 부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을 위한 모니터링은 지속되어야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9호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이 재단의 업무가 광범위하게 규정될 우려가 있어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업무는 신용보증·신용조사 기법의 연구·개발·보급과 신용정보의 관리,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재단의 공동사업 및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업무,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연수, 재단에 대한 채보증에 관한 사항,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 및 구상권행사 업무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단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제3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제3항제7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과 같이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본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부과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출연금 부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을 위한 모니터링은 지속되어야 함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제8호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과 같이 재단의 업무가 광범위하게 규정될 우려가 있어 중앙회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게 존재하기 때문에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금융기관 출연금은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으로 이루어짐. 법정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출연금(부담금 평가대상 출연금)이며, 임의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별로 금융회사들과의 개별 협약으로 인한 출연금임

- 중앙회와 재단의 수입지출표에 인식된 금융기관 출연금 수입은 법정출연금과 임의출연금 합계액이기 때문에 본 부담금 평가대상이 되는 법정출연금 수입과 지출의 연계성을 추적하기 어려움 점이 있음
- 중앙회의 총지출대비 사업비의 비중이 2016년 96.7%(3,524억원/3,645억원)이고 2017년 77.4%(1,967억원/2,541억원)으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햇살론 대위변제금이 급격히 감소한 것에 기인함. 중앙회의 사업비 비중은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함
 - 중앙회가 2017년도에 집행한 사업비(손실보전금 등) 1,967억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손실보전금 1,777억원, 햇살론(근로자보증) 대위변제금 189억원임. 2016년도에 집행한 사업비 3,524억원은 재보증손실보전금 1,603억원과 햇살론 대위변제금 1,921억원임
- 16개 신용보증재단의 총지출 대비 사업비(대위변제+재보증료) 비중은 2016년 52.0%이고 2017년 62.9%로 증가됨. 한편 관리업무비는 2016년 1,428억원에서 2017년 1,525억원(인건비 959억원, 경비 566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관리업무비 비중이 2016년 18.4%에서 2017년 22.1%로 소폭 증가함. 지역신용보증재단이 16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인건비등의 관리업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있는 수준이며 과도한 관리업무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

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출연기준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에 대해 은행등과 농업협동조합등으로 구분하여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하여 출연금을 부과하며, 출연요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규정됨
 - 출연기준대출금 및 출연요율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기준에 따라 출연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 부과 명확성은 유지됨
 - 법령에 부담금 부과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금융회사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출연요율이 달라진 환경변화 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차등요율의 근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해당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신용보증출연금과 지원목적이 유사하며, 납부의무자의 중복부담 그리고 지원 대상의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용보증출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은 담보력이 취약한 대상에 대한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함(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신용보증출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의 납부의무자는 신용보증기금법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 동일하여 중복부담의 문제가 있음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
<p>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p> <p>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p> <p>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p> <p>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p> <p>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p> <p>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p>4.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p> <p>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p> <p>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p> <p>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p> <p>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p> <p>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 외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해당되는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및 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p>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및 제3조에서 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적 보증을 명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그 대상이 됨. 한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때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의미함. 결국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주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소기업)이 포함되어 중복지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신용보증출연금은 훨씬 광범위한 범주의 기업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하며, 본 출연금은 담보력이 특히 취약한 소기업, 소상공인 뿐 만 아니라 개인의 채무보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부담금으로 존치될 필요성은 있음. 다만 중복지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은 이루어져야 함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

< 부담금 관련 법률 규정화 >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3항 내지 제5항	▪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해 연율 1/1,000 범위안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
2. 시행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별표>	▪ 출연기준대출금, 출연비율·시기 및 방법, 출연금의 배분기준 및 시기 ▪ 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3. 시행규칙	-	-
4. 고시·훈령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6-39호('16.7.21)	▪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및 출연 종료일
5. 기타		

☐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10장 산림청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0년

2) 부과목적

-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여 조림, 숲가꾸기 등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을 조성(산지관리법 제19조)

3) 부과요건

- ☐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부과(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 납부의무자는 골프장·공장·택지·주택 등 산림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허가 등 주된 행정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개발사업시행자)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p>○산지전용 면적에 대하여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대기정화·토사유출방지·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p>	<p>2017년 단가 -준보전산지 4,250원/㎡ -보전산지 5,520원/㎡ -산지전용 제한지역 8,500원/㎡</p>	<p>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 해당 산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1000분의10)</p>	<p>산정기준 :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4항</p>

☐ 가산금

○ 해당사항 없음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제절차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사유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급절차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법 제19조의2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

□ 강제징수절차

- 국세채납 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채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증감주1」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386,633	2,406,763	372,261	1,795,035	14,358	610,960	74.6
2017	29,068	216,429	27,644	163,712	1,424	52,629	75.6
2016	28,303	199,272	26,706	148,958	1,597	49,683	74.8
2015	24,766	181,595	23,534	118,956	1,212	62,639	65.5
2014	21,756	158,074	20,557	100,084	1,199	57,990	63.3
2013	18,926	123,182	17,465	85,616	1,461	37,527	69.5
2012	19,666	138,007	18,759	92,259	907	45,738	66.9
2011	18,179	142,790	17,104	102,081	1,075	40,709	71.5
2010	17,832	160,194	17,617	114,475	215	45,719	71.4
2009	24,468	163,265	23,622	124,929	852	38,336	76.5
2008	16,693	163,653	16,094	135,961	599	27,692	83.1
2007	16,147	147,820	15,739	113,826	408	33,994	77.0
2006	18,042	111,989	17,366	86,646	676	25,343	77.4
2005	18,225	116,520	17,729	91,871	496	24,649	78.8
2004	17,304	108,538	17,048	80,764	256	27,774	74.4
2003 이전	97,258	275,435	95,277	234,897	1,981	40,538	85.3

※ 2017년도 시효완성에 따른 불납결손 처리액 : 87백만원

□ 부담금의 사용명세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임업진흥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출연·용자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3. 임업진흥사업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전출금 4. 기타 임업진흥사업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의2 제2항

□ 부담금 귀속 재원의 사용명세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합 계	8,936	9,291	합 계	8,009	8,39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90	1,637	○나무심기	927	999
○임목죽매각대금	211	285	○숲가꾸기	2,476	2,551
○일반회계 전입금	6,099	5,640	○산림사업종합자금	751	671
○전년도이월금	678	927	○청정임산물이용증진	554	621
○재산수입	7	1	○산림병해충방제	1,225	1,133
○기 타	451	801	○기타	2,076	2,419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의 부담금 부과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부합하며, 부과목적과 사용용도에 인과관계가 있음
 - 산림자원의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로 파괴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며, 부과목적과 사용용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
-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은 적절함
 - 부과요율은 노무비 및 간접원가의 상승 등을 고려한 면적당 고시단가에 개별공시지가의 일부를 가산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입지가 좋은 산지의 개발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어 적절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지의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을 고려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부과요율은 적절함
 - 산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어 납부자간 형평성과 부과범위의 적절성의 문제가 없음
- 부담금 부과목적 및 사용용도를 고려할 때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이 낮으며, 법률로 규정화가 되어 있음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 부담금 부과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하며,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것은 타당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체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여 조림, 숲 가꾸기 등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담금 부과는 타당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은 골프장·공장·택지·주택 등 산림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로 파괴되는 산림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산림자원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부합함
 - 산림개발로 인한 파괴된 산림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대체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해 사용되므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것은 타당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 부담금 부과목적과 부담금의 사용용도는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 적정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은 산지개발로 파괴된 산림자원을 대체하기 위한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명시된 임업진흥사업에 사용되어 사용용도는 적정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은 적절함

- 부담금 부과대상은 적절하며, 부담금 부과목적과 연관성이 있고, 납부자간 형평성 및 부과범위의 적절성 등의 문제는 없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은 산지의 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어 부과목적과 부과대상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음. 또한 산지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만 부과되어 납부자간 형평성, 부과범위의 적절성도 문제가 없음
-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대체산림자원조성을 위한 노무비 및 간접원가와 공시지가 등의 요인을 반영하고 있어 적절함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의 부과요율은 산지전용면적 \times (단위면적당 금액+해당 산지 개별공시지가의 10/1000)이며, 면적당 고시단가에 대체산림자원조성 등 임업진흥사업의 수행을 위한 노무비 및 간접원가 상승요인 등을 반영하고 있음. 또한 부담금에 해당 산지의 공시지가 중 일부를 가산하여 부과함으로써 입지가 좋은 산지개발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일부를 회수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사용할 수 있어 적정함
 -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산지의 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부담해야 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을 고려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부과요율은 적절함
 - 산지전용허가 및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개발사업시행자만이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자간 형평성과 부과범위의 적절성에도 문제가 없음
- 부담금의 징수율은 전체 기간동안 74.6%이며,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 현재 부담금 미납시 산지전용허가 등의 중지명령제도 도입, 분할납부 제도 확대(3년→4년, 3회→4회, 10억→5억), 납부기간 연장 및 신용카드 납부 등을 시행하고 있음. 또한 농지법의 농지보전부담금과 유사하게 부담금 납부를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전까지 납부 의무화하고, 납부 확인 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의 감면이나 면제조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 중요산업시설, 광물의 채굴 및 간이농림어업용 시설 등으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그리고 해당 산지개발의 공익성 등을 반영하여 감면이나 면제조항을 규정하여 적절함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유사한 부담금과 통합운영 가능성은 낮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과 유사한 부담금으로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및 대체초지조성비 등이 있으나 부담금의 부과목적과 대상자, 그리고 부담금 사용용도 등이 상이하여 통합운영 가능성은 낮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 법률 규정화 여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의 부과 근거, 부과 목적, 부과 대상, 산정기준 및 부담률, 부담금 감면 및 면제기준, 법정 사용용도 등을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어 적절함
- ☐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의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환급사유, 환급방법 및 절차 등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및 산지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강제징수절차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국세체납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적절함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95년

2) 부과목적

☐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임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징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로 납입하여 산림발전의 재원으로 활용

○ 세계무역기구 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동 법 시행규칙 제49조

3) 부과요건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물(밤)을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로 수입하려는 자

○ 납부의무자는 밤을 시장접근물량 양허세율로 수입하는 산림조합중앙회장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요율

<부담금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수입권공매(밤)	수입권 공매 수입이익금 100%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

☐ 가산금 및 연체료

-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따름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제절차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따름

☐ 강제징수절차

- 국세채납 처분의 예에 따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항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과 및 징수실적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3	18,381	23	18,381	-	-	100
2017	1	974	1	974	-	-	100
2016	1	787	1	787	-	-	100
2015	1	506	1	506	-	-	100
2014	1	1,184	1	1,184	-	-	100
2013	1	1,732	1	1,732	-	-	100
2012	1	1,506	1	1,506	-	-	100
2011	1	1,243	1	1,243	-	-	100
2010	1	368	1	368	-	-	100
2009	1	303	1	303	-	-	100
2008	1	978	1	978	-	-	100
2007	1	2,497	1	2,497	-	-	100
2006	1	1,554	1	1,554	-	-	100
2005	1	675	1	675	-	-	100
2004	1	942	1	942	-	-	100
2003 이전	9	3,132	9	3,132	-	-	100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구조 개선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의2

□ 부담금 귀속 재원의 사용명세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사용명세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8	10	계	8	10
법정부담금 -임산물수입이익금	8	10	사업 - 임산물수출촉진	8	10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부담금 부과목적과 사용용도는 인과관계가 있으며,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도 적절함
 - 임산물수입이익금은 임산물수입권의 낙찰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납입하는 낙찰금액이며, 해당 부과금이 임산업발전을 위해 사용되므로 부과대상과 부과목적이 인과관계가 있음. 또한 수입자로 결정된 사업자만이 임산물수입이익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자간 형평성, 부담요율 및 부과범위의 적절성도 문제가 없음
- 임산물수입이익금의 부과목적 및 사용용도를 고려할 때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이 낮음
 - 임산물수입이익금은 임산물수입권의 낙찰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는 사업자가 납입하는 낙찰금액이며, 해당 부과금이 임산물수출촉진만을 위해 사용되므로 유사부담금과의 통합운영가능성은 낮음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 부담금 부과 및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것은 타당함
 - 임산물수입이익금은 WTO 협정에 따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로 수입하려는 자에게 농산물의 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임산물수입권을 공매하여 매각금액 전액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납입함으로써 산림발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과는 타당함
 - 국내 임산업 종사자들은 WTO 협정에 따른 임산물의 수입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임산물수입권의 낙찰자에게 공매금액을 납입 받아 국내 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해당되므로 적정함
 - WTO 협정에 따른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율로 인해 관세가 감소하여 일반회계수입이 감소하지만, 임산물의 시장접근물량 수입으로 인해 이익의 감소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므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납입하는 것은 타당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 부담금 사용용도는 부담금 부과의 목적에 부합하여 적정함
 - 임산물수입이익금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임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이익의 침해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국내 임산업 종사자들이 생산하는 임산물의 수출촉진사업에 전액 사용되어 사용용도는 적정함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은 적절함

- 부담금 부과대상은 적절하며, 부담금 부과목적과 연관성이 있고, 납부자간 형평성 및 부과범위의 적절성 등에 문제가 없음
 - 임산물수입이익금은 임산물수입권의 낙찰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자가 낙찰의 대가로 납입하며, 산림업의 발전에 의해 사용되므로 부과대상과 부과목적이 연관성이 있음. 또한 수입자로 결정된 사업자만이 임산물수입이익금을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자간 형평성, 부과범위의 적절성도 문제가 없음
-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공정경쟁을 통해 공매가 수행되는 경우 적절함
 - 임산물수입이익금은 임산물 수입가격과 국내 판매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자신이 얻게 되는 이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금액이 결정하고 낙찰되므로 부과요율은 적절함. 아울러, 경쟁이 적정수준 이하가 되어 부과목적에 비해 과소하게 부과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예정가격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해당 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유사한 부담금과 통합운영 가능성은 낮음

- 임산물수입이익금과 유사한 부담금으로 농산물수입이익금(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양곡수입이익금(두류), 양곡수입이익금(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농산물수입이익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으나, 부과 목적 및 대상자, 부담금 사용용도 등이 상이하여 통합운영 가능성은 낮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현행 관련 법령에 권리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이 규정되지 않음

- 부과 대상자가 금액을 산출하여 부담내역을 제출하고 납부한다고 하여 부과 대상자의 권리구제절차가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위반됨
- 강제징수절차 및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 제5항의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됨
- 권리구제절차, 강제징수절차, 환급방법 및 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서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함

제11장 원자력안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	------------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1986년

2) 부과목적

- ☐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그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관계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함(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의 1항)
-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발생시키는 원자력안전 관리 수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2의 2항)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의 4항)

< 부과 및 징수기관 >

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부과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징수기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 부과요건

□ 부담금의 부과요건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의 2에 제시되어 있음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2의 내용을 보면 “① 위원회는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규모, 산정기준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발생시키는 원자력안전관리 수요, 관련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수요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부담금 규모,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부담금의 부과대상 >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용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심·검사 ○ 핵연료주기시설 안전 심·검사 ○ 방사성폐기시설 안전 심·검사 ○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 심·검사 ○ 종사자 피폭관리 ○ 수출입요건확인 ○ 면허소지자보수교육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경희대학교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RI/RG 이용업체 등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출입요건신고자 면허소지자	원자력안전법 제111조 제1항, 제111조의2

4) 부과요율 및 가산금

□ 부과요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및 제156조의 2에 제시되어 있음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시되어 있고, 제156조의2에는 부담금의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음

<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담률 >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	○ 투입인력(인.일)당 KINS : 935,960원 KINAC : 666,574원	○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6조 및 제156조의 2
○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 투입인력(인.일)당 KINS 390,000원 KINAC 278,000원		
○ 피폭관리	○ 1년간 1명당 2만원	○ 고시금액 × 증감율 × 종사자수 증가율	
○ 수출입요건확인	○ 요건종류별 차등부과	○ 고시금액×증가율	
○ 면허소지자 보수교육	○ 면허별 차등부과	○ 고시금액×인원수	

□ 가산금에 대한 내용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3에 제시되어 있음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부담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함
-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함
-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10일 이상 6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주어야 함
- 독촉장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부담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국제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음

< 가산금 등 >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3(강제징수), 국제징수법 제21조(가산금)
증가산금	○부담금 및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3(강제징수), 국제징수법 제21조(가산금)
강제징수절차	○국제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3(강제징수)

5) 구제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해당사항 없음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환급방법 및 절차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업무가 변경·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
- 관련근거(법령)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부담금의 환불 및 정산)
- 2017년 환급액 : (건수) 180건 (금액) 91,177,870원

□ 강제징수 절차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 3(강제징수)에 의하면 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 부담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73,105	860,657	73,104	860,654	1	3	99.9
2017	13,490	88,897	13,489	88,894	1	3	99.9
2016	5,566	77,762	5,566	77,762	-	-	100
2015	5,562	67,438	5,562	67,438	-	-	100
2014	4,616	54,766	4,616	54,766	-	-	100
2013	3,653	52,454	3,653	52,454	-	-	100
2012	3,409	51,300	3,409	51,300	-	-	100
2011 이전	36,809	468,040	36,809	468,040	-	-	100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

(단위 : 백만원)

징수기관	징수실적		비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한국원자력 안전재단	88,894	771,760	'15년까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 원에서 징수
합계	88,894	771,760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합 계	77,762	89,226	88,894	11,132 (14.3%)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	74,259	82,503	82,612	8,353 (11.2%)	기준단가 및 투입인력증가 등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을 제외한 자 등	3,503	6,723	6,282	2,779 (79.3%)	기준단가 및 투입인력증가 등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2항 및 제3항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3. 원자력통제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9.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13.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p>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제2항 및 제3항</p>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88,894	
국 가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100%	88,894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제1항 (원자력기금 내 원자력 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원자력기금(안전규제계정) >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997	1,254	계	997	1,254
○ 부담금 수입	778	889	○ 사업비	836	'852
○ 과태료·과징금 등	219	217	○ 기금 운영비	13	13
○ 기 타 - 여유자금회수	-	148	○ 기 타 - 여유자금운용	148	389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 심·검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자력과 관련한 안전규제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공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위탁한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 심·검사의 비용은 공공재원을 통해 지원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재원은 원자력안전관계사업자가 부담금의 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현행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부담금사업의 타당성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원자력의 생산 및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자력관계 사업자에게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것인 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칙적으로 원자력안전관계사업자는 발전용원자로시설 안전 심·검사, 연구용·교육용 원자로시설 안전심·검사, 핵연료주기시설 안전 심·검사, 방사성폐기시설 안전 심·검사,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 심·검사, 종사자 피폭관리, 수출입요건확인, 면허소지자보수교육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서비스를 받았으면 상응하는 대가(인건비 등 소요 경비)를 지불하여야 함
- 다만, 원자력안전관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여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다양한 안전 심·검사를 받을 경우 객관성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공신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위탁한 공공기관에서 공공재원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국가는 안전 심·검사의 비용을 공공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재원은 원자력안전관계사업자로부터 부담금의 형식을 통하여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 부담금부담자의 타당성

- 원자력안전관계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규제의 원인행위를 유발한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차원에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음
- 원자력안전관계사업자는 안전 심·검사의무를 준수할 경우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바 원자력안전관계사업자에게
상응하는 경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됨

- 부담금의 목적과 용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바 조세보다는 현재와 같이
부담금의 형태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함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부담금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할 때 원자력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
전관리, 원자력통제,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안전관리 등에 필
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관리 등에 필요
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
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
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
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
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위원회
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
용의 출연 또는 보조의 용도로 사용됨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은 100%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으로 이전되어
앞에서 살펴본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바 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적정하다고 판
단됨

○ 2017년 징수된 88,894백만원은 모두 원자력기금으로 이전되었음

- 원자력기금은 부담금수입, 과태료·과징금수입, 기타 경상이전수입 등을
종합한 1,25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부담금수입이 65.7%
를 차지하고 있음

- 원자력기금은 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영 등의 용도로 지출되고 있음
- 사업비, 기금운영비, 여유자금운영 등은 모두 원자력안전관리 관련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사용용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부담금 산정기준의 적절성

- 발전용원자로 사업자,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를 제외한 자에게 기준단가 × 업무별 전년도 업무량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바 적절하다고 판단됨
- 피폭관리는 고시금액×증감률×종자자수 증가율, 수출입요건확인 고시금액×증가율, 면허소지자 보수교육은 고시금액×인원수에 의거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는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부담금 부과요율의 적절성

- 부담금 부과요율의 적절성은 기준단가, 고시금액 등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음
- 기준단가, 고시금액 등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에 제시되어 있음
- 기준단가와 고시금액의 결정은 전문가, 유관기관의 합의 등을 통해 결정되며, 대체적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되고 있는바 부과요율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 다만, 현재 부담금 산정기준은 매년 업무별 업무량과 기준단가를 고시를 통해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산정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해당사항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해당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법률규정화여부

-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등에서 부담금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 원자력안전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부과징수의 근거와 대상자, 산정기준,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기준단가, 고시금액 등과 같이 매년 변동이 가능한 내용은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과 같은 고시·훈령에 포함하고 있음
- 법률-시행령-고시·훈령으로 연계되어 있는 법령체계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 법률체계 >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의2 제1항	○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지정·승인·등록 또는 교육훈련을 신청한 자,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판독업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
2. 시행령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6조 및 제156조의2	○ 법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
3. 시행규칙	-	-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4. 고시·훈령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시행령 제156조, 제156조의2에 따라 발전용원자로 사업자등 및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

□ 권리구제절차 마련 여부

- 권리구제절차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4의 “납부의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취지를 고려하고 해당 규정들이 제도로써 갖추어 놓는 것이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7조에 환급방법 및 절차가 제시되어 있으며 2017년 180건 91백만원의 환급이 이루어졌음
 -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이 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업무가 변경·취소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부담금을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철회공문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정산하여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환불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 근거 등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12장 식품의약품안전처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비용부담금
---	----------------------

1. 부담금 개요

가. 기본사항

1) 설치연도 : 2014년 3월 18일(2014년 12월 19일 시행)

2) 부과목적

부과목적	관련 법령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약사법」 제86조제1항

3) 부과요건

부과요건	납부의무자	관련법령
○ 생산 또는 수입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에 공급한 완제의약품	○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	「약사법」 제86조제2항

4) 부과요율 및 가산세

☐ 부담금 산정기준

산정기준	부담률(%)	산출식	관련 법령
○ 기본부담금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1,000분의 1 이내의 일정비율	0.047	의약품 제조업자등의 품목별 생산 액등 × 품목별 계수* × 부담금 부 과요율	「약사법」 제86조의2제2항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별표
○ 추가부담금 전년도 해당 의약품으 로 인한 피해구제급 여액의 100분의 25	25	피해구제급여액 × 100분의 25	

* 품목별 계수 : 1. 일반의약품(0.1), 2. 전문의약품 중 크림제, 연고제, 외용액제 및 그와 유사한 제제 (0.6), 3. 2.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전문의약품(1.0)

☐ 부담금 변천현황

구분	변 천 내 용
○ 2014년 3월 18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주관을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에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으로 변경하고, 그 사업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2015년 11월 23일	2016년도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0.018%→0.027%)
○ 2016년 11월 29일	2017년도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0.027%→0.047%)

☐ 가산금

구 분	내 용	관련법령
가산금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	「약사법」 제86조의2제5항
증가산금	-	
연체료	-	
강제징수절차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약사법」 제86조의2제6항

5) 구체절차 및 강제징수 절차 등 사후관리

□ 구체절차(부담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4)

- 이의신청 절차, 처리기간, 관련근거(법령) 등
 -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내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함
- 환급방법 및 절차, 관련근거(법령) 등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은 이의신청 결과 의약품의 제조업자등이 부담금으로 납입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
- 2017년 환급액 : 46건, 101,303,750원

□ 강제절차(약사법, 제86조의2제6항)

-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나. 부과·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 부과·징수실적

○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과		징수		증감		징수율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2,196	14,283	2,189	14,282	7	0.33	99.99
2017	737	7,772	736	7,772	1	0.03	99.99
2016	702	4,014	700	4,013	2	0.26	99.99
2015	757	2,497	753	2,497	4	0.04	99.99

* 2014년도 이전에는 부과징수 실적이 없으며, 2015년도부터 부담금 부과징수 실시

○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고
	2017년	2016년까지 누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7,772	6,511	
합계	7,772	6,511	

○ 2017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실적(A)	2017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 업	4,013	8,940	7,772	3,759	기본부담금 부과요율 변경에 따른 증가 (0.027%(' 16년) → 0.047%(' 17년))

○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7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7,77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100	7,772	「약사법」 제86조의2

□ 법정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구제	「약사법」 86조

□ 사용명세

○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단위 : 억원)

수 입			지 출		
항 목	'16실적	'17실적	항 목	'16실적	'17실적
계	40.1	77.7	계	14.3	14.3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부담금	40.1	77.7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급여	14.3	14.3

*자료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 종합 평가결과

□ 존치

-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제약사 또는 수입업체가 민형사상 보상 및 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 대부분은 입증능력이나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시민이므로 이들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부담금(준조세)을 통해 우선적으로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음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구제 목적인 부담금의 규범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2015년도부터 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그에 따른 피해구제 지출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지속적 존치가 필요함
- 피해구제는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되고 있음. 피해구제 부담금은 약사법령에 따른 피해구제 지급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3. 항목별 평가

가. 부담금 부과 타당성 검토

-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구제를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로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징수함
- ☐ 「약사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2015년도부터 부담금 부과·징수가 실시되었고, 2014년 이전에는 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이 없음
- ☐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 구제 목적인 부담금의 규범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2015년도부터 부담금의 부과·징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부담금의 지속적 존치가 필요함
 - 2015년도부터 부담금 징수를 시작하여 최초년도에는 2,497백만원, 2016년 4,013백만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7,772백만원을 징수하였음
 - 국내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도 1989~2011년 202,998건, 2013년 183,260건, 2015년 198,037건, 2017년 252,611건 등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여서 본 부담금의 존치 타당성은 인정됨

< 의약품 부작용보고 건수 >

(단위 : 건)

연 도	1989~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건 수	202,998	92,375	183,260	183,554	198,037	228,939	252,61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내부자료(2018.7)

- 일본, 스웨덴, 대만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의약품 부작용피해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과 대만의 사례

- 일본은 1980년, 대만은 1999년부터 국가차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여 제약사와 수입업자로부터 의무적으로 부담금을 받아 운영
- 일본과 대만 모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일본: 출하액 기준, 대만: 영업 순이익 기준), 약화사고를 일으킨 의약품에 대해 추가 부담

나. 부담금 사용용도의 적정성 검토

□ 피해 유형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4종으로 나누어 지급

- 의약품 부작용에 기인한 사망, 장애 및 기타 증상·질환 진료에의 부담금 사용은 적정하며, 약사법령에 따른 피해구제 지급 기준 및 범위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음
- 일본, 대만 등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부담금 사용용도 역시 사망, 장애, 장례, 진료비 등에 대하여 부담금을 사용하고 있음

□ 구체적 사용용도

- 사망일시보상금
 - 월평균 최저임금의 5년치
-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1급 : 사망보상금의 100%
 - 2급 : 사망보상금의 75%
 - 3급 : 사망보상금의 50%
 - 4급 : 사망보상금의 25%
- 장례비
 -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평균임금의 3개월치
- 진료비

-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
- 지급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금액(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범위 내. 단, 영수증 중 비급여(선택진료비 등) 항목의 금액제외
-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연간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
※ 2017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 분위별 기준 : 1분위 122만원 ~ 10분위 514만원

다. 부담금 부과기준의 적절성 검토

- ☐ 「약사법」 86조 2항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의해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산정기준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구성
 - 현재 기본부담금 부과요율은 최근 빠르게 증가하는 의약품 부작용 건수를 고려할 때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라. 부담금의 감면·면제조항의 적정성 검토

- ☐ 감면 및 면제에 관한 관련 법령 없음
 - 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 절차, 이의신청 등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부담금의 감면 및 면제 관련 조항은 없음

마. 유사한 부담금의 통합운영 가능성 검토

- ☐ 해당 없음

바. 법률 규정화, 권리구제절차 등 여부

☐ 부담금의 부과근거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부과근거, 부과·징수 및 납부 관련 서식을 정하고 있음

구 분	근거 법령	규정내용 요약
1. 법 률	「약사법」 제86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함
2.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부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절차, 이의신청,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시행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담금 납부고지서, 분할납부 신청서 등 부담금 부과 및 납부 관련 서식을 정함

- ☐ 「부담금관리 기본법」 5조 4항에 따라 요구되는 권리구제절차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2조에 이의신청 처리 및 환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음